



THE FRENCH REPUBLIC 

프랑스 개황

2018. 9



프랑스 국기



국기 해설

- 청색(자유), 백색(평등), 적색(박애)
- 프랑스 혁명 당시 파리시의 상징색인 청색과 적색에 왕실의 상징색인 백색을 더한 국민병(Garde Nationale) 모자 휘장(Cocarde)에서 유래

프랑스 지도



Carte des régions de France

www.CartesFrance.fr

프랑스 개관

가. 일반

국명	프랑스(La République française, The French Republic)
영토	본토(Métropole), 해외 영토(Outre-Mer)
수도	파리(서울의 1/6)
면적	675,417km ² (해외 영토 포함, 한반도의 3.1배)
기후	대부분의 지역이 서안 해양성 기후이나, 동부 지역은 대륙성 기후, 남부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행정구역	Région(18개), Département(101개), Commune(35,357개)
인구	6,718만 명 (2018.1.1 기준) 파리 및 수도권 인구 : 1,208만 명 (파리 222만 명)
종교	헌법상 세속주의 / 기독교(가톨릭·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
언어	프랑스어
민족 구성	켈트족·프랑크족 등
교육	중·고등학교(6~16세)까지 의무교육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우리나라와의 시차	우리나라보다 8시간 느림 (서머타임 7시간)
언론	신문 : Le Figaro, Le Monde, Libération, Le Parisien 등 방송 : TF1(민영), France2(공영), Arte, M6, Canal Plus 등 통신 : AFP

나. 정치

정치 체제	공화국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혼합형
국가원수	에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2017.5월 당선, 임기 5년)
총 리	에두아르 필립(Edouard Philippe)
의 회	양원제 • 상원 : 348명 (간선, 임기 6년) • 하원 : 577명 (직선, 임기 5년)
외교장관	장-이브 르 드리앙(Jean-Yves Le Drian)
주요 정당	전진하는 공화국(LREM), 공화당(Les Républicains), 사회당(PS),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France Insoumise),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 등
국경일	7월 14일(1789년 대혁명 당시 바스티유 감옥 습격일)
헌 법	1958.9.28 채택, 같은 해 10.4 발효

다. 경제(2017)

국내총생산(GDP)	총 GDP : 2조 5,836억 달러(잠정), 1인당 GDP : 39,869달러
1인당 GDP	38,128달러
교역 규모	수출 : 5,350억 달러, 수입 6,240억 달러
GDP 성장률	2.3%
실업률 (청년실업률)	9.4% (22.3%)
물가상승률	2%
화폐 단위	유로(Euro)

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86년 6월 4일 한·불 우호통상조약 체결로 외교 관계 수립 • 을사조약 체결로 1905년 외교 관계 중단 • 1949년 2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재수교
교역 현황 (2017 우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29.7억 달러 (승용차, 축전지, 석유제품 등) • 수입 57.5억 달러 (화장품, 의약품, 가방, 원동기 등)
투자 현황 (2017년 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한국 투자 : 77.4억 달러 • 對프랑스 투자 : 25.3억 달러
최근 정상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 (국빈 방문) • 2000년 10월 자크 시락(Jacques Chirac) 대통령 (ASEM 계기) •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공식 방문) • 2010년 11월 니콜라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 (G20 계기) • 2011년 5월 이명박 대통령 (공식 방문) • 2011년 11월 이명박 대통령 (G20 계기) •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공식 방문) • 2015년 11월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 (국빈방한, 한·불 상호 교류의 해 계기) • 2015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COP21 계기) • 2016년 6월 박근혜 대통령 (국빈 방문)
재불 한인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6,000명 (2017)
프랑스-북한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수교 - 1968년 9월 주불 북한 민간무역대표부 설치 - 1976년 6월 주불 북한 민간무역대표부를 통상대표부로 격상 - 1976년 11월 주불 UNESCO 대표부 설치 - 1984년 12월 주불 북한 통상대표부를 일반대표부로 격상 - 1991년 2월 주불 일반대표부와 UNESCO 대표부 통합 - 2011년 10월 주북 프랑스 협력사무소 개설

CONTENTS

PART 1

주요 역사

- 1. 고대 12
- 2. 중세 12
- 3. 근세 14
- 4. 대혁명~제2차 세계대전 14
-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

PART 2

정 치

- 1. 정부 형태 30
- 2. 대통령 31
- 3. 행정부 33
- 4. 의 회 37
- 5. 사법부 41
- 6. 주요 정당 45
- 7. 기타 주요 기관 49
- 8. 지방 행정 50

PART 3

외 교

- 1. 프랑스 외교정책 연혁 56
- 2. 현 정부 주요 외교정책 59

PART 4

경제

1. 경제 동향	70
2. 마크롱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73
3. 통상 정책	75
4. 산업 정책	80
5. 에너지 정책	82
6. 과학기술 정책	86
7. 농업 정책	87

PART 5

국방

1. 국방 정책	92
2. 방위산업 동향	95
3. 프랑스군 개혁	97
4. 프랑스 참전협회 현황	99

PART 6

사회·문화·교육

1. 종교	102
2. 사회복지	102
3. 문화·예술	104
4. 언론 방송	109
5. 교육	112
6. 국민 생활	116

PART 7

치안

1. 치안 상황	120
2. 프랑스 치안 담당 조직 개요	120
3. 국립 경찰	121
4. 국립 군경찰	128
5. 자치경찰	130
6. 주요 치안 지표	132

PART 8

한국과의 관계

1. 연혁	136
2. 정부 관계	138
3. 경제 관계	148
4. 협정 체결 현황	150
5. 교민 현황	152
6. 기타 재불 주요 기관	154
7. 명예영사 현황	154
8. 군사 교류	155

PART 9

북한과의 관계

1. 개요	160
2. 공관 현황	161
3. 교류 현황	161
4. 프랑스의 대북 지원	162

PART 10

참고자료

1. 주요 인사 인적사항	164
2. 한·불 간 방문교류 현황	169

PART 1

주요 역사

1. 고대
2. 중세
3. 근세
4. 대혁명~제2차 세계대전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 고대

가. 골(Gaule)족의 정착

- 기원전 8세기경부터 인도-유럽계의 일파인 켈트족이 현재의 프랑스 영토에 이주, 원주민을 몰아내고 정착
- 로마인들은 이 지역을 갈리아(Gallia)라 부르고 정착한 켈트족을 갈리아(Gallia)족으로 호칭 (이후 갈리아는 프랑스어명 골(Gaule)로 변화)

나. 로마의 지배

- 남프랑스 해안 지역은 B.C. 121년 로마의 속령이 되었고, 나머지 골 지역은 B.C. 58~51년에 걸쳐 케사르가 로마에 복속
- 이후 골족의 라틴화가 추진되었고, 골족의 고유 문화에 로마 문화가 이식
- 이 시대에 골족에게 보급된 라틴어가 변형되어 프랑스어로 발전

2 중세

가. 프랑크(Frank) 왕국

1) 메로빙(Mérovingiens) 왕조(481~752)

- 4~5세기에 걸쳐 진행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시 프랑스 동북부는 프랑크족이, 서남부는 위시고트(Wisigoth)족이, 동남부는 버건디(Burgundy)족이 점령
- 481년 프랑크 부족 중의 하나인 메로빙가(Mérovingiens)의 클로비스가 프랑크 왕국을 건설한 이후 프랑크 왕국은 위시고트와 버건디족을 물리치고 세력을 확장, 골 지방의 대부분을 차지

- 이후 소수 지배 민족인 프랑크족과 다수 피지배 민족인 골족 간에 동화가 서서히 진행

2) 카롤링(Carolingiens) 왕조(752~987)

- 752년 카롤링가(Carolingiens)의 페펑(Pépin)이 프랑크 왕국의 왕으로 추대되어 카롤링 왕조가 수립
- 800년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가 골 지방 전체, 이탈리아 북부, 라인강 유역 일대에 걸치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이슬람교도의 유럽 침입을 막아내자 로마 교황 레오 3세는 샤를마뉴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칭호 부여
- 843년 샤를마뉴 대제의 손자 3형제가 베르딩 조약으로 3분한 프랑크제국 영토 중 샤를 2세가 차지한 서부 프랑크(Frank Occidentalis)가 프랑스의 모체
- 9세기 말 노르만족(바이킹)이 프랑스 북부 지역과 센 강 유역(현재의 노르망디 지방)에 침입, 정착

나. 중세 봉건 왕조

1) 카페(Capétiens) 왕조(987~1328)

- 987년 위그 카페(Hugues Capet)가 왕으로 추대되어 카페 왕조가 성립
- 전형적인 중세 봉건제도가 성립되면서 골족과 프랑크족 간의 동화 가속화
- 프랑크족이 게르만어를 버리고 피지배 민족의 언어인 프랑스어를 사용하게 되었으나, 프랑스어도 게르만어의 영향을 받아 변형

2) 발루아(Valois) 왕조(1328~1589)

- 1328년 필립 6세가 수립한 카페 왕가의 방계인 발루아 왕조는 영국과의 백년전쟁(1337~1453) 끝에 영국인들을 축출하는 데 성공했으나, 영국과의 전쟁 중인 1348~1360년 간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격감하고 국토가 황폐화
- 15세기 말부터 이탈리아로부터 르네상스 문화가 도입되어 16세기에 루아르강 유역을 중심으로 프랑스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한편, 1560~1598년에는 신교도와 구교도 간 8차에 걸쳐 종교전쟁

3 근 세

가. 부르봉(Bourbon) 왕조(1589~1792)

- 앙리 4세에 의하여 1589년 수립된 부르봉 왕조는 초기에는 왕권이 미약하였으나 제후들과의 오랜 투쟁을 통하여 지배권을 확보함에 따라 루이 13세, 루이 14세 시대에 절대주의 왕권의 절정을 이루고 루이 14세(재위: 1643~1715)는 '태양왕'으로 명명
- 루이 13세와 루이 14세에 걸친 30년 전쟁(1618~1648)을 통하여 부르봉 왕가는 신성 로마제국의 합스부르크 왕가와 대륙 패권 경쟁을 벌이는 반면, 루이 14세는 수차례의 전쟁을 통하여 유럽 대륙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해외 식민지 개척에도 힘을 기울여 신대륙에 루이지애나, 캐나다, 안틸레스 등 방대한 해외령을 확보하고 인도에도 식민지 개척의 거점을 확보
- 17세기 후반에는 라틴 문화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영향에서 탈피, 독자적인 프랑스 고전주의 문화를 꽃피워 몰리에르, 코르네이유, 라신 등 문호와 파스칼, 데카르트를 비롯한 철학자들이 배출되었고, 프랑스어 문법과 프랑스 고유의 법 체계가 정비되기 시작

4 대혁명~제2차 세계대전

가. 대혁명

1) 혁명의 발발

- 루이 14세 때 절정에 달했던 부르봉 왕조는 루이 15세(재위: 1715~1774)에 걸쳐 점차 약화된 반면, 상업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부르주아 계급이 새로운 세력으로 대두
- 한편 볼테르, 몽테스키외, 루소 및 백과사전파에 의해 확산된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자유주의·평등주의 사상이 확산되어 귀족·성직자 등 특권층에 대한 피지배 평민 계층의 비판의식이 높아지고, 부패한 왕실에 대한 시민의 불만 고조

- 프랑스는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등과 연합해 영국과 프로이센 등과 충돌한 7년 전쟁(1756~1763)에서 패배하면서 대부분의 해외 식민지를 상실
- 프랑스는 미국 독립전쟁(1775~1783)에서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지원, 미국 독립혁명에 기여했으나 재정난에 봉착
- 1789년 5월 5일 루이 16세가 재정난 해결을 위하여 소집한 3부회에서 평민 대표들은 봉건 특권 폐지, 평등과세 등 개혁을 주장하다가 관철되지 않자 1789년 6월 17일 평민 대표들만으로 구성된 국민의회를 선포하였고, 1789년 7월 9일 귀족 및 성직자 계급의 참여 하에 제헌의회를 구성, 헌법 제정을 추진
-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군이 정치범 수용소인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함으로써 프랑스 혁명 발발
- 1789년 8월 26일 인권선언 선포

2) 제1공화국

- 혁명 초기에는 라파예트, 미라보, 바일리, 시에에스 등 입헌군주파가 주도권을 장악, 1791년 10월 1일 헌법을 채택하고 입헌군주제를 채택
- 1791년 6월 루이 16세가 국외 탈출을 시도했다 실패했으나 오스트리아 및 프로이센의 압력으로 재위를 유지하고 반혁명 반란이 발생하며 갈등이 고조되자, 1792년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및 프로이센과 전쟁을 개시
- 1792년 9월 프랑스군의 승리를 계기로 1792년 9월 21일 왕정 폐지를 선포하고 공화국을 수립한 후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를 처형
- 루이 16세 처형 이후 국내외 반혁명 세력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1793년 초부터 하층민의 지지를 얻은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 등을 주축으로 반혁명 혐의자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감행, 공포정치를 실시. 1794년 6월 프랑스군이 반혁명연합군을 벨기에에서 격파하며 공화국은 위기에서 벗어났고 1794년 7월 국민공회가 로베스피에르를 체포, 처형함으로써 공포정치가 종식

3) 혁명의 중단

- 1795년 9월 23일 수립된 5인 집정관 체제(Consulat : 프랑스 혁명 이후 의회에서 선출된 5명의 집정관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체제로 약 5년간 지속됨)는 구심점 없이 약화되어 재정난에 부딪치게 되고, 왕당파를 비롯한 반혁명 세력의 도전이 강화됨.

- 왕당파의 반란 진압의 공을 인정받아 20대에 사단장에 오른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원정으로 인기가 높아지자, 집정관들이 이집트에 배치. 그 후 영국 해군에게 프랑스 함대가 괴멸되어 프랑스 원정군이 고립되자 나폴레옹은 정부의 명령 없이 귀국, 1799년 12월 13일 30세의 나이에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 나폴레옹은 3인의 집정관(Consul)으로 구성되는 집정관 체제를 수립, 제1집정관으로서 실권을 장악하고, 1800년 이탈리아 원정에 성공하여 권력을 안정화시킴. 나폴레옹은 1802년 영국과 아미앵 조약을 체결하고 영국과의 긴장이 완화되자 식민지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1803년 북미 루이지애나 식민지를 미국에 매각

나. 제1제정(1804~1814)

- 국내적으로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나폴레옹이 1804년 5월 18일 황제로 즉위함으로써 대혁명은 중단
- 나폴레옹은 근대 민법전(일명 '나폴레옹 법전') 제정, 근대적인 행정·사법·교육·군사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피정복지에 근대적 제도를 확산하여 프랑스 혁명 정신을 구현하는 데 기여
- 영국·러시아·오스트리아·프로이센 등이 연합해 나폴레옹에게 대항했으나, 나폴레옹의 연속적인 승리로 인하여 유럽 대륙의 대부분이 나폴레옹 제국의 직접 통치 아래 들어가거나 나폴레옹의 헤게모니 하에 복속
- 나폴레옹은 반나폴레옹 연합의 주축인 영국 정복을 시도하였으나, 1805년 10월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에 패하였고, 경제적 압박으로 영국을 굴복시키고자 1806년 11월 베를린 칙령과 1807년 11월 밀라노 칙령으로 유럽 대륙과 영국의 교역을 금지하는 대륙봉쇄령을 발표하였으나, 효과 없이 실패
- 나폴레옹은 1812년 6~11월에 걸친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1813년 10월 라이프치히에서 프로이센·오스트리아·영국 연합군에게 패하여 1814년 4월 퇴위하고 지중해의 엘바 섬(Elba Island)에 유배
- 이후 엘바 섬을 탈출하여 재집권하였으나 1815년 6월 워털루(Waterloo)에서 영국·프로이센 연합군에게 패하여 1815년 6월 22일 재차 퇴위함으로써 나폴레옹의 복위는 100일 천하로 끝나고 제1제정 종료

다. 부르봉 왕정 복고(1814~1830)

- 나폴레옹 퇴진의 중심 세력인 영국·러시아·오스트리아·프로이센 등 군주국가의 영향으로 부르봉 왕가의 루이 18세가 1814년 6월에 즉위하여(100일 천하 중 망명)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고, 1824년 샤를 10세가 즉위

라. 7월 왕정(1830~1848)

- 1830년 7월 혁명의 발발로 샤를 10세가 퇴위하고, 부르봉 왕조는 몰락하였으며, 부르봉 왕가의 방계인 오를레앙 왕가의 진보적 인물인 루이-필립이 프랑스 국민의 왕으로 즉위

마. 제2공화국(1848~1852)

- 1848년 2월 혁명이 발발하여 루이-필립이 퇴위한 후 공화국이 선포되었고, 1848년 12월 나폴레옹 1세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제2공화국 수립
- 샤를 10세가 퇴위 직전 출병하여 점령한 알제리에 제2공화국 초기 3개 데파르트망(Département :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도(道)에 해당) 설치

바. 제2제정(1852~1870)

- 루이 나폴레옹이 1852년 12월 황제(나폴레옹 3세)로 즉위
- 제2제정 시기 프랑스에서는 국내적으로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오늘날 파리의 건설이 시작되는 등 경제·사회·문화 면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고, 대외적으로도 크림전쟁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고 인도차이나·중국에 진출
- 나폴레옹 3세는 이탈리아 통일을 지지하고 니스와 알프스의 사보이 지역 영토를 획득하였으나, 프로이센의 부상을 방지하다 영국이 중립을 지킨 상황에서 1870년 프로이센과의 전쟁(보불전쟁)에서 개시 2개월 만에 포로로 잡히면서 제2제정 붕괴

사. 제3공화국(1870~1940)

- 나폴레옹 3세의 몰락 후 왕당파와 공화파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1875년까지 과도체제가 유지되다가 1875년 의회 우위의 대통령제 공화정이 수립됨으로써 프랑스는 100년에 걸친 단속적인 혁명 끝에 공화제로 정착

- 프랑스 제3공화국은 보불전쟁 패전에도 불구하고 독일 비스마르크의 용인 아래 기존 식민지를 유지하였으며, 북서아프리카·마다가스카르·베트남 등지에서 식민지 팽창 정책을 추진, 영국과 충돌 위기에 이르렀지만 프랑스가 이집트에서 후퇴하면서 진정되었음. 비스마르크 실각 이후 독일이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서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독일에 대해 러시아와 동맹
-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에서 프랑스는 초기에 수세에 몰려 독일군이 파리 근교까지 진격하였으나 러시아군이 독일 동부로 파고드는 가운데, 프랑스군의 반격이 성공하면서 전선이 교착되었음. 대전 후반기에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따른 미국의 참전 속에서 프랑스가 대독 연합군의 주축이 되어 전세를 역전시키고, 포슈(Foch) 원수가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1918년 11월 11일 對독 휴전협정을 체결
- 프랑스는 1차 대전에서 승전했으나 전쟁으로 막대한 인적·재정적 손실을 입어 사회적으로 반전(反戰) 기류가 일반화되고 재정난이 고질화
- 1930년대 대공황의 위기 속에 1934년 극우파 쿠데타 기도와 1936년 좌파연합 인민전선 정부의 수립 및 1938년 공산당 탈퇴에 따른 붕괴 등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치 독일은 재무장과 팽창 지속
-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전쟁을 선포, 제2차 대전이 시작되었으며, 소련과 비밀협정을 맺은 독일이 1940년 5월 10일 중립국인 벨기에·네덜란드를 통해 프랑스를 공격하여 방어선이 무너지고 6월 10일 이탈리아가 참전하자 폴 레노(Paul Reynaud) 총리가 사퇴하며 6월 22일 휴전 성립
- 독일군 점령 지역 이외의 프랑스 본토에 나치 점령군의 괴뢰정권인 비시 정권이 페탱(Pétain) 장군의 지휘 하에 수립(1940~1944)되었으나, 드골 장군이 수립한 망명정부가 연합국에 의하여 승인되고 프랑스 식민지와 본토의 레지스탕스를 규합하면서, 종전 후 프랑스는 전승국의 대열에 가담
- 1940년 독일군의 프랑스 점령과 비시 정부의 수립으로 제3공화국은 사실상 1940년 종료하였으나, 법적으로는 제3공화국 헌법이 1945년 10월까지 존속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 제4공화국(1946~1958)

- 1945년 10월 21일 국민투표에 의해 제3공화국 헌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1945년 11월 2일 드골 장군이 드골주의자·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로 구성된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취임하였으나, 좌파와의 대립으로 1946년 1월 사임하고, 1946년 10월 27일 의원 내각제 형태의 제4공화국 수립
- 전후 물자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제4공화국은 미국의 마셜 플랜(Marshall Plan : 유럽부흥계획, European Recovery Program) 등 우호적인 전후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 사회 안정을 달성하고 고성장이 지속 (1945~1975년을 '영광의 30년(Trente Glorieuses)'이라고 통칭)
- 그러나 제4공화국에서는 서로 이질적인 정당의 연립으로 구성된 정부의 잦은 붕괴로 정국 혼란이 지속됨. 1954년 베트남 디엔 비엔 푸 전투 패배, 1956년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 저지 좌절 이후 1958년 5월 알제리 민족해방전선과 협상하려는 정부에 반발하는 알제리 주둔 군부의 쿠데타 조짐으로 정국이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드골 장군에게 사태 수습을 위촉하였고, 드골 장군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함으로써 제4공화국 종료

나. 제5공화국(1958~현재)

1)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1958~1969)

- 1958년 9월 28일 국민투표를 통하여 제5공화국 헌법이 채택되고, 1958년 10월 4일 헌법이 공포되었으며, 1959년 1월 8일 드골이 대통령에 취임
- 제5공화국 헌법에 의거, 막강한 권한을 장악한 드골 대통령은 1962년 알제리에 독립을 부여하고 이에 반발하는 쿠데타 시도를 진압하였으며, 동년 10월 28일 국민투표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한 후 1965년 12월 19일 직선 대통령에 당선
- 드골 대통령은 제국의 해체와 탈식민화, 미소 냉전의 현실 속에서 독립(Independence)과 위용(Grandeur)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프랑스의 위상을 되찾고자 ①국가와 체제의 수호자로서의 대통령상 구현, ②독자적 핵억지력 구축과 NATO 지휘 체계 탈퇴 등

군사적 독자노선, ③프-독 관계 개선과 유럽 국가 간 협력 추진, ④구 식민지 국가와 새로운 우호관계 구축 등 정책을 추진

- 또한 경제적으로 국가주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복지국가 유지라는 기조 하에 프랑화의 국제 태환화 및 상품시장 관세화, 유럽공동시장 가입 등 대외개방 조치를 단행
- 알제리 사태 수습 후 안정되었던 정정은 1968년 대대적인 학생 시위와 총파업 사태로 난국을 맞았으며, 1969년 4월 드골 대통령은 지방행정 개혁과 상원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1969년 4월 28일 하야

2)蓬피두(Georges Pompidou) 대통령(1969~1974)

- 1969년 5월 16일蓬피두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드골 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호응코자 노력

3)지스카르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 대통령(1974~1981)

- 1974년 4월 2일蓬피두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1974년 5월 1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우파인 독립공화당의 지스카르 데스탱이 사회당의 미테랑 후보를 누르고 당선

4)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대통령(1981~1995)

- 1981년 5월 10일 대통령선거에서 사회당의 미테랑 후보가 지스카르 데스탱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미테랑 대통령은 취임 후 곧 하원을 해산, 총선을 실시하여 원내 안정 의석 확보

가)모르와(Pierre Mauroy) 내각(1981~1984)

- 사회당 집권 초기 모르와 내각은 주요 산업 국유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및 연 5주 휴가 채택 등 좌파적 정책을 수행하여 복지 부문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이로 인해 경제사정이 악화, 프랑화 평가절하 단행
-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지표 악화가 지속되자, 1983년 모르와 내각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재정긴축으로 방향 전환

나) 파비우스(Laurent Fabius) 내각(1984~1986)

- 공산당의 연정 탈퇴 후 구성된 파비우스 내각은 긴축 및 능률 위주의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 경제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좌파 지지층의 이반으로 사회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약화
- 미테랑 대통령은 1984년 헬무트 콜(Helmut Kohl) 서독 총리와 국경 철폐 등 유럽통합의 새로운 어젠다에 합의, 유럽 내 인력·물품·자본·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한 유럽단일의정서 추진으로 결실

다) 시락(Jacques Chirac) 내각(제1차 동거정부 : 1986~1988)

- 1986년 3월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승리하자, 미테랑 대통령은 공화국연합(RPR)의 시락 당수를 총리로 지명, 좌·우파 동거정부(Cohabitation) 체제가 수립
- 시락 내각은 외교정책에서는 1986년 유럽단일의정서 비준 등 미테랑 대통령의 기존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주요 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우파적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학생 시위 등 도전에 직면, 시락 총리 인기 하락

라) 로카르(Michel Rocard) 내각(1988~1991)

- 1988년 5월 8일 대통령 선거에서 미테랑 대통령이 시락 후보를 누르고 재선되었으며, 6월 5~12일 사회당은 하원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으나(과반수 289석에 13석 모자라는 276석), 사회당 단독 내각을 구성, 중도좌파 정책 추진

마) 크레송(Edith Cresson) 내각(최초의 여성 총리, 1991~1992)

- 로카르 총리가 사임하고 1991년 5월 15일 크레송 총리가 프랑스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하였으나, 1992년 3월 지방선거의 참패 여파로 1992년 4월 3일 사임

바) 베레고부와(Pierre Bérégovoy) 내각(1992~1993)

- 1992년 4월 3일 베레고부와 총리가 취임했으나 1년 뒤 1993년 3월 21~28일 실시된 하원 총선에서 사회당이 참패함에 따라 3월 29일 사임

사) 발라뒤르(Edouard Balladur) 내각(제2차 동거정부 : 1993~1995)

- 1993년 3월 하원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압승함에 따라 미테랑 대통령은 RPR 소속 발라뒤르를 총리로 지명, 제2차 동거정부 체제 성립
- 발라뒤르 총리는 우파연정을 구성하고 경제재건과 실업구제에 역점을 둔 정책 추진

아) 미테랑 대통령 2기 때 유럽통합

- 탈냉전과 독일 통일의 격변 속에서 미테랑 대통령은 유럽통합을 적극 추진, 유럽 연합을 설립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1991년 12월 타결되고 1992년 9월 프랑스는 국민투표를 거쳐 동 조약을 비준

5) 시락(Jacques Chirac) 대통령(1995~2007)

가) 알랭 쥐페(Alain Juppé) 내각(1995.5월~1997.5월)

- 1995년 4월 23일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발라뒤르 후보가 탈락하고 우파 시락 후보와 조스팽 사회당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고 1995년 5월 7일 2차 투표에서 시락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14년간 계속된 좌파 대통령 시대 종료
- 1995년 5월 18일 쥐페를 총리로 구성된 범우파 내각은 유럽 단일통화체제 참여 기준에 맞추기 위한 재정적자의 축소를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전국적인 파업 등 일반국민들의 반발이 심화되며 정치적 위기 발생
- 1997년 4월 21일 시락 대통령은 하원 해산을 발표하고, 1998년 3월로 예정된 하원 총선을 앞당겨 1997년 5월 21일 실시했으나, 좌파연합이 총의석 577석 중 과반수가 넘는 314석을 차지함으로써 동거정부 체제 시작

나) 조스팽(Lionel Jospin) 내각(제3차 동거정부 : 1997.6월~2002.5월)

- 1997년 6월 총선에서 좌파의 승리로 사회당 당수인 조스팽이 총리로 입각하여, 시락 대통령과 조스팽 총리가 이끄는 좌·우파 동거정부 탄생
- 동거정부 하의 조스팽 총리는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하는 한편, 실업난 해소, 주요 국영기업 민영화 중단, 유럽 단일통화체제 정시 출범을 위한 긴축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다) 라파랭(Jean-Pierre Raffarin) 내각(2002.5월~2005.5월)

- 2002년 4월 21일 대선 1차 투표에서 좌파 조스팽 후보는 16.18% 득표로 우파 시락 후보와 극우파 르펜(Le Pen) 후보에 뒤져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 최초로 극우 후보가 대선 결선투표에 진출
- 2002년 5월 5일 대선 2차 투표에서 시락 후보는 82%라는 사상 최고의 지지율로 르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2002년 5월 6일 라파랭 상원의원을 총리에 임명

- 시락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UMP(여당대선연합 : Union pour la Majorité Présidentielle)을 결성, 2002년 6월 총선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 우파정권 수립
※ 2002년 11월 정당 명칭을 대중운동연합(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으로 수정
- 라파랭 총리는 치안강화, 지방분권화, 공공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주요 국영기업 사유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 2003년 폭염 피해, 실업률 증가, 개선되지 않는 경제 사정,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반발로 인해 라파랭 총리와 시락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
- 라파랭 정부는 2004년 3월 지방선거, 6월 유럽의회에서 집권여당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공공 분야 개혁을 지속 추진했으나, 2005년 5월 29일 프랑스가 주도한 유럽 헌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라파랭 총리 사임

라) 드 빌팽(Dominique De Villepin) 내각(2005.5월~2007.5월)

- 시락 대통령은 선출직 경험이 없는 관료 출신 드 빌팽 내무장관을 2005년 5월 총리로 임명하여 1995년 대선 때 자신의 경쟁자인 발라뒤르 후보를 지지한 여당 당수 사르코지를 견제하려 하였으나, 사르코지 당수가 당내 경쟁에서 승리, 2007년 1월 14일 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확정

6)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 (2007.5.16~2012.5.15)

가) 사르코지 대통령 당선 및 대중운동연합(UMP: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의 총선 승리

- 사회 전반적인 개혁,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프랑스 정체성 회복을 표방한 대중운동연합(UMP)의 사르코지 후보가 2007년 5월 대선에서 53%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
 -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Ségolène Royal) 후보는 중도파 프랑수아 바이루(François Bayrou) 후보와 정치적 연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反사르코지 정서도 결집하지 못한 반면, 사르코지 후보는 극우파를 대거 흡수하고 중도우파인 프랑스민주동맹(UDF) 의원 총 29명 중 23명의 지지를 확보하여 우파 전체를 포괄

나) 피용(François Fillon) 1기 내각(2007.5.17~2007.6.18)

- 사르코지 대통령은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수행할 총리로 프랑수아 피용을 임명
 - 피용 1기 내각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통합정부 구성 의지를 반영하여 좌파 계열 인사 4명, 중도파 1명을 포함하였으며 장관 15명 중 7명을 여성으로 영입하고 모로코 및 세네갈 이민자 출신 각료를 기용

다) 피용(François Fillon) 2기 내각(2007.6.18~2010.11.13)

- 2007년 6월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 개혁 추진을 위한 정치적 기반 마련, 일부 장관 인사 교체, 국무장관 신설
-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헌법개정, 35시간 근무제 탄력 조정, 조세감면, 연금 개혁, 치안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 정책을 전개하여 집권 초 높은 지지율 유지
- 그러나 국정수행 방식에 대한 반발, 실업률 증가 등으로 사르코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점차 하락
- 2008년 이후 세계 금융·경제위기에 대응한 개혁 정책에 대한 이견 등으로 2009년 1월 29일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파업 사태
- 2010년 3월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 좌파연합이 54%의 지지를 받아 승리(우파 및 중도파가 36%의 낮은 지지율 획득)
- 사르코지 대통령은 선거 패배 결과를 반영, 시락파, 중도파, 빌팽 前 총리 측근 등을 기용, 우파 내 단합을 도모하는 소폭의 상징적인 개각을 단행한 후, 2010년 여름 루마니아·불가리아계 집시 추방 등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야당·노동조합·학생들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 가운데 2010년 11월 연금개혁을 강행

라) 피용(François Fillon) 3기 내각(2010.11.14~2012.5.10)

- 연금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후인 2010년 11월 14일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감안, 개혁 조치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여권 내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절반 이상의 각료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여 피용 총리 3기 내각 출범
- 사르코지 대통령은 임기 말 경제위기·실업률 상승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2011년 프랑스의 G8 및 G20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 2011년 3월 19일 리비아 NATO 작전 주도, 2011년 9월 1일 파리에서 리비아 국제회의 개최, 그리스 채무위기에 따른 유로존 위기 대응을 위한 유로 정상회의의 주도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 수행
- 2011년 9월 25일 실시된 상원의원 선거 결과, 좌파측이 상원 과반 획득

7)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2012.5.15~2017.5.14)

- 2011년 10월 사회당은 대선후보 국민참여 경선을 개최, 올랑드(François Hollande) 의원(前 사회당 총재)을 대선후보로 선출

- 유로존 위기, 높은 실업률, 최악의 경상수지 적자 등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에 대한 불만, 사르코지 대통령의 집권 방식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해 2012년 5월 대선에서 보통 대통령과 경기부양을 표방한 사회당 올랑드 후보가 51.6%의 지지율을 획득, 대통령에 당선되어 17년 만의 정권교체

가) 에호(Jean-Marc Ayrault) 1기 내각(2012.5.16~2012.6.18)

- 올랑드 대통령은 사회당 하원 원내대표였던 장-마크 에호(Jean-Marc Ayrault)를 총리로 임명하고 사회당·진보좌파·환경당 출신 각료로 구성된 에호 1기 내각 출범

나) 에호(Jean-Marc Ayrault) 2기 내각(2012.6.21~2014.3.31)

- 2012년 6월 17일 실시된 하원 선거에서 사회당연합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승리
- 올랑드 대통령은 2014년 초 지속되는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표방하고, 경제 회복 및 사회 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하였으나 노동자 계층,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동부 지역 등이 극우 지지로 돌아서는 현상이 발생하며 지지율 하락

다) 발스(Manuel Valls) 1기 내각(2014.3.31~2014.8.25)

- 2014년 3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집권 사회당이 참패한 직후, 올랑드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성 협약’ 등 새로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 마누엘 발스(Manuel Valls) 내무장관을 3월 31일 신임 총리로 발탁
- 발스 총리 노선에 반대하는 녹색당은 정부 참여 거부

라) 발스(Manuel Valls) 2기 내각(2014.8.25~2016.2.10)

- 2014년 8월 아르노 몽뜨부르(Arnaud Montebourg) 경제장관 등이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올랑드 대통령은 경제장관에 마크롱 대통령 경제보좌관(現 대통령)을 임명하는 등 중요 직위에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젊은 인사들을 기용
- 2014년 3월 지방(기초단체) 선거, 2014년 5월 유럽의회 선거, 2014년 9월 상원 선거에 이어 2015년 3월 지방(광역)선거에서도 집권 사회당의 참패 및 극우파(국민전선)의 약진 추세 지속
 - ※ 올랑드 대통령 당선 이후 선거 결과
 - 2014년 4월 기초지방 선거 : 좌파 349개, 우파 572개, 극우 11개 승리
 - 2014년 5월 유럽의회 선거 : 국민전선 24석, UMP 20석, 사회당 13석
 - 2014년 9월 상원의원 선거(간선) : 좌파 126석, 우파 181석(과반수), 극우 사상 최초 상원 원내 진출(2석)
 - 2015년 12월 광역지방선거 : 우파 7개지역, 좌파 5개 지역 승리(극우 1차 투표에서 6개 지역에서 1위)

- 크리스티안느 토비라(Christiane Taubira) 법무장관은 2015년 11월 파리 연쇄테러사건 이후 올랑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국적 박탈 등이 포함된 헌법개정안에 반대하여 사임

마) 발스(Manuel Valls) 3기 내각(2016.2.11~2016.12.6)

- 올랑드 정부는 2월 11일 정부 개각을 통해 전임 총리 장-마크 에호를 외교장관으로 기용하고 녹색당 소속 인사를 내각에 기용하여 정권의 입지 강화를 위해 노력
-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동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2015년 1월 샤를리 엡도 테러, 2015년 11월 파리 테러에 이어 2016년 7월 니스 테러 및 성당 테러 등 이슬람 급진주의자의 거듭된 테러에 직면, 국적 박탈 헌법 개정 추진 등 좌파에서 금기시되는 정책도 포함 대응을 추진했으나, 좌파 지지층 이반 현상으로 10% 미만 지지율을 기록하다 제5공화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재선 포기 선언

바) 카즈네브(Bernard Cazeneuve) 내각(2016.12.6~2017.5.10)

- 발스 총리의 사퇴로 6개월이라는 짧은 임기를 예정하고 취임한 카즈네브 총리는 올랑드 정권의 경제 및 환경 분야 성과를 부각시키며,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

8)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 (2017.5.14~현재)

- 올랑드 정부에서 경제장관을 역임했던 마크롱은 개혁을 기치로 하는 ‘진진(En Marche)’이라는 중도 독자노선을 구축, 2016년 8월 경제장관을 사임하고 대선에 도전
- 공화당 대선후보 국민경선에서 급진적 신자유주의 개혁과 동성애·이민 등 관련 보수주의를 표방한 프랑수아 피용(François Fillon) 후보가, 사회당 대선후보 국민경선에서 올랑드 대통령의 노동 개혁에 반대해 왔고 선명한 좌파 노선을 주장한 브누아 아몽(Benoit Hamon) 후보 승리
- 공화당 프랑수아 피용 후보의 비리 스캔들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올랑드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지지한 사회당 주류가 급진좌파와의 연대에 치중한 아몽 후보를 외면하면서 젊고 혁신적 이미지로 중도 이념을 표방한 마크롱 후보에게 사회당·공화당 내 중도 성향 인사들이 결집
- 2017년 4월 대선 1차 투표에서 중도 마크롱 후보와 극우 마린 르펜 후보가 1, 2위를 차지하고 2017년 5월 대선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 후보가 극우파 마린 르펜 후보를 제치고 66.1%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

후보	마크롱 (중도)	르펜 (극우)	피용 (공화당)	멜랑송 (극좌)	아몽 (사회당)
득표율(%)	24.0	21.3	20.0	19.6	6.4

가) 필립(Edouard Philippe) 1기 내각(2017.5.15~2017.6.19)

- 마크롱 대통령은 공화당 에두아르 필립(Edouard Philippe)을 총리로 임명, 총 22명의 장관 및 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필립 1기 내각이 출범
- 필립 1기 내각의 인적 구성은 당적이 없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 사회당·공화당 정치인들이 참여, 연립 내지 거국내각의 성격

나) 필립(Edouard Philippe) 2기 내각(2017.6.21~현재)

- 2017년 6월 18일 실시된 하원 선거에서 '전진하는 공화국(LREM)'이 과반수를 차지 하며 승리하였으며, 1기 내각에서 비리 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장관 4명을 교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필립 2기 내각 출범
 -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 인사와 관료, 전문가 비중이 확대되어 하원 과반 획득에 따른 마크롱 대통령의 내각 장악력이 강화된 모습
- 2017년 9월 노동법 개정을 필두로 연금개혁, 세제개혁, 공공부문(국영철도공사(SNCF)) 개혁 등 사회 전반에서 각종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

PART 2

정치

1. 정부 형태
2. 대통령
3. 행정부
4. 의회
5. 사법부
6. 주요 정당
7. 기타 주요 기관
8. 지방 행정



1 정부 형태

-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입헌군주제로 잠시 복귀한 후, 1870년 제3공화국 수립 이후 공화국으로 정착하였으나 법체계의 통일성 결여와 정당 난립으로 불안정한 정국 지속
- 1958년 정치 불안과 다수 정당의 난립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전통을 유지하는 절충형인 제5공화국 헌법 채택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국방·내치에 걸치는 방대한 권한을 가지는 반면 의회의 불신임으로부터 면제되는 초월적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의 모든 공적 활동을 통치 행위로 간주하는 전통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 조직에 따른 인원 구성, 예산 책정, 회계 감사 등은 의회나 감사기관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
 - 총리는 정부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보유하는 행정부를 지휘하며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하원에 대하여 책임
- 입법부는 하원 우위의 양원제이나(하원은 일반적인 법률 제정 관련 최종 결정권을 가짐) 헌법이나 상원에 관한 국가조직법 개정에 관해 상원도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짐.
 - 대통령은 하원 해산권을 가지나 상원을 해산할 수 없음.
-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로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장을 겸하고, 고등사법 위원회는 대법관 및 고등법원장 임명을 제청하는 등 사법권에 관해서도 대통령은 상당한 권한 보유
- 1962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직선 대통령이 하원을 해산하고 하원선거에서 대통령 지지 세력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관행이 축적되고 2000년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하원 의원 임기와 같아지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중심으로 운영

2 대통령

가. 지위 및 책임

- 국가원수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계속성 및 공권력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며 프랑스의 독립 및 영토보존 책임

나. 임기 : 5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2000년 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 7년의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단축

제5공화국 역대 대통령

-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 1958~1969
- 조르주 폼피두(Georges Pompidou) : 1969~1974
- 지스카르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 : 1974~1981
-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 1981~1995
- 자크 시락(Jacques Chirac) : 1995~2007
-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 2007~2012
-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 2012~2017
-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 2017~현재

다. 선거

- 국민의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1차 투표에서 절대다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에 대해 결선투표한 후,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으로 당선
 - 상징적 정통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한다는 장점 보유
 - 대통령이 정파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조정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도록 국민적 정통성을 몰아주는 데 초점을 둔 제도

라. 피선거격

- 23세 이상의 완전한 공민권(참정권)을 가진 프랑스 국민
- 국민의 일부에 의해 선출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 상·하원 의원, 지방 의원 등으로부터 500명 이상 추천

마. 권한

- 총리임명권 및 각료임명권, 법률공포권 및 법률안 재심의 요구권, 하원해산권(총리 및 상·하원 의장과 협의 후 하원을 해산할 수 있으며(의회 해산 후 20~40일 사이에 총선 실시), 총선 후 1년 이내에는 의회 해산 불가), 국군통수권, 외교권, 사면권 등
- 긴급조치권
 - 국가제도, 독립, 영토보존 및 국제조약 이행이 중대하고도 급박하게 위협받거나 헌법상 공권력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때, 대통령은 총리, 상·하원 의장 그리고 헌법 위원회와의 공식 협의를 거친 후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취할 권한 보유
 - 1961년 4월 알제리 주둔 프랑스 군부 반란시 5개월 동안 발동
- 국민투표 부의권
 - 의회 회기 내 정부 제안 및 양원 공동 제안에 의거, 국가권력 조직, 공동체 협정의 승인 및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과 관련한 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 가능

국민투표 사례

시행 일자	안 건	투표율	찬성률
1958.9.28	헌법 개정	85%	79%
1961.1.8	자주권	76%	75%
1962.4.8	알제리 독립	75%	91%
1962.1.8	대통령 직선제 개헌	77%	61%
1969.4.27	지역 행정 및 상원 개혁	81%	47%
1972.4.23	유럽공동체 확장	60%	68%
1988.11.6	누벨 갈레도니 문제	37%	80%
1992.9.20	유럽 통합	70%	51%
2000.9.24	대통령 임기 개헌	70%	84%
2005.5.29	유럽 헌법	69%	45%

※ 국민투표 부결 사례 : 1969년 4월 상원 개혁안 부결로 드골 대통령 사임 / 2005년 5월 유럽헌법 부결로 당시 라파랭 총리 사임

바. 궐위

- 대통령의 유고 및 사망시(헌법위원회 결정) 상원의장이 대통령직 승계

사. 특권

- 대통령은 중대한 대역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책임에 대해 특별정치 재판소에 피소 불가

3 행정부

가. 총리

-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
- 의회에 대해 책임
- 총리는 정부를 총지휘하고, 국방 및 법률 집행에 대해 책임
- 내각을 조직하고 장관을 인선하여 대통령에게 제청
 - 프랑스는 정부 조직법이 별도로 없음.
- 대통령의 권한 행사시(긴급조치권 행사 등은 예외) 총리는 부서
- 정책 선언에 대한 승인을 하원에 요구할 권한 및 법률안 제출권 보유
- 의회는 총리의 직무상 모든 책임에 대하여 ‘특별정치재판소’에 피소 가능

5공화국 역대 대통령 및 총리

대통령	총 리	재임 기간
Charles de Gaulle	Michel Debré	1959. 1. 8 ~ 1962. 4.14
	Georges Pompidou	1962. 4.14 ~ 1968. 7.10
	Maurice Couve de Murville	1968. 7.10 ~ 1969. 6.16
Georges Pompidou	Jacques Chaban-Delmas	1969. 6.20 ~ 1972. 7. 2
	Pierre Messmer	1972. 7. 7 ~ 1974. 5.27
Valéry Giscard d'Estaing	Jacques Chirac	1974. 5.28 ~ 1976. 8.25
	Raymond Barre	1976. 8.27 ~ 1981. 5.13
François Mitterrand	Pierre Mauroy	1981. 5.22 ~ 1984. 7.19
	Laurent Fabius	1984. 7.23 ~ 1986. 3.20
	Jacques Chirac	1986. 3.20 ~ 1988. 4.30
	Michel Rocard	1988. 5.10 ~ 1991. 5.14
	Édith Cresson	1991. 5.15 ~ 1992. 3.31
	Pierre Bérégovoy	1992. 4. 2 ~ 1993. 3.28
	Édouard Balladur	1993. 3.29 ~ 1995. 5.16
Jacques Chirac	Alain Juppé	1995. 5.18 ~ 1997. 6. 2
	Lionel Jospin	1997. 6. 2 ~ 2002. 5. 6
	Jean-Pierre Raffarin	2002. 5. 6 ~ 2005. 5.31
	Dominique Galouzeau de Villepin	2005. 5.31 ~ 2007. 5.15
Nicolas Sarkozy	François Fillon	2007. 5.17 ~ 2012. 5.10
François Hollande	Jean-Marc Ayrault	2012. 5.15 ~ 2014. 3.31
	Manuel Valls	2014. 3.31 ~ 2016.12.6
	Bernard Cazeneuve	2016.12.6 ~ 2017.5.10
Emmanuel Macron	Edouard Philippe	2017. 5.14 ~ 현재

나. 각료

- 각료는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 대통령 및 총리의 권한 행사시 관계 장관은 부서
※ 대통령 권한 행사시에는 관계 장관 모두가 부서하나, 총리의 권한 행사시에는 집행부서 장관만 부서
- 총리를 포함한 모든 각료는 의원직 겸직 불가
※ 의원이 장관직 수임 시 출마 때 지정한 대리의원이 장관직 수임 기간에 의원직 수행

다. 정부 조직 (2018.9월 기준)

부처	성명	직책(국문)	직책(불문)
총리실	M. Christophe Castaner	의회관계담당 국무장관	Secrétaire d'Etat auprès du Premier ministre, chargé des Relations avec le Parlement
	M. Benjamin Griveaux	국무장관 겸 대변인	Secrétaire d'Etat auprès du Premier ministre, porte-parole du gouvernement
	Mme Marlène Schiappa	남녀균등담당 국무장관	Secrétaire d'Etat auprès du Premier ministre, chargée de l'égal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Mme Sophie Cluzel	장애인담당 국무장관	Secrétaire d'Etat auprès du Premier ministre, chargée des Personnes handicapées
	M. Mounir Mahjoubi	디지털담당 국무장관	Secrétaire d'Etat auprès du Premier ministre, chargé du Numérique
내무부	M. Gérard Collomb	부총리 겸 내무장관	Ministre d'Etat, ministre de l'Intérieur
	Mme Jacqueline Gourault	무임소(無任所) 장관	Ministre auprès du ministre de l'intérieur
환경연대부	M. François de Rugy	환경장관	Ministre d'Etat, minist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solidaire
	Mme Elisabeth Borne	교통담당 장관	Ministre auprès du ministre d'Etat, minist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chargée des Transports
	M. Sébastien Lecornu	무임소 국무장관	Secrétaire d'Etat auprès du minist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Mme Brune Poirson	무임소 국무장관	Secrétaire d'Etat auprès du minist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부처	성명	직책(국문)	직책(불문)
법무부	Mme Nicole Belloubet	법무장관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유럽외교부	M. Jean-Yves Le Drian	유럽외교장관	Minist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Mme Nathalie Loiseau	유럽담당 장관	Ministre auprès du minist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chargée Affaires européennes
	M. Jean Baptiste Lemoyne	무임소 국무장관	secrétaire d'Etat auprès du minist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국방부	Mme Florence Parly	국방장관	Ministre des Armées
	Mme Geneviève Darrieussecq	무임소 국무장관	Secrétaire d'Etat auprès du ministre des armées
국토통합부	M. Jacques Mézard	국토통합장관	Ministr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M. Julien Denormandie	무임소 국무장관	Secrétaire d'Etat auprès du ministre cohésion des territoires
보건연대부	Mme Agnès Buzyn	보건연대장관	Minist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재정경제부	M. Bruno Le Maire	재정경제장관	Minist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Mme Delphine Gény-Stephann	무임소 국무장관	Secrétaire d'Etat auprès du minist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문화부	Mme Françoise Nyssen	문화장관	Ministre de la Culture
노동부	Mme Murielle Pénicaud	노동장관	Ministre du Travail
교육부	M. Jean-Michel Blanquer	교육장관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농림식품부	M. Stéphane Travert	농림식품장관	Minist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공공회계 집행부	M. Gérald Darmanin	공공회계집행장관	Ministre de l'Action et des comptes publics
	M. Olivier Dussopt	공무담당 국무장관	Secrétaire d'Etat chargé de la Fonction publique

부처	성명	직책(국문)	직책(불문)
고등교육연구 혁신부	Mme Frédérique Vidal	고등교육연구혁신장관	Minist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Innovation
해외영토부	Mme Annick Girardin	해외영토장관	Ministre des Outre-Mers
체육부	Mme Laura Flessel	체육장관	Ministre des Sports

※ 프랑스는 정부 조직법이 별도로 없음.

4 의회

가. 개요

- 의회는 하원 중심의 양원제
- 법률 사항이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 제정이 가능하고, 국민 일반생활에 직결된 구체 사항은 대체로 행정명령으로 정하는 관행

나. 권한 및 의무

-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법률사항(Les règles fixées par la loi)에 대해 법률안 발의
 - 단, 의원 발의 법률안은 국가의 세입을 감소시키거나 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불가

법률사항(Les règles fixées par la loi)

- 시민의 권리 보장, 국적, 형사 문제, 세금, 화폐 등에 관한 사항
- 의회 선거제도, 공공기관 창설, 공무원 및 군인에 대한 보장, 국유화 및 사적 재산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 국방 조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재정, 행정, 교육, 사유권, 노동권, 사회보장 등의 근본 원칙
- 정부 예산법안
- 경제·사회 분야 정책 법안

- 법률안 의결권
- 전쟁선포 승인권
- 대정부 통제권
 - 하원이 대정부 불신임 결의를 가결할 경우 내각이 총사퇴
 - 의회는 대정부 통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면 및 구두질의를 행할 수 있으며, 조사 또는 통제위원회를 구성
- 의원은 타원 의원직 및 유럽의회 의원직, 정부 각료직, 사법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직은 겸직 가능) 등 겸직 불가

다.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

- 하원은 의원 총수 1/10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내각을 불신임 (상원은 내각 불신임권 행사 불가)
- 의회는 총리와 각료들의 직무상 모든 책임에 대해 정치재판권을 행사
 - ‘특별정치재판소’에 피소
- 정부 각료는 의회에 출석하여 정부 정책을 설명
- 정부는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의회의 법률안 심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등 입법의 각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관여

라. 회기

- 정기회기는 단일 회기로 연간 120일 범위 내에서 개최되며, 매년 10월 첫 번째 평일부터 다음 연도 6월 마지막 평일까지 개최
- 임시회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리 또는 하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개최

마. 상원

- 간접선거
 - 선거인단은 각 선거구 내 하원의원, 지자체 의원 등으로 구성
- 피선거권 : 24세 이상

- 의원 임기 : 6년 (3년마다 1/2씩 개선)
- 상원의장 : 제라드 라르셰(Gérard Larcher, 공화당)
 -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부분 선출시(3년)마다 선출
- 상임위원회(7)
 - ① 경제위원회
 - ② 외교·국방·군사위원회
 - ③ 사회위원회
 - ④ 문화·교육·커뮤니케이션위원회
 - ⑤ 국토정비·지속가능개발위원회
 - ⑥ 재무위원회
 - ⑦ 헌법·법제·보통선거·규정·국정운영위원회
 - ※ 헌법 제88-4조에 의해 유럽위원회(상임위와 별도) 설치
- 의석수 : 348석

바. 하원

- 단순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에 의한 직접선거
- 피선거권 : 18세
 - 의원 임기 : 5년
 - 하원의장 : 리샤르 페랑(Richard Ferrand, 전진하는 공화국당)
 - 상임위원회(8)
 - ① 문화·교육위원회
 - ② 경제위원회
 - ③ 외교위원회
 - ④ 사회위원회
 - ⑤ 국방·군사위원회
 - ⑥ 지속가능개발·국토정비위원회
 - ⑦ 재무·일반경제·예산통제위원회
 - ⑧ 헌법·법제·국정운영위원회
 - ※ 헌법 제88-4조에 의해 유럽위원회(상임위와 별도) 설치
- 의석수 : 577석 (본토 555석/해외영토 22석)

사. 입법 절차

- 총리 또는 상·하원 의원이 법률안 발의
 - 정부 발의 법률안(Projet de loi)은 국가평의회(Conseil d'Etat)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된 후 상·하원 중 한 곳에 제출
 - 의원 발의 법률안(Proposition de loi)은 의회의 의장단에서 재정적 타당성 심사를 받은 후 제출
- 정부는 의원 발의 법률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률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동 법률안 제출에 반대할 수 있으며, 의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일방의 요청에 의해 헌법위원회가 법률사항 여부를 판단
- 일단 제출된 법률안은 해당원의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확정된 후, 최종안은 다른 원으로 이송, 투표 후 법률로 채택
- 양원이 법률안에 대해 견해를 달리할 경우, 총리는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구성을 요청, 단일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작성한 단일안은 양원에서 수정 없이 가부 표결로 채택
 -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단일안 작성에 실패하거나, 작성된 단일안이 양원에서 인준되기 어려울 경우, 정부는 양원의 심의가 각각 끝난 후 하원에 최종안을 가결해 주도록 요청 가능
- 상기 과정을 거쳐 채택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
 - 대통령이 이에 반대할 경우, 의회의 재심 또는 헌법위원회의 위헌 심사를 요구
- 총리는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 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는 한 그 의안이 채택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제49조 제3항)을 회기당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정부는 국정 수행을 위해 법률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법률명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음(제38조).
 - 의회가 수권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승인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으면 법률명령은 폐기됨.

5 사법부

가. 특징

- 사법재판과 행정재판의 이분화
 - 영·미 전통과 달리 행정기관과의 분쟁은 별도의 규율에 의해 행정법원에서 관할
 - 민사 및 형사사건 : 1심(지방법원, 소법원, 상사법원 등 특별법원) → 2심 항소법원 → 3심 파기법원
 - 행정사건 : 1심 지방행정법원 → 2심 고등행정법원 → 3심 국가평의회
- 법무부장관의 법무·사법 정책 총괄
 - 법무부장관(Ministre de la justice)은 법무 사법정책을 총괄하며, 통상 가르데쑤(Garde des sceaux : '국새(國璽)를 보관하는 자라는 뜻)라는 명칭을 보유
 - 법원은 법무부 산하 기관이나 헌법상 사법권 독립이 보장되며, 사법관 인사·징계권은 헌법기관인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권한
- 판사는 실질적으로 고등사법위원회가 인사·징계권을 행사
- 검사는 단순한 권고적 의견에 불과, 법무부장관이 인사권 보유
 - 검찰청(Parquet)은 독립되어 있지 않고 법원에 부속
- 법원(Jurisdiction)은 법원 및 검찰을 포함하는 개념
- 광범위한 국민의 참여
 - 노사조정법원은 노사 대표, 상사법원은 상인 대표를 투표로 선출, 비직업 법관 자격으로 재판에 관여
 - 단, 항소심은 모두 일반법원인 고등법원으로 일원화
- 법조인 양성제도(판·검사와 변호사 분리)
 - 판사와 검사를 통칭하는 Magistrat와 변호사를 분리하여 운영
 - 판사와 검사는 상호 활발한 직렬 간 교류, 부장 이상은 대체로 판사 또는 검사로 전문화
 - Magistrat는 국립사법관학교(ENM : 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수료 후 임용되며, 변호사는 각 고등(항소)법원 소재의 변호사연수원(CRFP : Centre Régional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합격 후 2년간 수습 후 변호사 자격증 취득
- 중죄법원(10년 이상 징역)에서 배심제, 소년법원에서는 참심제로 운영

나. 사법기관

1) 사법법원

민 사					형 사		
① 1심법원	③ 상사 법원	④ 노사조정 법원	⑤ 농업부동산 법원	⑥ 사회보장 법원	⑦ 경찰법원	⑧ 경범죄 법원	⑨ 중죄 법원
② 소액사건 담당법원							
↓ 항소 ↓							
항소법원							
↓ 상고 ↓							
파기법원							

가) 일반법원

① 지방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시군법원(Tribunal d'instance)

- 특별법원 소관이 아닌 민사사건, 소송 물가액 7,600유로 초과 사건, 요구 금액에 상관없이 호적 관계·가족 관계·부동산 문제·상호 출원 등에 관한 사건
- 복수 판사에 의한 합의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단독심으로 운영

② 소액사건담당법원(Tribunal d'instance)

- 일상생활과 관련된 경미한 민사 사건(소송 물가액 7,600유로 이하 사건)
- 판사 1명의 단독심

나) 특별법원

③ 상사법원(Tribunal de Commerce)

-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법원
- 법관이 아닌 상인 대표로 구성

④ 노사조정법원(Conseil de Prud'hommes)

-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원
- 법관이 아닌 동수의 노사 대표로 구성

⑤ 농업부동산법원(Tribunal paritaire des baux ruraux)

- 농지 및 농업 관련 건물 소유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법원
- 법관1명, 소유인 대표 2명 및 임대인 대표 2명으로 구성

⑥ 사회보장법원(Tribunal des affaires de la Sécurité sociale)

- 사회보험 가입자와 사회보험 운용기관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법원
- 지방법원 법관이 주재하여 노동자 대표 1명 및 고용주 대표 1명으로 구성

⑦ 경찰법원(Tribunal de police)

- 벌금 1,500유로 이하 및 자격정지 또는 제한 대상이 되는 경미한 형사사건
- 판사 1명의 단독심

⑧ 경범죄법원(Tribunal correctionnel)

- 절도, 신뢰 남용 등 10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되는 범죄 사건
- 판사 3명의 합의제

⑨ 중죄법원(Cour d'assises)

- 살인·강간·강도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 3인의 판사와 9명(1심의 경우) 또는 12명(2심의 경우)의 배심원으로 구성

다) 항소법원(Cour d'appel)

- 민·형사 관련 1심 재판에 대한 항소심
- 민사·사회·상업·형사의 분류에 따라 3인의 판사로 구성된 각각의 특별재판부가 재판하나, 공식 심문이 있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5인의 판사가 재판

라)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

- 최고 재판소
- 항고심에 대한 최종 법률심
 - 3개의 민사재판부, 1개의 상업재판부, 1개의 사회재판부, 1개의 형사재판부

2) 행정법원



① 행정법원(Tribunal administratif)

- 행정기관의 행위 및 결정, 직접세, 시·구 선거 분쟁 등에 관한 분쟁 담당

② 고등행정법원(Cour administrative d'appel)

- 시·구 선거 분쟁 및 각종 규제 조치에 의한 권한 남용에 대한 소송 등을 제외한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③ 국가평의회(Conseil d'Etat)

- 행정재판의 최종심
- 대통령 또는 총리령, 장관이 명하는 규제 조치, 국가 수준의 중요한 조직에 관한 결정,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종 고위직 공직자의 인사에 관한 결정
- 유럽의회 의원 및 지역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분쟁 담당
- 시·구 선거 분쟁 및 각종 규제 조치에 의한 권한 남용에 대한 2심
- 행정부에서 준비하는 법령안, 명령, 규칙 심사 및 자문
- 원장은 총리이나 실제로 부원장의 지휘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

3) 권한쟁의 법원(Tribunal des Conflits)

- 사법법원과 행정법원의 관할 분쟁을 재정

4) 특별정치재판소(Haute Cour de Justice)

- 대통령의 국가반역죄, 각료가 공무 중 저지른 범죄 등을 재판
 - 상·하원에서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대통령을 국가반역죄로 고소할 경우, 파기법원 5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실 검토를 거쳐 특별정치재판소에 송부할 것인지 결정
- 하원 및 상원에서 선출된 상·하 동수의 의원 24명으로 구성

6 주요 정당

가. 전진하는 공화국(LREM : La République En Marche)

1) 이념 : 중도

2) 총재 : 크리스토프 카스타네(Christophe Castaner, 2017.11.18~현재)

3) 하원 의석수(2018.9월 현재) : 310석

4) 연혁

- 2016년 4월 6일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출생지인 아미앵에서 좌우 기성 정당에 속하지 않고, 진보와 개혁을 표방한 정치 운동 ‘앙 마르슈(En Marche)’를 시작
-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La République En Marche’ 명칭의 정당으로 등록하고, 바로 이어진 하원 선거(2018.6월)에서 과반 획득

나. 공화당(LR : Les Républicains)

1) 이념 : 우파

2) 총재 : 로랑 보키에(Laurent Wauquiez, 2017.12월~현재)

3) 하원 의석수(2018.9월 현재) : 112석

4) 연혁

- 전후 드골 대통령과 동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우파 정당으로서 계보를 계승하면서 정권을 유지
 - RPF(Rassemblement du peuple français, 1947~1958), UNR(Union pour la Nouvelle République, 1958~1968), UDR(Union pour la défense de la République, 1968~1976)
- 1976년 자크 시락은 중도우파 계열의 비드골파인 데스탱 대통령 하의 총리직을 사임하고, 드골주의 계승을 표방하며 우파 공화국연합(RPR)을 창당하면서 1981년 대선에 출마하였으나 실패
- 시락 총재가 1995년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정권을 잡았으며, 2002년 대선시 자유민주당(DL) 및 프랑스민주동맹(UDF) 내 지지자들을 결합, 여당대선연합(Union pour la Majorité Présidentielle) 결성, 재임에 성공
- 2002년 11월 정당 명칭을 대중운동연합(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으로 수정하고 쥐페(Alain Juppé)를 총재로 선출
- 2007년 대선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2012년 재임에 실패하여 정권을 사회당에 내주었고, 2014년 11월 정계에 복귀한 사르코지 前 대통령이 UMP 총재로 당선된 후 동 총재의 제안에 따라 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2015년 5월 공화당(Les Républicains)으로 명칭 변경

다. 사회당(PS : Parti Socialiste)

1) 이념 : 좌파

2) 총재 : 올리비에 포르(Olivier Faure, 2018.4월~현재)

3) 하원 의석수(2018.9월 현재) : 29석

4) 연혁

- 20세기 초 다양한 좌파 계열 연합들이 단일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1905년 '제2인터내셔널 프랑스지부(SFIO, Section Française de l'Internationale Ouvrière)'라는 단일 좌파 정당 설립

- 동일 좌파 계열인 공산당(PCF)보다 열세에 있던 1969년 사회당(PS : Parti Socialiste)으로 개편하였고, 1971년 에피네(Epinay) 전당대회에서 미테랑이 당권을 장악
- 1981년 대선에서 미테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좌파 계열 최대 정당으로 발돋움하고, 1987년 재임에 성공
- 1995년, 2002년, 2007년 대선에서 계속 실패하며 우파에 정권을 내주었으나, 2012년 올랑드 대통령 당선으로 재집권에 성공
- 올랑드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과 당내 지도력 부재 등으로 2017년 대선과 총선에서 크게 패배하고, 다수 사회당 인사들이 마크롱 대통령 정부에 발탁되면서 당이 크게 위축

라. 국민연합(RN : Rassemblement National)

1) 이념 : 극우

2) 주요 지지기반 : 농촌 저소득층, 노동자, 도시빈민층

3) 총재 : 마린 르펜(Marine Le Pen, 2011.1.16~현재)

4) 하원 의석수(2018.9월 현재) : 7석

5) 연혁

- 1960년대 말 네오파시스트, 극우 성향의 정치연합인 신질서(Ordre Nouveau)가 설립되고, 동 연합의 지지 아래 1972년 국민전선(FN : Front National) 창당
- 장-마리 르펜(Jean-Marie Le Pen) 당수가 이끄는 국민전선은 주변 정당에 머무르다 1982년 지자체 선거, 1984년 유럽의회 선거, 1986년 하원 선거 등을 통해 의원을 배출하며 기성 정당으로 발돋움
- 2002년 대선에서 장-마리 르펜 후보가 사회당 후보를 누르고 결선에 진출함으로써 정계에 충격을 주었고, 2011년 당수로 선출된 마린 르펜은 당 설립 초기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해 나가고 기성 정당으로서 지지를 계속 확대
- 마린 르펜 당수는 2012년 대선 1차 투표 3위(18%), 2017년 대선 1차 투표 2위(21%)로 결선에 진출하였으며, 2017년 총선에서는 7명이 의원이 당선되며, 주요 정당으로서 위치를 확립
- 마린 르펜 당수는 대선 패배 국면 전환 및 2020년 지방선거 등을 위해 당명을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으로 개명

마. 민주운동당(Modem : Mouvement démocrate)

1) 이념 : 중도

2) 총재 : 프랑수아 바이루(François Bayrou, 2007.5.10~현재)

3) 하원 의석수(2018.9월 현재) : 42석

4) 연혁

- 1978년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을 위해 중도 계열 및 중도우파 계열의 정치인들이 연합하여 프랑스민주동맹(UDF) 창당
- 1998년 프랑스민주동맹의 총재가 된 프랑수아 바이루 총재는 보다 독립적인 중도 계열 정당으로 당을 정비해 나가고, 2007년 대선에 출마하였으나 패배하였으며, 이후 당명을 민주운동당(Modem)으로 변경
-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중도 및 우파 합동 대선후보 국민경선에서 바이루 총재는 쥐페 후보를 지지했으나 피용 후보로 결정되자 마크롱 대통령과 연대했으며, 2017년 총선에서 민주운동당은 43석 획득

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France Insoumise)

1) 이념 : 극좌

2) 총재 : 장 퉁 멜랑송(Jean-Luc Mélenchon, 2016.2.10~현재)

3) 하원 의석수(2018.9월 현재) : 17석

4) 연혁

- 2008년 11월 사회당내 장-뤽 멜랑송을 비롯한 극좌 계열의 정치인들이 'Parti de gauche'를 창당하였으며, 반자유주의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2012년 대선 출마
- 장-뤽 멜랑송은 2017년 대선을 염두해 두고, 2016년 2월 친환경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FI)'를 창당하였으며, 2017년 대선에 출마하여 1차 투표에서 19%의 높은 지지율을 획득하였으며, 2017년 6월 총선에서도 17석을 획득,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

사. 공산당(PCF : Parti Communiste Français)

1) 이념 : 극좌

2) 사무총장 : 피에르 로랑(Pierre Laurent, 2010.6.20~현재)

3) 하원 의석수(2018.9월 현재) : 13석

4) 연혁

- 1920년 국제공산당 소속 프랑스공산당으로 창당되었으며, 전후 프랑스 좌파 계열의 주요 정당으로 발전
- 1970년대 경쟁 정당인 사회당과 연대하고, 1981년 대선 결선투표에서 미테랑 후보를 지지하면서 정부에 입각하였으나, 1984년 미테랑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결별
- 1980년대 중반 이후 공산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극좌 계열의 소수 정당으로 전락
-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사회당에서 탈당한 장-뤽 멜랑송과 연대, 동 후보를 지지

7 기타 주요 기관

가.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 구성 : 9명
 - 대통령,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 각 3명 임명
 -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
- 임기 : 9년으로 3년마다 1/3씩 개선(재임 금지)
- 주요 기능(재판, 자문 기능)
 - 대통령선거 및 국민투표 적법성을 판단하고 투표 결과 발표
 - 상·하원 의원 선거 소송을 담당하며, 위법성 발생시 선거 결과 취소
 - 조직법(공포 전) 및 국회 통과 법률안(시행 전)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법률 심사 기능)
 - (의회 법률안 제안 관련) 법률사항의 범위 한정

나. 경제사회환경위원회(Conseil E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 구성 : 233명의 공사기업·각종 산업 분야·조합 단체·지방자치의 대표와 경제·사회·과학·문화·환경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 임기 : 5년
- 기능
 - 정부와 국회의 요청으로 정부 또는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경제·사회·환경적 문제, 계획 등에 대해 의견 표명

다. 시민권리보호관(Le Défenseur des droits)

- 임기 : 6년 (대통령 임명, 연임 불가)
- 기능
 -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 임무를 부여받은 모든 기관 또는 조직법이 권한을 부여한 모든 기관들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 감독

8 지방 행정

가. 개요

- 프랑스 지방행정은 분산(Déconcentration)과 분권(Décentralisation)으로 운영
 - 지방분산 : 정부 소관 지방 사무는 지역별 정부과견관(프레페, Préfet)이 관할
 - 지방분권 : 지자체로 이양된 지방행정 사무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집행
 - ※ 1982년 지방자치법 시행 ⇒ 2003년, 2007년 헌법 개정 지방분권 국가 명시
- 지방 행정 단위는 크게 3단계로 구분(Région, Département, Commune)
- 지방의회 선거(매 6년)를 통해 지방의회(직선), 지방자치단체장(간선) 구성
- 지방의회가 의결기구인 동시에 집행기구인 기관통합형 제도 운영

- 단 체 장 : 의회의원 중 1인을 의회에서 선출(간선)
- 부단체장 : 의회의원 중 의석수 30%까지 의회 의결로 임명
-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나 직업소득 손실 보전을 위한 의정수당 지급
- 지방의원은 겸직이 가능하나 단체장·부단체장은 제한적 겸직 가능

프랑스 지방행정제도

행정구역	광역(Région)	중역(Département)	기초(Commune)
개 수	18 (본토 13, 해외 5)	101 (본토 96, 해외 5)	35,357* (본토 35,228, 해외 129)
단체장	광역의회 의장 Président du conseil régional	데파르트망 의회 의장 Président du conseil départemental	시장 Maire (시의회 의장)
의결기관	광역 의회 Conseil régional	데파르트망 의회 Conseil départemental	시의회 Conseil municipal
주요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경제개발 계획 • 지방-정부 계획 계약 • 사회간접자본 등 토지 정비 및 개발 계획 • 고등학교 건설 및 관리 • 대학 재정 지원 • 고용, 창업 장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관리 업무 • 사회복지(노인, 아동, 장애, 영세민), 의료, 방역 등 업무 주관 • 사회복지 각종 수당 • 중학교 설립 및 관리 • 데파르트망 도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실생활 연계 근접 행정 주체 • 건축 허가, 대중교통, 도로, 쓰레기, 상하수도 • 유치원, 초등학교 시설 및 운영, 탁아 보육 • 호적 사무(정부 위임)
선거	<p>【광역의회 선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출 인원 : 31~209명 · 직접·보통 선거 • 남녀 균등 배분 후보 명부에 2차 투표 • 임기 : 6년 • 다수 득표 명부 우선 의석 배정 + 명부별 득표 비례 의석 배정 	<p>【데파르트망의회 선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출 인원 : 15~76명 • 직접·보통 선거 • Canton(선거 행정 단위) 단위 남녀 1조 후보 2차 투표 • 임기 : 6년 • 절대 다수 득표 후보조 당선 	<p>【시의회 선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출 인원 : 9~163명 • 직접·보통 선거 • Commune 단위 남녀 균등 배분 후보 명부에 2차 투표 • 임기 : 6년 • 다수 득표 명부 우선 의석 배정 + 명부별 득표 비례 의석 배정 • 인구수에 따라 제도 상이

* 2018. 5. 프랑스 무부 지방자치총국 DGCL 발표
 ※ 데파르트망 의회 선거 : 데파르트망(Département)은 선거시 캉통(Canton)이라는 선거 행정 단위로 분리
 ※ 특수지방조직
 · 3개 대도시(파리, 리옹, 마르세이유)는 하위 단위로서 구(Arrondissement)로 구성되어 파리 20개구, 리옹 9개구, 마르세이유 16개구임.
 · 파리는 유일하게 꼬뮌(Commune)이자 동시에 데파르트망(Département)
 · 선거는 선출 인원(73~163명, 임기 6년), 구 단위 후보 명부에 2차 투표, 다수 득표 명부 우선 의석 배정+명부별 득표 비례 의석 배정
 · 코르스(Corse)는 특수지방자치기관으로서 심의 의결기관인 코르스 의회(Assemblée de Corse)와 집행부인 코르스 집행위원회(Conseil Exécutif de Corse)로 분리(의회 의장이 단체장이 되는 일반 지자체와 차이)
 ※ 자치해외령 : 101개 데파르트망에 속하지 않는 해외 도서 영토(Collectivités d'outre-mer)로 폴리네시아, 누벨-칼레도니아, 윌리스푸투나, 생피에르미클롱, 생바르텔레미, 생마르탱 등 6개 지역에 86개 꼬뮌 분포

프랑스 광역자치단체(Région) 현황

이름(주도)		단체장(정당)	면적 (km ²)	인구 (백만)	
본 토	오베르뉴-론알프스 (리옹)	Laurent Wauquiez(LR)	69,711	7.9	
	부르고뉴-프랑슈콩테 (디종)	Marie-Guite Dufay(PS)	47,784	2.8	
	브르타뉴(렌느)	Loïg Chesnais-Girard(PS)	27,208	3.3	
	상트르-발 드 루아르 (오를레앙)	François Bonneau(PS)	39,151	2.6	
	코르스 (아작시오)	Gilles Simeoni(FC) Président du conseil exécutif de Corse	8,679	3.3	
		Jean-Guy Talamoni(CL) Président de l'assemblée de Corse			
	그랑데스트 (스트라스부르)	Jean Rottner(LR)	57,433	5.6	
	오 드 프랑스(릴)	Xavier Bertrand(LR)	31,813	6.0	
	일 드 프랑스(파리)	Valérie Pécresse(LR)	12,012	12.1	
	노르망디(루앙)	Hervé Morin(UDI)	29,907	3.3	
	누벨 아키텐(보르도)	Alain Rousset(PS)	84,061	5.9	
	옥시타니(툴루즈)	Carole Delga(PS)	72,724	5.8	
	삐이 드 라 루아르 (낭뜨)	Christelle Morançais(LR)	32,082	3.7	
	프로방스 알프스 꼬뜨 다쥐 르(마르세유)	Renaud Muselier(LR)	31,400	5	
해 외 령	과들루프 (바스테르)	중미	Ary Chalus(GUSR-DVG)	1,628	0.4
	기아나(카옌)	남미	Rodolphe Alexandre(DVG)	83,846	0.3
	마르티니크 (포르트프랑스)	중미	Alfred Marie-Jeanne(MIM)	1,128	0.4
	레위니옹 (생드니)	아프리카 (인도양)	Didier Robert (LR)	2,512	0.8
	마요트 (마무주)	아프리카 (인도양)	Soibahadine Ibrahim Ramadani(LR)	374	0.2

출처 : 레중협회(regions-france.org)

나. 지방·중앙정부와의 관계

- 중앙정부는 정부를 대표하는 프레페(Préfet)를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단위로 파견하고, 재정지원 및 법규 제정(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지방자치 행정의 적법성 감독
- 레종 프레페(Préfet de région)
 - 레종(Région)의 주도가 위치한 데파르트망 프레페가 레종 프레페 겸임
 - 지역에 분산된 국가 행정 업무를 지휘
 - EU 지역개발 프로그램 또는 여러 지자체와 연관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계
 - 지자체 행정 행위의 예산 규정 준수 여부 및 적법성 여부 사후 감독
 -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발전·토지개발 정책 준비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계약의 협상을 담당
- 데파르트망 프레페(Préfet de département)
 - 지방자치단체 행정 행위 사후 적법성 심사
 - 경찰력을 바탕으로 공공질서 유지 책임
 - 중앙정부의 토지 정비 및 개발 정책 집행
 - 행정법원 소송 통해 사후적으로 지자체의 행정 행위 통제
- 기초단체인 코뮌(Commune)에는 프레페가 없으며, 시장이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일부 국가 사무 수행

PART 3

외교

1. 프랑스 외교정책 연혁
2. 현 정부 주요 외교정책



1 프랑스 외교정책 연혁

가. 드골(Charles de Gaulle, 1959~1969)

- 미·소 냉전 시기의 국제사회에서 프랑스의 독자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이 독자적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며 프·독 협력을 주창하고 유럽공동체(EC) 통합을 진전시키되, 미국과 긴밀한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에 거부권 행사
- 군사적으로 대서양연합에는 남아 있되, NATO 통합사령부에서는 프랑스의 탈퇴를 결정하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하는 등 프랑스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외교정책 추진
- 중·소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1964년 중국과 외교 관계 수립
- 식민주의와 단절하되, 구식민지 국가와 범프랑스어권 협력 틀을 만드는 한편, 중동 지역에서 프랑스 영향력의 확대를 도모하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를 모두 인정하는 정책 추구

나.龐피두(Georges Pompidou, 1969~1974)

- 드골 대통령이 발전시켰던 외교정책 노선을 고수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 블록 체제에 대해 독자적인 자세를 견지하였으며, 신생 독립국들(특히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국가)과의 정치적·경제적 협력 관계 유지
-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유럽공동체의 6개 회원국을 9개(덴마크·아일랜드·영국 추가)로 확대하며 유럽공동체 기존 6개국 간 이견 해소

다. 지스카르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 1974~1981)

- 유럽통합 추진과 프랑스의 영향력 확대 추구 전통 지속
- 유럽이사회(Conseil Européen)를 창설하고, 보통선거에 의한 유럽의회 의원 선출 제도를 탄생시키고 유럽 공동 통화정책을 주창하는 등 유럽통합에 기여하였으며, 주요 선진국 그룹인 G7 구축

- 다극주의·평화주의 외교를 추진하여 소련에 유화 노선을 추구하였으며, 서방 진영의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에 불참

라.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1981~1995)

- 제5공화국 최초의 좌파 대통령이나 프랑스의 독자적 핵억지력 강화 및 프랑스군의 독자적 작전 능력 확보 등 국제질서에서 프랑스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드골 이후의 프랑스 외교 전통 유지
- 소련의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미사일 유럽 배치 지지, 포클랜드 전쟁 시 영국 지원, 임기 말 걸프전에도 개입
- 헬무트 콜(Helmut Kohl) 서독 총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 1986년 유럽단일외정서 채택,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타결 등 유럽연합 출범과 단일통화 도입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 역할 수행
- 1967년 6일전쟁 이후 프랑스가 취해 온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정책을 종식하고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

마. 시락(Jacques Chirac, 1995~2007)

- 탈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국제법과 다자주의 존중 입장을 취하며 프랑스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주요 국제관계 이슈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되, 독자적 시각에 입각한 활동 영역 확보 노력
- 이라크전에 불참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반대 입장 표명
 - 단, 아프간전에는 참전 결정
- EU 공동 외교정책 및 자체 방위안보 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
 - 테러, WMD 확산 등 새로운 안보위협과 발칸·아프가니스탄·아프리카에서의 평화 유지 활동 등에 대해 유럽의 공동대응 강조
 - 독일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유럽통합의 견인차로서 프랑스 위상을 강화하며 유럽 통합의 사회적 측면 강조
- 아프리카 지역에서 프랑스 이익 수호를 위해 적극적 개입정책 추구
- 제3세계 지원 및 아·태지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며, 중국·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 관계 수립 및 경제협력 강화 추구

바. 사르코지(Nicola Sarkozy, 2007~2012)

- 현실·실용주의적 기조 하에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사안별로는 독자노선을 추진하는 세력균형의 외교정책 견지
 - 아프간 파병, 대이란 제재 등 주요 국제안보 이슈에서는 미국에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동시에 러시아·중국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도모하였으나, 아프리카·중동에서의 미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등 “동맹이지만 추종하지는 않는다”라는 정책 추진
- 아울러 유럽통합의 쌍두마차인 독일과 긴밀한 협력 하에 EU 결속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2008년 ‘지중해연합(Union pour la Méditerranée)’을 통해 EU-지중해 연안국 간 협력 확대 도모
- 아프리카와 중동에서의 전통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급변하는 중동의 역학관계에서 우월적 지위 선점을 위해 2010년 말에 시작된 아랍의 봄에 적극 대응
 - 이·팔 문제에서 조정·균형자적 역할 자임, 이라크와 전통적 우호 관계 회복 추진, 리비아 내 군사개입 작전 주도 등
- 중국·인도·한국 등 신흥 강대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2011년 G20, G8 의장국 수임 등 다자 국제무대에서 프랑스 영향력 강화 도모

사. 올랑드(Francois Hollande, 2012~2017)

-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일정 기간 미국 주도의 일극(一極) 체제가 형성되었으나, 현재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강대국이 없는 무극(無極, zero-polaire) 상황으로 판단하고, 세계 거버넌스 개선 차원에서 다극(多極, multi-polaire) 체제 수립이 요구되며 UN 및 지역기구 등 다자기구의 위상 강화 및 역할 증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
 - 시리아 사태 대응에서 무능함을 보인 UN 안보리와 관련, 대규모 인도 범죄에 대한 상임이사국의 자발적 거부권 행사 자제를 제안
-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고 국제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있는 강국 (Puissance d’influence)’이 되는 것을 외교 목표로 설정하고, 2015년 12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를 개최하는 등 안보·환경·인권·보건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슈 관련 주도적 역할을 수행
- 외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동맹국 존중 및 유럽 연대에 기반한 ‘외교정책 결정의 독립성 유지’ ▲ 합법적인 분쟁해결 및 집단안보 실현을 위한 ‘국제법 존중’ ▲대륙·문명 간 ‘대화 우선’ 등의 외교정책 기본 방향 제시

- 구체적으로 ▲경제외교 강화 ▲프랑스어권 강화 등 문화외교 추진 ▲ 세계 거버넌스 개선 기여 ▲유럽 내 협력 강화 및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해 노력

2 현 정부 주요 외교정책

가. 대외정책 기조

1) 방향

- 브렉시트 및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다자주의와 EU 통합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독일 등 EU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보·환경·인권·보건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슈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EU 통합을 적극 추진
 - 다자기구의 위상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프랑스의 대외 역할 증진을 위해 노력
 - 마크롱 대통령의 주도로 각종 국제회의의 다수 개최 : 기후정상회의(2017.12월), 화학무기 사용 불처벌 대응 파트너십(2018.1월 및 5월), 레바논 재건 회의(2018.4월), 테러자금 차단 회의(2018.4월)

2) 주요 이슈 및 목표

-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와의 전쟁
 - 프랑스 외교의 최우선 과제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과의 전투로 설정하고 IS를 프랑스의 적으로 규정해 조속한 對IS전 종식을 목표
 - 특히 시리아 및 이라크에서의 對테러 전쟁에서 프랑스의 역할을 늘리고 이들 국가의 재건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며, 시리아 정부가 시리아 국민의 대표자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정치적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리아 문제 협의를 위한 유엔 안보리의 노력을 촉구 중
 - 아프리카 사헬 지역 정세 안정의 관건이 되는 리비아 내 테러주의자 제거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리비아는 물론 튀니지 등 인근 국가에 대해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바, 2014년에 시작된 군사작전 바케인(Barkhane)을 지속 수행하면서 2017년부터는 지역 개발을 위한 사헬 동맹 주도

- 난민문제 대처
 - 새로운 유럽-아프리카 계획을 통해 니제르 및 차드에서 아프리카 난민들에 대한 망명권을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난민들이 위험하고 불법적인 해양 탈출 감행 전 망명권 심사를 도모
 - 난민 수용을 인류의 존엄과 신뢰에 관한 문제로 보는 한편, 난민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 이주자들은 귀환시키는 조치 시행
- 기후변화 대응
 - 2015년 파리협정 준수를 목표로 동 협정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정상회의를 2017년 12월 파리에서 개최

나. 對유럽 관계

1) 정책 기조

-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부임 이후 독일과의 협력에 의한 유럽통합을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기조에서 '외교부' 명칭도 '유럽-외교부'로 개편하는 등 유럽 중심 정책 추진
-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9월 소르본대학 연설을 통해 대유럽 정책의 방향과 프랑스가 희망하는 유럽의 미래상을 아래와 같이 천명

가) 독립적인 유럽 추진

- 안보 강화
 - 유럽은 공동의 신속대응군, 공동의 방위예산, 공동의 행동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목표 아래 유럽 국가들의 군대가 보다 잘 통합되어 상시적인 협조가 구조화될 수 있도록 유럽 방위기금의 조속한 설립 지향
 - 테러와의 전쟁에서 유럽은 각국의 정보력을 긴밀히 연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유럽 정보사관학교 창설 필요
- 난민문제 대처
 - 유럽 공통의 국경·난민수용 지대를 창설하여 유럽의 국경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난민들이 존엄을 잃지 않도록 맞이하며 그들을 효율적으로 통합시키는 한편 망명권을 갖지 않은 이들은 신속히 송환
 - 이민 절차를 신속히 하고 국가마다 다른 체계를 조화롭게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럽난민청 설립을 추진하며, 아울러 더 나은 국경 보호를 위해 유럽국 경경찰을 점진적으로 구성 도모

- 對아프리카 및 지중해 관계 중시
 - 유럽은 우선 지중해와 아프리카 문제에 중점을 둔 대외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보건·에너지 전환에 기초를 둔 아프리카와의 새로운 동맹 관계 발전
- 지속가능 개발
 - 유럽은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생태 전환의 주도자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유럽 탄소세 부과를 통한 탄소 가격의 적절한 설정과 교통·주택·산업·농업 등 분야에서의 관련 투자를 확대
 - 유럽은 청정 차량과 이를 위한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며, 공동 농업정책의 개선을 통해 식량 자급을 확보
- 디지털 전환
 - 유럽은 세계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혁신과 규제를 결합한 보편적 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함. 디지털 기업 과세 체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고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도록 노력
- 유로존 강화
 - 유로존을 유럽 경제력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로존 각국의 국가 개혁뿐만 아니라 유로존의 성장과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예산 신설 필요

나) 단합된 유럽 추진

- 유럽의 사회 및 재정 모델을 점진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유럽통합기금의 활용이 요청됨.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각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한 최소임금 보장 필요
- 청년 교류를 강화하여 모든 유럽 청년이 적어도 6개월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2개 유럽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유럽 대학들 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적어도 2개 언어로 수업을 듣도록 하는 것이 필요

다) 민주적인 유럽 추진

- 2018년에 희망하는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질문들에 대한 6개월간의 전국 및 지방에서의 토론회 개최를 추진
- 2019년까지 영국 출신 의원들을 대체하여 그 수만큼 다른 회원국 의원들을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유럽의회 구성

라) 2024년 목표

- 2024년 EU는 공통되고 타협이 불가한 민주적 가치와 통상정책 개혁을 통한 단일시장에 기초할 것이며, 서발칸 국가들을 포섭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15개국이 참여하는 보다 작은 위원회(Commission)를 지닌 구성체로 개선 도모
- 이러한 목표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과 함께 유럽 재설립을 위한 그룹을 창설코자 함. 이 그룹은 참가 희망국들의 대표로 구성되며 유럽 기구도 참여시킬 것임. 2018년 여름까지 이러한 목표를 위해 여러 논의와 준비 필요
- 여러 도전들에 맞서 프-독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2024년까지 유럽을 개혁해 나가자는 목표를 갖고 함께 협력해 나가고자 함. 독일 총선에서 반난민·反EU를 표방하는 극우 정당 AfD가 연방 하원에 진출한 것은 세계대전의 비극에서 태어난 유럽공동체의 원칙에 어긋남.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고립적 태도가 재부상했는데, 유럽인들이 유럽을 방어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 필요

2) 주요 현안별 정책 방향

가) 브렉시트 문제

- 프랑스는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이후 브렉시트에 계속 반대해 왔으나, 한편 영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면서 돌이키기 어려운 브렉시트에 대해 향후 자국과 EU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지속
- 2017년 12월 브렉시트의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고 곧바로 2단계 협상이 진행되나, 1단계 협상의 종결이 긍정적인 전진이라고 평가

나) 러시아 제재

-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對러시아 제재는 계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유럽의 단합된 대처가 긴요하다는 전제 하에 민스크 협정의 이행 중시
 - 2017년 8월 이후 이어진 휴전에 따라 교전 지역 내 사상자 수가 크게 감소. 아직 상황이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안정 궤도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19년의 우크라이나 대선 이전 개혁 입법 동향 예의주시
- 이와는 별개로 중동 문제 등 여러 국제적 이슈에서 프랑스는 러시아와의 대화를 계속 진행하려 하고 있으며, 2018년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서 개최된 경제포럼에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동 계기에 프-러 정상회담(2018.5.24) 개최

다) 멀티스피드 유럽

- 프랑스는 올랑드 전 대통령부터 멀티스피드 유럽을 주장해 왔으며, 이는 유럽 내 모든 국가에게 그 의지에 따라 참여 가능한 개방된 형태로서 유럽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
 - 동유럽 국가 등 일부 국가에서 차별이라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미 쉥겐 조약, 유로존 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환기

다. 對미국 관계

1) 미국과의 지속적 우호협력 관계 유지

- 기본적으로 미국 행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동맹 관계가 유지되면서 양국은 공히 UN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IS 대응 등 대테러 전쟁, 시리아 문제, 사헬 문제 등 국제 현안에서 최대한의 협력을 지속
 -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브뤼셀 개최 나토 정상회의, 7월 함부르크 개최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으며, 같은해 7월 14일 프랑스 국경일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방불, 양국 간 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
- 그러나 프랑스는 미국의 파리협정(2017.6월) 및 이란 핵합의(2018.5월) 탈퇴,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수도 인정(2017.12월) 등으로 인해 미국과 적지 않은 정책 이견 노출

라. 對중동 관계

1) 정책 기초

-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개최된 프랑스 재외공관장회의에서 중동지역에서의 프랑스 정책의 두 가지 축을 제시
 - 첫째, 위기 상황의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는 테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
 - 둘째, 국제적으로 중동에서의 프랑스의 영향력 강화
- 마크롱 대통령 이후 각종 계기에 중동에서 시아파-수니파, 이란-사우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 경쟁자들 간에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역할 강조
 -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통합에 대한 강한 지지자로서 중동 문제에 대해서도 EU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및 이탈리아 등 EU 내 주요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

-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중동 현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을 활용해 프랑스의 對중동 영향력 강화를 도모
 - 사우디와 이란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프랑스는 현재 양측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체로 자리매김 중

2) 주요 현안별 정책

가) 對사우디 관계

- 프랑스의 사우디와의 관계는 중동 지역의 안보를 지키고, 테러와의 전쟁을 함께해 나가자는 공통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하고 있음. 양국은 또한 경제적 협력 확대라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활발한 교류 진행
 - 양국 간 교역량은 2015년 기준 85억 유로로, 사우디는 프랑스의 중동 내 최대 교역 대상국이며, 프랑스의 對사우디 투자액은 2015년 누계 153억 달러로 세계 3위에 해당(프랑스 외교부 자료)
- 프랑스는 중동 문제에서 이란을 염두에 두면서도 현재까지는 대체로 사우디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예멘 사태와 관련, 프랑스는 직접적으로 내전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우디는 프랑스로부터 정보 분야 협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프랑스 군수물자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

나) 對이란 관계

- 이란 핵협정 관련, 프랑스는 P5+1의 일원으로서 협상 과정에 적극 참가하여 JCPOA 타결에 확고한 역할을 맡은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반복적 비난 및 협정 폐기 위협 속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지속 유지
 - 2017년 10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이행 불인증 선언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 메르켈 총리, 영국 메이 총리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 우려를 표명하고 핵협정이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
 - 2018년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 이후, 미국을 제외한 다른 협정 서명국(E+3 및 이란 그리고 중국, 러시아)들과 함께 핵협정 유지를 위한 공조 진행 중
- 다른 한편, 르 드리앙 외교장관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對이란 외교적 협상을 추진하는 등 중동의 세력균형에 세심한 주의

- 프랑스 외교부는 사우디아와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이 이란과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는바, 프랑스는 이란과 솔직한 정치적 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지역 내 모든 우려되는 사안들을 논의하고 긴장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 프랑스는 이란 핵협정을 계속 유지시키는 한편 이란의 외교적 고립 해소 지원을 위해 협력할 것으로 보이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우디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균형을 지켜 나갈 것이며, 특히 탄도미사일 문제 등 이란의 공격적인 지역 전략에 대해서는 억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

다) 레바논 문제 중재

- 사우디를 방문 중이던 레바논 하리리 총리의 2017년 11월 4일 사임 발표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11월 9일 사우디를 전격 방문,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면담하고 하리리 총리와 그의 가족을 파리에 초대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였음. 하리리 총리는 이후 12월 5일 사임 발표를 철회한바, 이를 통해 마크롱 대통령은 레바논 위기의 중재자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 레바논은 프랑스의 구 식민지로서 지정학적으로도 이란, 이집트 및 걸프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바, 프랑스는 레바논을 매우 중시
- 프랑스는 또한 2016년 레바논 대선 과정에서 이란과 레바논 내 시아파 세력을 다독이며 기독교 마론파인 아운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바, 이러한 프랑스의 적극적인 중재 성공은 하리리 총리의 사임 철회와 함께 레바논을 둘러싼 지역 문제에서 프랑스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
- 프랑스는 2018년 4월 레바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한 국제회의를 파리에서 개최

라) 이라크와 시리아의 안정

- 시리아 문제 관련 프랑스는 계속적으로 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정치적 전환 이행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시리아뿐만 아니라 이라크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도 프랑스가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시리아 및 이라크 두 나라의 재건에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
- 마크롱 대통령은 이라크 위기에 대한 유일한 영구 해결책은 정치적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IS의 군대 역량을 파괴하는 것 외에도 프랑스는 이라크 알아바디 총리가 국가 화해, 재건 및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적극 지원할 용의 표명

- 마크롱 대통령은 시리아 문제 관련, 아사드 대통령에 대해 이란과 러시아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사드 정권 퇴진 문제를 일단 접어두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마크롱 대통령은 시리아 정권 교체는 중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이 우선되어야 하며 프랑스는 현재 시리아의 정치적 변혁에 있어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2017년 10월 시리아와의 협상을 돕기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포함한 국가들로 새로운 접촉 그룹을 창설할 것을 제안

마)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문제

- 시리아 내 화학무기 사용 관련, 프랑스는 아사드 대통령을 포함,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계속 요청해 왔으며, 유엔-OPCW 공동조사 메커니즘(JIM)의 발표 및 JIM 활동 연장 유엔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관련, 르드리앙 외교장관은 미국·영국·독일 외교장관과 공동으로 2017년 11월 성명을 발표, 아사드 정권과 IS를 규탄하고 JIM의 활동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
- 프랑스 외교부는 러시아의 JIM 활동 연장 거부권 행사가 유감스럽고,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IS 등 다른 주체로 그 사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바, 프랑스는 최대한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국제적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JIM이 최소 1년은 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 고수
- 프랑스는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화학무기 사용 불처벌 대응 파트너십 관련 국제회의를 두 차례 개최(2018.1월 및 5월)하고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에 대한 공습 실시(2018.4월)

바) 예멘 사태

- 프랑스 외교부는 2017년 12월에 성명을 발표, 민간인·시설 보호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이 국제 인도주의법의 의무인바, 분쟁 당사자 모두 이를 지켜줄 것을 호소하고 예멘 내 모든 정파가 위기의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청
- 또한 프랑스는 이스마일 울드 셰이크 아프메드(Ismail Ould Cheikh Ahmed) 유엔 사무총장 특사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사) 카타르 외교 단절 문제

- 2017년 7월 이후 지속적인 카타르-아랍국가 간 외교 단절 문제 관련, 프랑스는 관련국이 대화로 동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한 쿠웨이트의 중재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 유지
-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11월 카타르를 방문,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단교 사태와 관련, 쿠웨이트의 중재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촉구
- 한편 마크롱 대통령의 방문 계기, 프랑스는 카타르측과 총 120억 유로 규모의 판매 계약에 서명(에어버스 50대(55억 유로), 라팔 전투기 12대 등 포함)함으로써 무기 수출 계약 등 경제적 실리 확보

마. 對아프리카 관계

1)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파트너십 제안

-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11월 부르키나파소 방문시 했던 와가두구 대학 연설에서 기존의 對아프리카 정책 변화를 표방, “더 이상 프랑스의 아프리카 정책은 없다”고 밝히며, 프랑스와 아프리카는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아프리카 54개국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정하므로 이를 하나로 아우르며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
 - 또한 프랑스와 아프리카 관계에 있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유럽을 향해 더욱 열린, 젊은 세대에 집중한 파트너십을 거론
-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프랑스-아프리카의 틀을 깨고 유럽을 내세워 아프리카와의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면, 아프리카와 유럽의 운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
 - 아프리카 대륙에서 세계 일부의 지각 변동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유럽과 함께 대처하지 못한다면 아프리카 대륙이 어둠 속에 침몰하고 그 후 비참하게 긴 터널로 진입하게 되면 유럽 또한 동일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
- 한편, 프랑스와 과거 아프리카 식민국 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지만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 “많은 전투와 오류, 범죄가 있었으며 위대한 일들과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개인적으로 이러한 식민지 대상으로서의 아프리카를 겪어 보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청중들과 자신의 공통점으로 ‘젊은 세대’를 내세우며 연설을 지속
- 또한 “공동으로 극복해 가야 할 도전 과제”들이 있음을 강조하며 최근 두 차례 와가두구에서 발생한 테러 문제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퇴치, 인구 문제, 어린 여성들의 학업과 자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동시에 함께 대처”해야 함을 주장

-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프랑스와 아프리카 간 교류의 다리들을 창설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며 프랑스 내 아프리카 이민가정 자녀를 포함한 젊은 세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학생들의 이동 절차 간소화를 위한 비자 창설 및 프랑스 청년 해외협력단 파견 확대 등을 발표하고, 특히 프랑스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학생들에 대한 장기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늘리겠다고 공약
 - ※ 이는 실질적으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시절 창설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Compétences et talents(능력과 재능)' 체류증과 같이 우수 학생이 출신국을 위해 재능을 활용할 수 있고 프랑스와 출신국 사이의 왕래를 용이케 하기 위한 목적
- 또한 아프리카 중소기업 개발에 기여하고자 10억 유로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
 - ※ 디지털 분야 신생 기업들이 대다수 그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임. 비록 아프리카 성장률이 2016년 2.2%로 둔화된 경향이 있으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분야 투자가 활발하며 2015년 43억 달러 모금 기록 수립

2) 사헬 지역에 대한 군사개입 강화 및 對테러 정책에 대한 EU 참여 확대

-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19일 취임 첫 해외 방문으로 말리 가오(Gao)에 주둔 중인 바르칸(Barkhane) 작전 수행 부대를 방문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아프리카 군사작전 지속 의지를 보여줌.
- 프랑스 정부는 아프리카 對테러 군사정책에서 독일 등 EU 국가가 대거 참여하는 공동전선을 펼쳐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EU 공조를 통해 사헬 5개국(모리타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이 참여하는 G-5 사헬 공동군을 창설하고, 독일과 공동으로 사헬 지역의 개발협력을 주도하는 사헬 동맹도 창설

3) 사회기간시설 및 중소기업 중심의 금융지원 확대

-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대선 운동 기간에 <르 몽드(Le Monde)>지와의 대담을 통해 아프리카 사회기간시설 건설 및 중소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와 민간의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
 - 특히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금융지원을 2배 늘릴 것이라고 언급

바. 對아시아 관계

- 마크롱 대통령은 적극적 對아시아 외교를 추진하며, 아울러 중국·인도 등 아시아 대국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무역 증진을 적극 추진
 -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1월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2018년 3월에는 인도를 방문

PART 4

경제

1. 경제 동향
2. 마크롱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3. 통상 정책
4. 산업 정책
5. 에너지 정책
6. 과학기술 정책
7. 농업 정책



1 경제 동향

가. 개요

- 2017년 5월 마크롱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 전반의 개혁 정책에 힘입어 경기회복세 강화
- 경제성장률은 2012년 이후 3년간 0.2~0.7%에 머물렀으나 2015년 1.2%로 회복한 이후 2017년 2.3%로 크게 상승하면서 2011년 수준 회복
- 재정수지도 2011년 GDP 대비 △5.1%에서 2017년 △2.6%로 감소하는 등 경제지표 전반에 걸쳐 긍정적 흐름
- 다만, 여전히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청년실업률과 지속되는 경상수지 적자 등은 경제회복의 제약 요인

나. 경제성장률

- 2017년 세계 경제회복, 과감한 규제개혁, 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2.3%를 달성하였으며, 2018년에도 1.8~2.1% 성장 전망
- ※ GDP 성장률 : (2011) 2.1% → (2012) 0.2% → (2013) 0.7% → (2014) 0.2% → (2015) 1.2% → (2016) 1.1% → (2017) 2.3%

주요 기관의 프랑스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구분	2018	2019	2020
IMF (2018.4월)	1.8	1.7	1.7
OECD (2018.5월)	1.9	1.9	-
EU (2018.5월)	1.7	1.7	-
프랑스 재무부 (2018.4월)	2.0	1.9	-
프랑스 중앙은행 (2018.6월)	1.8	1.7	1.6

- **(소비)** 고용여건 개선과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와 담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소비 증가 추세는 감소하였으나, 2018년 말 거주세 감면 등 감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소비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가계 소비지출(전분기 대비, %) : (2017.Q3) 0.4 → (2017.Q4) 0.2 → (2018.Q1) 0.2 → (2018.Q2) △0.1
 - ※ 가계 가처분소득(전분기 대비, %) : (2017.Q2) 0.7 → (2017.Q3) 0.6 → (2017.Q4) 0.6 → (2018.Q1) 0.0
 - ※ 가계 신뢰지수(평균 100 기준) : (2018.2월) 100 → (3월) 100 → (4월) 100 → (5월) 99 → (6월) 97 → (7월) 97

- **(생산)** 2018년 상반기 중 제조업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에너지와 수송 장비 생산 등의 감소로 전체 산업 생산 하락세

 - ※ 산업 생산(전월 대비, %) : (2017.12월) 0.1 → (2018.1월) △2.0 → (2월) 1.2 → (3월) △0.4 → (4월) △0.5 → (5월) △0.2
 - ※ 제조 생산(전월 대비, %) : (2017.12월) △0.2 → (2018.1월) △1.1 → (2월) △0.6 → (3월) 0.3 → (4월) 0.4 → (5월) △0.6
 - ※ 건설 생산(전월 대비, %) : (2017.12월) 5.2 → (2018.1월) △7.6 → (2월) 3.0 → (3월) △2.3 → (4월) 2.9 → (5월) △3.4

- **(투자)** 2016~2017년간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다소 감소하겠지만, 2013년 이후 낮은 자본조달 비용과 사업 이윤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 고정자본 투자(전년 대비, %) : (2016) 2.7 → (2017) 4.7 (2018) 3.2 (2018.6월 프랑스 중앙은행 전망)
 - ※ 고정자본 투자(전분기 대비, %) : (2017.Q3) 1.4 → (2017.Q4) 0.9 → (2018.Q1) 0.1 → (2018.Q2) 0.7
 - ※ 기업환경지수 : (2018.2월) 109 → (3월) 109 → (4월) 107 → (5월) 104 → (6월) 104 → (7월) 104

- **(교역)** 글로벌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2018년에도 수출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9년과 2020년에는 유로화의 가치 상승과 유가 상승으로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 ※ 수출(전년 대비, %) : (2016) 1.5 → (2017) 4.7 → (2018) 4.1 (2018.6월 프랑스 중앙은행 전망)
 - ※ 교역수지(전분기 대비, %) : (2017.Q3) △0.4 → (2017.Q4) 0.7 → (2018.Q1) 0.0 → (2018.Q2) △0.3

다. 금리

- 2018년 하반기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상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이 예정되어 있어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 국채 금리(10년물, %) : (2018.1월) 0.859 → (2월) 0.982 → (3월) 0.835 → (4월) 0.778 → (5월) 0.781 → (6월) 0.754

라. 주식

- 2017년 들어 세계경제 회복과 마크롱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5,000선을 돌파하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 미국 금리인상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 및 자금유입 제약 등으로 보합세 전망
※ CAC40 : (2007년 말) 5511 → (2016년 말) 4862 → (2017년 말) 5312 → (2018.6.5) 5461 → (2018.7.4) 5320 → (2018.8.6) 5477

마. 물가

- 2018년에는 가스·전기 등 에너지 가격 상승, 담배세 인상에 따라 물가상승률 2% 예상
- 물가상승률은 2019년 다소 하락하겠으나, 지속적인 실업률의 하락은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되므로 2020년에는 다시 상승할 전망
※ 연도별 인플레이션율(%) : (2013) 0.9 → (2014) 0.5 → (2015) 0.0 → (2016) 0.2 → (2017) 1.0
※ 물가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 : (2018.1월) 1.3 → (2018.2월) 1.2 → (2018.3월) 1.6 → (2018.4월) 1.6 → (2018.5월) 2.0 → (2018.6월) 2.0

바. 고용

- 2017년 실업률은 9.4%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말에는 8.2%까지 하락할 전망
- 고용률은 경기회복세와 ‘기업의 경쟁과 고용을 위한 세금감면 정책(CICE)’ 등의 추진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전체실업률(%) : (2015) 10.4 → (2016) 10.1 → (2017) 9.4 → (2018.Q1) 9.2 → (2018.5월) 9.2
※ 청년실업률(%) : (2017) 22.3 → (2017.Q4) 21.5 → (2018.Q1) 21.5 → (2018.5월) 20.4
- 그간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은 낮은 경제성장률과 노동시장 경직성이 원인이었으나, 최근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정책, 감세 등 기업환경 개선 정책 등의 효과로 실업률은 다소 개선될 전망

사. 재정

- 마크롱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17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Delta 2.6\%$ 로 크게 개선되어 EU의 목표 수준(GDP 대비 3% 이하) 달성
※ 재정수지(GDP 대비 %) : (2013) $\Delta 4.0$ → (2014) $\Delta 3.9$ → (2015) $\Delta 3.6$ → (2016) $\Delta 3.4$ → (2017) $\Delta 2.6$
※ 국가채무(GDP 대비 %) : (2013) 93.3 → (2014) 94.9 → (2015) 95.6 → (2016) 96.3 → (2017) 97.0

2 마크롱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가. 프랑스 경제의 문제점

- IMF는 프랑스 경제에 대해 ①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높은 구조적인 실업률, ② 낮은 대외경쟁력, ③ 높은 수준의 재정지출과 국가부채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대·내외적 충격 요인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2018.6월)
 - ※ 재정수지(GDP 대비 %) : (2013) △4.0 → (2014) △3.9 → (2015) △3.6 → (2016) △3.4 → (2017) △2.6
 - ※ 실업률(%) : (2015) 10.4 → (2016) 10.1 → (2017) 9.4 → (2018.Q1) 9.2

나. 경제정책 방향

- 중도 성향의 親기업 자유주의적 기조 하에 ①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② 가계구매력 제고 및 기업 부담 완화, ③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점

1)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 올랑드 정부 하에서 「경제성장촉진법(마크롱법)」을 추진한 경험을 토대로 성장 및 일자리 정책 강화
 - 2018년 6월 18일 기업의 혁신, 변화, 성장,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PACTE (기업의 성장과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 법안 발표
 - ※ PACTE(Le 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 7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그중 10개 조항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이 좀 더 자유롭고 혁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 PACTE 법안은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9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
 - 프랑스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 고용, 기술혁신, 공공서비스 등 4대 주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570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Big Investment Plan) 발표·추진
 - ※ 생태계 전환 촉진 200억(재생에너지 70억, 건물 보온 설비 90억 등), 기술·고용증대 150억, 혁신·경쟁력 제고 130억(농업개혁 50억 포함), 디지털 국가 구축 90억
 - 강한 프랑스를 만들기 위한 혁신 및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자산 및 지분 매각을 통해 100억 유로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
 - ※ 매각 대상 주요 기업(정부 지분) : Engie(정부 지분 28.8%), Renault(19.74%), Safran(14%), Orange(13.45%), ADP(50.63%) 등

- 파리를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규제, 금융, 교육 분야 등의 개혁 조치들을 포함한 「파리 금융중심지 전략」 발표(2018.7.11)

※ 국제학교 신설 및 증원, 교통수단 확대, 자금지원 강화, 규제 간소화, 정착 지원 등

2) 가계구매력 제고 및 기업 부담 완화

- 가계구매력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과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를 통해 고용 및 투자 확대
 - 가계와 기업의 부담금 200억 유로 경감(5년간), 거주세 면제(전체 국민의 80%), 부유세 축소 개편 등 구매력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
 - 중소기업에 한해 2017년부터 28%로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2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대상 기업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조세 부담 경감

3) 노동유연성 제고 등 국가경쟁력 강화

-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기업 단위 단체협약 역할 강화, 부당해고에 대한 배상금 상한 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법 개혁
 - 현재 560만 명인 공무원 수를 향후 5년간 12만 명 감원하는 등 공공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공공 재정 현대화
 - 향후 5년간 공공 재정을 600억 유로 절감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모델 등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
 - 민간과 공공연금의 상이한 퇴직 연령, 연금 수준, 연금 적립 및 산정 방식을 단일 연금 체계로 개편하여 연금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

가. 대외무역 현황

- 프랑스의 수출입 규모는 꾸준히 증가, 2017년 기준 수출 세계 8위(5,350억 달러), 수입 세계 6위(6,240억 달러)의 무역대국 (『2017 WTO 세계 주요국 수출 동향(2018.2월 발표)』 기준)
 - ※ 수출 : ① 중국 ② 미국 ③ 독일 ④ 일본 ⑤ 네덜란드 ⑥ 한국 ⑦ 홍콩 ⑧ 프랑스
 - ※ 수입 : ① 미국 ② 중국 ③ 독일 ④ 일본 ⑤ 영국 ⑥ 프랑스
- 수출은 항공우주, 자동차, 의약품,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이 주력 제품이며, 수입은 자동차, 항공기, 원유, 의약품, 석유 제품이 주력 제품
- 프랑스는 수출의 59.1%, 수입의 58.8%가 EU 국가에 집중되는 등 유럽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 ※ 비EU 지역 수출 비중 : 아시아(12.8% : 중국 4%), 아메리카(11% : 미국 7.3%), 비EU 유럽(6.8%), 아프리카(6.8%), 중동(3.4%)
 - ※ 비EU 지역 수입 비중 : 아시아(17.1% : 중국 9%), 아메리카(8.8% : 미국 6.4%), 비EU 유럽(7.3%), 아프리카(4.2%), 중동(1.9%)

나. 최근 대외무역의 약화

- (수지) 프랑스는 1974년과 1982년 1·2차 석유위기 이후 무역수지가 일시적 적자로 반전한 바 있으나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무역수지 균형 유지
 - 그러나 2003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적자 반전 이후 2007년 고유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2011년 사상 최대 적자 기록
 - 2015년에는 유가 하락, 유로화 강세로 적자 규모가 456억 유로로 크게 감소
 - 2017년 경제회복에 따른 설비재 증가 및 유가 상승으로 618억 유로로 크게 증가
- (균형) 미테랑 정부 시절에는 대외무역 적자 발생시 세 차례 평가절하(1981~1983)를 통해 무역수지 균형을 도모한 바 있으나, 1992년 EU 출범 이후 환율정책을 통한 대외 불균형 조정이 제한적인 상황
 - 특히 유럽 재정위기 이후, 프랑스가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한 독일과 중저가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신흥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상황에 처함에 따라, 산업정책을 통한 근본적 대외 불균형 조정 방안을 모색 중

다. 마크롱 정부의 통상 정책

- **(목표)** 2017년까지 에너지를 제외한 무역수지 균형 달성(2011년 전체 적자 745억 유로 중 非에너지 적자 290억 유로)
- **(추진 전략)** 프랑스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수출 확대 전략, 미국 및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불공정무역에 대한 단호 대처 등 추진
 - 향후 10년간 전 세계 유망 시장 47개 국가에 대한 기존 중점 분야(자동차, 항공기, 명품) 외의 4대 중점 분야(식품-건강, 보건-의료, 도시 인프라, 정보통신) 수출 확대를 적극 도모
 - 미국·일본 등 거대경제권과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FTA 체결을 추진함과 동시에 문화, 정부 조달 등 분야에서 프랑스 고유의 리더십 발휘
 - ※ 프랑스 입장 : 시청각 서비스 등 문화산업 보호를 위한 문화적 예외 인정, 미국의 금융서비스 시장 및 공공조달 시장 개방 확대 등을 강조
 - 양자 무역 및 투자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원칙 강조 및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공세적 대응 기조 유지

【참고 : 2017년도 프랑스 대외무역 현황 분석】

■ 개요

- 2017년 프랑스 수출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4,640억 유로, 수입은 전년대비 7% 증가한 5,448억 유로를 기록
 - 교역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1조 88억 유로를 기록

최근 프랑스 교역 동향

(단위: 억 유로, 증가율 %)

구분	2015	2016	2017
수출(FOB)	4,461 (4.3)	4,432 (△0.7)	4,640 (4.7)
수입(CIF)	5,094 (1.2)	5,092 (△ 0.04)	5,448 (7.0)
교역량	9,555 (2.6)	9,524 (△0.3)	10,088 (5.9)
수 지*	△451	△483	△623

출처 : 프랑스 관세청 * FOB 수출입 실적 기준

■ 품목별 수출입

- (수출) 전통적 프랑스 강세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명품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주도하여 우주항공·농수산물의 감소세에도 전체적으로 수출액 증가 추세
 - 중국·독일·러시아 등에 대한 에어버스 판매로 항공기 수출은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6년부터 엔진 생산 계획 차질로 2년째 감소세
 - 2016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한 에너지 제품은 유가 상승으로 급반전
 - 의약품은 건강산업 활성화로 회복세로 반전
 - 향수·화장품은 2016년 감소 후 큰 폭 증가
 - 섬유·의류·신발 등 명품산업은 꾸준한 증가세

품목군 및 주요 품목별 수출

(단위: 억유로, %)

구분	2015		2016		2017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총계	4,464	4.2	4,430	△0.8	4,640	6.9
농수산물	157	6.5	143	△8.8	139	△2.7
원유·전기·광물	89	△11.3	72	△19.2	93	29.4
식료품	445	2.7	445	0.2	473	6.2
석유제품	85	△23.8	70	△18.4	86	23.0
기계·전기·전자·정보	856	5.1	851	△0.6	882	3.7
운송장비	1,034	10.4	1,062	2.8	1,074	1.1
- 자동차	425	8.6	442	3.9	484	9.6
- 항공기	579	11.1	579	△0.1	557	△3.8
기타 공산품	1,766	3.4	1,750	△0.9	1,860	6.3
- 의약품	292	3.4	293	0.4	296	1.0
- 섬유·의류·신발	222	8.3	231	4.1	243	5.2
- 목재·종이·판지	84	2.4	84	0	86	2.4
- 화공품·향수·화장품	533	1.1	518	△2.8	565	9.1
- 고무 및 플라스틱, 광물제품	181	1.1	183	1.3	190	3.8

- 철강 및 금속제품	298	1.7	279	△6.4	314	12.5
- 기타 제품(가구·보석· 게임·운동 용구 등)	156	6.1	161	3.2	166	3.1

출처 : 프랑스 통계청(방산 제외)

- (수입) 원유 및 석유제품 등 에너지 분야와 철강·화학 분야 수입 감소에도 전체적 수입이 미약하게나마 증가세

품목군 및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 억유로, %)

구 분	2017		2016		2015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입 총계(CIF)	5,448	6.9	5,092	△0.1	5,097	1.0
농수산물	145	2.9	141	7.6	131	9.1
원유·전기·광물	384	27.8	301	△20.0	376	△23.0
식료품	412	6.2	388	2.2	379	2.4
석유제품	184	18.4	155	△20.6	196	△28.3
기계·전기·전자·정보	1,148	4.7	1,096	1.3	1,081	6.6
운송장비	1,005	3.4	972	10.0	883	12.0
- 자동차	581	8.0	538	9.8	490	11.9
- 항공기	383	△2.9	394	10.6	356	13.3
기타 공산품	2,131	6.2	2,006	△0.4	2,015	3.2
- 의약품	262	3.4	253	△1.4	257	△2.9
- 섬유·의류·신발	379	3.6	366	1.4	361	7.4
- 목재·종이·판지	130	3.2	126	0.8	125	1.6
- 화공품·향수·화장품	440	7.3	410	△3.1	423	1.4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광물제품	258	6.2	243	1.3	240	3.4
- 철강 및 금속제품	389	12.8	345	△4.2	360	2.3
- 잡제품(가구·보석· 게임·운동 용구 등)	272	3.8	262	5.6	248	9.3

출처 : 프랑스 통계청(방산 제외)

■ 지역별 수출입

- (수출) EU 지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2013년 처음으로 60% 이하로 축소되었다가 60%선 회복 후 다시 60% 이하로 축소
 -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수출 감소 및 아시아, 기타 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와 함께 아메리카,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액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

주요 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 억 유로, %)

지역명	2015	비중	2016	비중	2017	비중
총수출	4,464	100	4,430	100	4,640	100
- 유럽연합 27국	2,642	59.2	2,390	54.0	2,738	59.0
- 기타 유럽	303	6.8	318	7.2	330	7.1
- 아시아	570	12.8	563	12.7	642	13.8
- 아메리카	490	11.0	483	10.9	492	10.6
- 아프리카	303	6.8	255	5.8	255	5.5
- 중동	152	3.4	141	3.2	154	3.3

주 : FOB 가격 기준(방산물자 제외), 계절 변동치 조정 후
출처 : 프랑스 관세청

- (수입) 아메리카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둔화 및 비EU 유럽,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회복과 함께 아시아, 유럽연합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 관찰

주요 지역별 수입 현황

(단위 : 억 유로, %)

지역명	2015	비중	2016	비중	2017	비중
총수입	5,097	100	5,092	100	5,442	100
- 유럽연합	2,934	57.6	2,948	57.9	3,187	58.6
- 기타 유럽	368	7.2	353	6.9	398	7.3
- 아시아	863	16.9	871	17.1	930	17.0
- 아메리카	472	9.3	482	9.5	479	8.8
- 아프리카	231	4.5	201	3.9	227	4.2
- 중동	94	1.8	85	1.7	103	1.9

주 : CIF 가격 기준(방산물자 제외)
출처 : 프랑스 관세청

■ 교역 동향 평가

- 프랑스의 무역수지는 유가 하락, 저금리, 유로화 가치 하락 등 3저 현상으로 대표되는 대외경제 여건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14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
 - 2017년 非에너지 분야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함.
- 만성적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제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산업 공동화, 2000년대 초반 정립된 '주 35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비용 급증 등 경쟁력 저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전체 수출액의 58%선을 차지하는 EU 시장 내에서도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독일에 밀리고 중저가 시장에서는 스페인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입지를 상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 존재
 - 또한 대기업에 대한 수출 실적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문제도 병존하고 있음. 프랑스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패키지형 수출,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 및 중소기업 수출 지원 강화 전략 채택을 통해 무역수지 구조 개선을 모색 중

4 산업 정책

가. 산업 현황

- 프랑스는 명목 GDP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제조업, 관광, 농업, 방위산업 등이 경제의 주축(영국 5위, 인도 7위)
 - 주력 제조업 : 항공, 방산, 조선, 의약, 건설, 화학, 섬유, 자동차
 - 관광 : 세계 최대 관광대국(연간 관광객 8,800만 명)
 - 농업 : 세계 6위 농업 생산국(대표 수출품 : 치즈, 와인)
 - 방위산업 : 세계 4위 방산 무기 수출국(2015년 174억 달러 규모)
- 유럽 재정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부진에서 벗어나 미미한 회복세를 보였던 경제가 2017년 5월 마크롱 정부 출범 이후 활력을 찾는 모습
- 경제성장률은 2012년 이후 3년간 0.2~0.7%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5~2016년 1%대 초반 성장률에 이어 2017년은 1.5% 성장

- 2011년에 GDP 대비 △5.1%였던 정부 재정건전성도 2016년에 △3.4%로 개선되는 등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긍정적 경제 흐름
- 다만 여전히 10%에 근접한 높은 실업률과 연간 5%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산업투자 등은 경제회복에 제약 요인

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 마크롱 정부는 경제성장촉진법(마크롱법)을 제정하여 노동개혁과 재정개혁 투자 확대를 통한 프랑스 경제 활력 제고를 추진 중
 - ※ 2017년 6월 하원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신생 정당(전진하는 공화국)이 압도적 승리(577석 중 313석 확보)를 거둬 따라 개혁 정책 추진에 더욱 탄력

마크롱 정부의 개혁 정책

- (재정개혁) 고소득자 부유세 폐지, 저소득층 주택 보조금 삭감, 공무원 감축
 - (노동개혁) 노동유연화 (퇴직금상한제, 해고 규정의 완화 등)
 - (투자확대) 2018~2022년까지 570억 유로(약 77조 원) 투자 계획 발표
 - (투자 규모) 570억 유로(약 77조 원)
 - (투자 분야) ①친환경(중고차 전환, 재생에너지, 건물의 열효율 제고), ②직업교육(청년실업 취업화, 공교육기관 혁신), ③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농업용 장비 혁신), ④정부 디지털화(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디지털 의료 산업화, 정부 행정 디지털화)
 - 스타트업 육성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French Tech Ticket 프로그램(창업비자, 정착자금 지원 등), 스타트업 허브(STATIONF 등)을 통해 전 세계의 창업가들을 프랑스로 유인
 - 파리 지역에만 1만 개 등 유럽 최대 스타트업 국가(50만 개로 추정)
 - 인큐베이터 265개, 연구소 850개 등 유럽 최대 R&D 센터 소재
 - 2017년 100억 유로 규모 미래산업 지원 펀드 조성 (지난 6년간 470억 유로)
- 세부 분야별 정책
- (기업 경영환경 개선) 투자 및 고용 활성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시장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 시스템 혁신 등을 추진

- 구체 방안으로 ①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② 중소·중견기업 자금 공급 확대, ③ 혁신을 통한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 진출 지원, ④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중견기업 육성, 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촉진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매력적 환경 조성, ⑥ 산업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 양성, ⑦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경영 환경 개선, ⑧ 구조개혁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 (기술·혁신 촉진) 연구개발 및 혁신 촉진, 디지털 경제 구현, 에너지 전환, 항공우주 분야 육성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20억 유로 투자 계획

※ 중점 투자 분야 : 연구개발 및 대학 캠퍼스 확충(36.5억 유로), 에너지 전환(23억 유로), 기업 혁신 촉진(17억 유로), 방위산업(15억 유로), 항공우주산업(13억 유로), 디지털 경제(6억 유로), 교육시설 현대화(5.5억 유로), 보건산업(4억 유로)

- (미래전략 산업 육성) 에너지, 건강, 디지털 및 운송 등 4대 분야 34개 산업을 민관 협력을 통해 집중 육성할 계획

※ 주요 육성 산업 분야 : 에너지(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식물성 대체연료 등), 건강(바이오 의학기술, 디지털 병원 등), 디지털(로봇,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등), 운송(무인자동차, 미래형 초고속열차, 전기 비행기 등)

5 에너지 정책

가. 정책 방향

- 前 올랑드 대통령이 추진한 ‘에너지전환법’이 2015년 7월 최종 승인된 이후 現 마크롱 정권에서는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 유지 중
 - 온실가스 배출량(1990년 대비) 2030년 40%, 2050년 75%까지 단계적으로 감축
 - 최종 에너지 소비량(2012년 대비) 2030년 20%, 205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
 - 1차 에너지 소비 중 화석연료 비중(2012년 대비) 2030년까지 30% 감축
 -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75%에서 50%로 감축(단, 설비용량은 63.2GW 유지)
- ※ 환경연대부 니콜라 율로(Nicolas HULOT) 장관은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을 50%로 축소 하는 것이 다소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발표(2017.11월)
- 2030년까지 파리기후협정 및 국가 저탄소 전략에 따라 총에너지(전력·난방·운송·가스) 소비의 32%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나. 원자력

- 프랑스 전역에 고루 분포된 19개 단지에서 총 58기(세계 2위) 원자로 운영
 - 2017년 전체 전력 생산량(529TWh)의 71.6%(379TWh)를 원자력이 담당

프랑스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 추이

(단위 : TWh)

구분	1973	1979	1985	1990	2000	2005	2010	2015	2017
화력	119	134	56	48	53	67	63	34	54
원자력	15	40	224	314	415	452	429	417	379
재생	48	68	64	58	72	58	78	95	96
전체	182	242	344	420	540	576	569	546	529

출처 : RTE, Bilan Electrique 2017

- 프랑스는 원전 보유수 및 설비용량 측면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원전강국이자 원전 발전량 기준 2위 및 세계 1위의 원전 활용국의 위상 확립

국가별 원자력발전소 보유 현황

(2018.7월, 가동 원전 수 기준)

순위	국가명	원전 수	순위	국가명	원전 수
1	미국	99기	6	한국	24기
2	프랑스	58기	7	인도	22기
3	일본	42기	8	캐나다	19기
4	러시아	37기	9	우크라이나·영국	15기
5	중국	36기	10	스웨덴	8기

출처 : IAEA, PRIS

- 프랑스는 막대한 원전 설비를 기반으로 스위스·이탈리아·영국·스페인 등 인근 국가에 잉여 전력 수출

프랑스 전력 수출입 현황

(단위 : TWh, 2016)

구분	스위스	CWE*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합계
전력수출	17.4	10.6	17.7	12.7	13.3	71.7
전력수입	7.3	15.9	1.2	2.7	5.5	32.6

* Central Western Europe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출처 : RTE, Bilan Electrique 2016

- 노동시장 경직성 등 전반적 고비용 산업구조 속에서 저렴한 전기요금은 프랑스 제조업 경쟁우위의 주요 원천
 -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EU 전체 평균보다 약 17% 저렴
 - ※ 전기요금 국가경쟁력(kWh, 2015) : 프랑스 0.11달러(21위), 한국 0.10달러(14위)
 - (출처 :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 통계 2017.2.20)

유럽 국가 가정용 전기요금 비교(2017년 상반기)

(Euro/100kWh, 세금 및 보조금 포함)

구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EU 평
전기요금	16.9	17.7	21.4	23.0	30.5	20.4

출처 : Eurostat news release 2017.11.29

다. 신재생에너지

- 프랑스는 유럽 최대 산림 보유, 수력·풍력·지열 부문 등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유럽 내 재생에너지 생산량 기준 독일 다음의 2위 국가(2015년 기준)
 - 재생에너지는 프랑스 전체 1차 에너지 생산 규모 대비 14.6% 차지

프랑스의 1차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원별 구성 추이

(단위 : Mtep, %)

구분	1973	1979	1985	1990	2000	2005	2010	2013	2015	2016	
											비중
석탄	17.3	13.3	10.9	7.7	2.3	0.3	0.1	0.2	0.0	0.0	0.0%
석유	2.2	2.2	3.3	3.5	1.7	1.5	1.8	1.0	1.2	0.9	0.7%
천연가스	6.3	6.5	4.5	2.5	1.5	0.9	0.6	0.3	0.0	0.0	0.0%
원자력	3.8	10.4	58.4	81.7	108.2	117.7	111.7	110.4	114.0	112.8	84.7%
재생	13.9	15.3	16.6	15.7	17.3	17.4	24.3	24.3	24.7	19.4	14.6%
전체	44	48	94	111	131	137	137	136	140	133.1	100.0%

출처 : INSEE, Bilan énergétique 2018

- 목재·바이오연료·소수력 등 전통적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반면, 풍력·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은 수준
 - 2016년 현재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 비중은 목재에너지 42%, 소수력발전 20%, 바이오연료 9%, 풍력발전 7%, 태양광 3% 등 순

프랑스 신재생에너지 현황(2016)

(단위 : Ktep, %)

구분	목재	소수력	바이오연료	열펌프	풍력	폐기물	바이오가스	태양광	지열	태양열
생산량	11,252	5,287	2,418	2,182	1,846	1,551	774	744	324	166
비중	42	20	9	8	7	6	3	3	1	1

출처 : INSEE, Production d'énergie primaire 2017

6 과학기술 정책

가. 개요

- 프랑스 과학기술 정책은 경제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중요한 도전과제에 과학기술을 통해 보다 더 잘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구 혁신 정책 방향은 기초 연구의 안정적인 추진, 중장기 관점에서 실패 위험이 큰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는 것임.
- 또한 혁신 활동을 정책의 제1우선순위로 삼고 기술 기반 창업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연구자의 이동성(모빌리티) 강화, 기업 내 혁신 활동 강조 등을 중점 추진 중

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방향

- 5년마다 SNR(Stratégie nationale de recherche, 국가연구개발전략) 수립
 - 21세기를 향한 10개의 도전과제(Défi)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5개 이슈(5 Programmes d'Actions)를 설정하고 정부재정 투입
 - ※ 10개의 도전과제 : 기후변화 대응, 적정·안전·효율적인 에너지, 산업의 재구조화, 건강과 복지, 고령화 및 인구 문제, 교통 및 지속가능한 도시 시스템, 정보 및 통신사회, 혁신기업 창출, 우주에의 도전, 유럽 시민의 자유와 안전
 - ※ 5개 이슈 : 빅데이터, 지구환경시스템(관측, 예측, 적응), 시스템생물학과 그 활용, 연구와 임상의 연계, 인간과 문화
 - 이 도전과제는 매년 발표되는 행동계획(Plan d'action)*에 반영되어 공공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실행
 - * 프랑스의 공공연구 지원기관인 ANR(l'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에서 매년 수립

다. 주요 현황 (출처: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발간 자료, 2018.7월)

- 프랑스 국내 총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는 498억 유로(2015), 2016년 추정치는 501억 유로
 - GDP 대비 비중은 2.27% (한국 4.2%, 이스라엘 4.2%, 독일 2.9% 등)
 - 기업 부문의 연구개발비는 318억 유로 (전체의 64%, 한국은 78%)
 - 중장기 고등교육 및 연구개발투자 프로그램(PIA, Investissements d'avenir)에 1단계(2010~) 297억 유로, 2단계(2014~) 53억 유로, 3단계(2017~) 59억 유로

- 연구개발 활동 종사 인력은 57만 5,300명(상근 상당 인력 기준으로는 41만 7,000명)
 - 연구원 수는 26만 6,700명(상근 상당 인력 기준)
 - 연구원 중 여성은 26%
 -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9.3명
 - 매년 박사학위자 1만 4,500명 배출
- 과학 논문 수 세계 7위, EU 특허 세계 4위
 - EU Horizon 2020 프로그램 예산의 10.6%를 수혜

7 농업 정책

가. 농업 현황

- **(재배 면적)** 프랑스 농경지 면적은 약 2,773만 ha에 이르며, 프랑스 국토 면적의 54%, EU 전체 농경지의 1/3
- **(농가 규모)** 농업경영체 수는 30년 전 대비 53.6% 감소한 반면, 기계화 비율 증가로 대규모 경영체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
 - ※ 농업 경영체 수 : (1988) 101만 7,000개소 → (2017) 47만 2,000개소
- **(농업 인구)** 전체 인구의 1.63%를 구성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평균연령은 젊은층 유입으로 2005년 대비 0.8세 하락
 - ※ 농업인구 : (2010) 127만 명 → (2017) 90만 명
 - ※ 평균연령 : (2005) 50.1세 → (2013) 49.3세

나. 생산 규모

- 프랑스는 세계 제6위 농업생산국으로 2016년도 프랑스 농업 생산은 EU 총 농업 생산 가치의 17%를 차지
 - 생산 가치 : 2016년도 기준 농업의 생산 가치는 약 420억 달러에 이르며, 프랑스 전체 GDP 중 1.7%를 구성
 - ※ 국가 총 GDP 대비 농업 생산(%) : (2012) 1.8 → (2013) 1.6 → (2014) 1.7 → (2015) 1.4 → (2016) 1.7

- (주요 생산) 주요 농업 생산 품목은 밀, 보리, 옥수수, 감자, 사탕무, 포도주, 낙농제품 등
- 우유 및 와인의 생산은 각각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EU에서 두 번째로 활발하며, 단일 품목으로는 사탕무 생산이 세계 1위

다. 수출입

- 2017년도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입은 수출이 국가 총 무역 교역의 13.2%, 수입이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무역흑자 구조를 보임.

프랑스 농수산물식품 수출입 실적

(단위: 천 달러)

구분	수입		수출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4,604	56,068,426	7,650	65,426,517
수산물	87	8,407,025	37	5,018,463
합계	4,691	64,475,451	7,687	70,444,980

출처 : Global Trade Atlas (2017)

- (수출) 프랑스 농수산물식품 수출의 62.8%는 EU 내 거래로 이뤄짐. 주요 수출품은 와인, 통조림식품, 육류, 유제품, 곡물 등
※ 주요 수출국 : ① 벨기에 ② 독일 ③ 영국 ④ 이탈리아 ⑤ 스페인
- (수입) 수입은 수출 대비 EU 의존도가 더 크게 나타나며, 전체 농수산물식품 수입의 약 79.7%. 주요 수입 품목은 육류 및 부산물, 곡물 조리 식품, 음료, 주류 등
※ 주요 수입국 : ① 벨기에 ② 네덜란드 ③ 스페인 ④ 이탈리아 ⑤ 영국

라. 우리나라와의 교역

- 對프랑스 농업 교역은 한-EU FTA 적용으로 상호 혜택을 유지함.
- (수출 현황) 한국의 對프랑스 농수산물식품 수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준 수출액은 8,400만 달러를 달성. 분류별로는 수산물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음.
※ 2017년도 부류별 수출 비중(%) : 수산물(76.9), 농산물(23.6), 임산물(1.1), 축산물(0.6)

- (수출 품목) 주요 수출 품목은 수산물, 음료, 과자, 인스턴트 면입.
 - (수산물) 프랑스는 국경이 바다와 인접함에도 불구하고 어패류 수입이 활발함. 최근 3년간 수산물 수출은 전체 농수산물식품 수출의 30%를 초과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참치, 김, 게살 등임.

對프랑스 수출 상위 품목(금액 기준)

(단위: 천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1	참치	39,200	참치	42,879	참치	49,951
2	다랑어	37,265	혼합조제 식료품	5,619	다랑어	48,882
3	혼합조제 식료품	4,569	김	2,573	혼합조제 식료품	8,718
4	김	3,016	라면	2,047	김	5,233
5	가리비조개	1,511	황다랑어	808	연어	2,769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KATI 농식품수출 정보)

PART 5

국 방

1. 국방 정책
2. 방위산업 동향
3. 프랑스군 개혁
4. 프랑스 참전협회 현황



1 국방 정책

가. 목표

- 국가 영토와 국민의 보호
- 프랑스 국익 보호
- EU 및 세계 평화에 기여

나. 군사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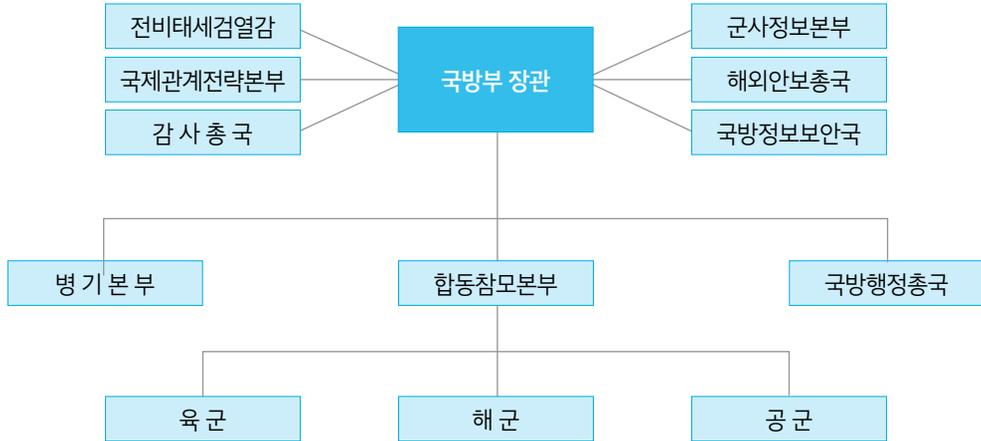
- 인지·예측 : 단독·연합작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위한 독자적 정보 능력 강화
- 위기 예방 : 외교, 정보력, 전진배치부대(해외영토 등)를 토대로 위협 및 세계 위기 예방
- 보호 : 군사위협, 재해 등 모든 위기 및 위협 상황에서 국가 수호 및 국민 보호
- 전력투사 : 유럽 공동방위에 기여하고 세계적 위기 해결에 참가할 투사 전력 확보
- 핵억지 전력 유지 : 안전보장의 최후 수단으로 핵억지 전력 유지

다. 통수 계통

- 대통령
 - 국군통수권자
 - 핵무기 사용권자
- 총리
 - 국방(군방위, 민방위, 경제방위) 책임자, 국방안보사무총장 관장

라. 국방 일반 현황

- 국방부 편성



- 국방비 : 2018년 GDP의 1.82%

(단위 : 억 유로)

구분	2016	2017	2018
경상운영비	144	154	159
방위력 개선비	176	173	185
총 국방 예산	320	327	344

※ 2018년 방위력 개선비 중 핵억지력 분야 : 40.4억 유로(21.9%)

- 병력(2017)

(단위 : 명)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통합군*	계
병력	120,560	38,296	46,239	60,363	265,458

* 통합군 : 병기본부, 의무국, 유류국, 국방정보본부 등 통합군 기관 근무인력

마. 국방 정책 결정 기관

- 각료회의
 - 대통령 주재
 - 국방 일반 정책 및 군사계획법안(6개년 계획) 결정
 - 국방조직법 및 기타 국방에 관한 일반 법안의 채택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군인에게 부여된 제반 기본적 신분 보장에 관한 결정

바. 기타 국방 관련 기관

- 국방안보사무총국(SGDSN)
 - 총리 직속 기관
 -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보회의 행정사무담당
 - 국방(군방위, 민방위, 경제방위)에 관한 정부 각 부처의 협력 조율
- 의 회
 - 상·하 양원에 각각 상설 국방위원회 편성
 - 상정된 국방에 관한 법률안, 제의 등을 가결 : 계엄 12일 이상 연장 및 선전포고는 의회 승인 필요
 - 해외파병은 대통령이 결정하고 의회의 동의 요청 불필요
 - ※ 단, 파병 기간이 4개월 이상 연장될 경우 의회 승인 필요

사. 대외 파병 동향(2018.7월 기준)

- 대외작전 병력 : 약 7,000명
 - 사헬·사하라(4,500), 이라크·시리아(1,100), 레바논(700) 등
- 외국에 설치한 군기지 주둔 병력 : 3,750명
 - 지부티(1,450), 코트디부아르(950), UAE(650), 가봉(350), 세네갈(350)
- 해외영토 주둔군 : 약 7,000명
 - 기아나(2,100), 레위니옹(1,600), 뉴칼레도니아(1,450), 폴리네시아(900) 등
 - ※ 프랑스는 2015년 1월 파리 테러 이후 1만여 명을 국내 작전에 상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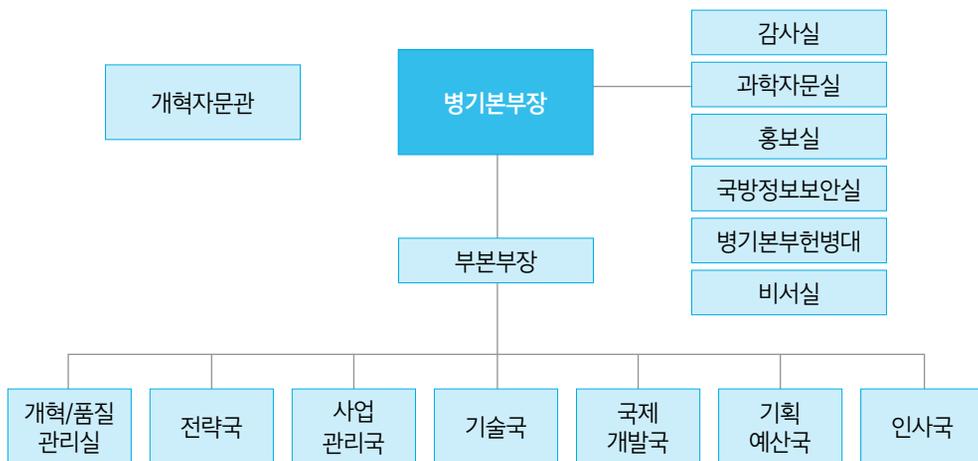
2 방위산업 동향

가. 개요

- 자주국방을 목표로 군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무기를 자체 개발 생산
-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 독자적 전략 구사를 위한 핵심 방산 기술 확보 노력
- 국방부 예하 병기본부(DGA)에서 무기 획득 사업 주도
 - ※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합참 및 국방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총국과 국방부 3대 축 구성

나. 병기본부 현황

- 조직도



- 인원 현황(2017) : 9,600명
- 임 무
 - 국방획득사업 관리 및 무기 체계 조달
 - ※ 국가 제1투자기관

- 미래 무기 체계 준비 및 연구/산업정책 입안
 - ※ 유럽 제의 국방 연구기관
- 무기 수출 통제 및 방산 수출 지원

다. 방위산업 현황

- 정부가 효율적인 방산정책을 입안하고 10여 개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4,000여 개 중소 기업이 협력업체로 참가
- 정부는 동일 분야에서 국내 업체 간의 경쟁을 피하고 각 업체별로 전문 분야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경쟁력 강화
 - ※ Airbus Group(민항기, 헬기, 우주), 다쓰항공사(전투기, 제트기), Naval Group(해상무기), Nexter(지상 무기), 사프란(항공기/헬기/위성발사체 엔진, 항법장치), 탈레스(레이더, 정보통신, 전자), MBDA(미사일) 등 분야별로 대표적 기업 육성
- 정부가 주요 방산업체의 일정 주식을 보유하여 업체 통제

국가 지분 보유 현황 예 (2017.12월 기준)

Airbus Group (우주항공)	THALES (방위전자)	NEXTER (지상)	SAFRAN (방위전자)	Naval Group (해상)
11.1%	25.8%	100%	13.1%	62.25%

- 2017년도 방산 수출 : 69억 유로
 - 2016년 140억 유로 대비 대폭 감소
 - 지역별 수출 분포 : 중동 69%, 아·태지역 17% 등
 - 2016년 대비 수출 감소 이유 : 원유 생산국들이 경기침체로 일부 획득 사업 연기 및 2017년 수주한 카타르 라팔기(12대) 수출 성과가 2017년 미반영 등

라. 對한국 주요 무기 수출

- 에어버스 헬리콥터(Airbus Helicopters) 민수 헬기(LCH) 및 소형 무장헬기(LAH) 사업
 - 사업비 : LCH 9,500억 원, LAH 6,500억 원
 - 수 량 : 300대
 - 개 발 : LCH 2021년, LAH 2022년

- Airbus A330 MRTT 공중급유기 사업
 - 수 량 : 공중급유기 4대
 - 인도 기한 : 2019년

3 프랑스군 개혁

가. 개혁 배경

- 냉전 종식으로 국경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위협은 사라졌으나, 세계 도처에서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투사전력 필요
- 1·2차 걸프전과 아프간 파병을 통해 미국 대비 전력(정보, 장거리 투사) 부족을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군 개혁 필요성 대두
- 프랑스의 국익 보호를 위한 효율적 전력 확보

나. 단계별 개혁 추진 현황

- 2015년 1월 발생한 파리 테러에 따라 국내 영토 보호 임무 수행 인원 확보를 위해 군사계획법 수정

다. 5단계(2019~2025) 군사계획법 세부 개혁

- 4단계 중점 과제 지속 추진
 - 7개 여단(7만 7,000명)에 해당하는 지상군 투사능력 확보, 정보수집 및 지휘통신체계, 사이버 보안 분야, 특수부대 전력 강화 등
- 군 병력 증원 및 지상군 개편
 - 2015년 1월 발생한 파리 테러에 따라 국내 영토 상시 보호 필요성으로 2~3단계에서 계획했던 인원 감축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오히려 증원
 - 현대화 장비로 무장한 스킵피언 합동전력을 중심으로 육군 조직의 대대적 개혁 (지상군 사령부+5개 사령부)

- 군 모델에 상응하는 예산 책정
 - 2025년경 GDP 2%의 방위비 달성을 목표로 2019~2025년 총예산은 2,950억 유로 (4단계 총예산은 1,641.1억 유로)이며, 특히 전력 우세 유지에 필수적인 장비 획득 및 대외 작전, 선행 연구 등에 초점
 - 또한 장병들의 사기 진작 및 군-국민 간의 유대 강화 노력

라. 프랑스 군 당면 과제

- 프랑스군 모델 유지 :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지속적 국방비 감축 압박으로 전투 태세 유지 고전
- 국민과의 유대감 유지 : 모병제 전환 이후 청소년 대상으로 1일간의 안보소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 유능한 자원 모집 : 인력감축과 동시에 작전력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능한 자원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으로 모병 관련 적극적 홍보 활동과 전역 군인에 대한 전직 지원 및 근로복지 환경 보완 필요

구분	1단계 (1997~2002)	2단계 (2003~2008)	3단계 (2009~2014)	4단계 (2014~2019)	5단계 (2019~2025)
기본 문서	• 1997~2002 군사계획법	• 2003~2008 군사계획법	• 정부 공공정책 개선안 (2008.5월) • 국방안보백서 (2008.6월) 2009~2014 군사계획법	• 국방안보백서 (2013.5월) • 2014~2019 군사계획법 (2013.12월) • 2015~2019 군사계획법 수정안(2015.7월)	• 국가전략문서 (2017.10월) • 2019~2025 군사계획법안 (2018.6월 상하원 통과)
중점 과제	• 직업군인제 시행 • 군 감축 • 방산업 구조조정	• 직업군인제 정착 • 주요 장비 현대화 • 장비가동률 개선	• 국방부 경영 효율성 제고 • 각 군 조직 완비 • 육·해·공군 지원 조직 통합	• 3단계 중점 과제 지속 추진 • 감축 노력 지속 • 사이버·정보 분야 강화	• 4단계 중점 과제 지속 추진 • 스콜피언 합동 전력 중심으로 지상군 개편 • 사이버·정보· 특수부대 분야 강화

- 장병 사기 진작 : 수년 동안 지속적인 병력 감축 및 조직 개편 등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고 잦은 대외작전 파병으로 장병들의 사기 진작 필요

마. 2025년 프랑스 주요 보유 장비(목표)

- 육군 : 중전차 200, 경전차 250, 다목적/전투장갑차 2,700, 기동헬기 115, 정찰/공격헬기 147, 전술무인기 30
- 해군 : 핵미사일발사 전략원잠함 4, 공격원잠함(루비 혹은 바라쿠다급) 6, 지휘투사함(상륙함) 3, 프리게이트함 15, 개량정찰기 15, NH90기동헬기 27, 함재기(라팔기) 40
- 공군 : 전투기 185, 전술수송기 50, 조기경보기 4, 다목적급유기 12, 중고도장기체공무인기 12

4 프랑스 참전협회 현황

가. 단체 연혁

- 1954년 11월 6일 창설(Association Nationale des Anciens des Forces Françaises de l'O.N.U. et du Régiment de Corée)
 - ※ 휴전 후 프랑스 육군은 한국전 참전대대(Bataillon)를 단 한국연대(Régiment de Corée)라는 부대명을 유지하여 인도차이나전(1953~1954) 및 알제리전(1955~1962) 참전
- 2004년 11월 13일 협회명 개칭(ANAAFF : Association Nationale des Anciens et Amis des Forces Françaises de l'O.N.U. du Régiment de Corée et du 156ème Régiment d'Infanterie)

나. 설립 목적

- 한국전 참전 긍지 고취 및 참전용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다. 조직

- 회장 : 파트릭 보두앙(Patrick Beaudoin, 파리 근교 생-망데 시장, 前 하원의원)
- 임원 : 총 18명
- 회원수 : 387명(한국전 참전용사는 83여 명)
 - ※ 대부분이 연로하여 행사 참여 인원 저조

- 예산 : 회원 회비(연 28유로) 및 국방부 향군성 지원금으로 운영
- 회지 : 연 1회 <르 피통(Le Piton)> 회지 발간

라. 주요 활동

- 연례행사
 - 6·25 참전 기념행사 : 매년 6월 25일
 - 단장의 능선 전투 추모 행사 : 매년 10월 12일
 - 구필부대 추모 행사 : 매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
 - 8개 참전협회 지역 행사
- 지회 행사 : 지회별 연 1회 행사

마. 참전협회 현안

- 한국전 참전 장병 신원 확인 및 인명사전 편찬 작업
- 한국에 설치된 13개 참전기념비를 중심으로 참전대대 전적지 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양국 국민에게 참전사 홍보 및 참전 정신 전승
- 참전용사들이 고령으로 향후 참전협회 유지를 위하여 후손들의 참전협회 가입 적극 유도

바. 한국전 참전 현황

- 최초 참전일 : 1950년 11월 29일 부산항 도착
- 참전 규모 : 연인원 3,421명
 - ※ 보병 1개 대대 : 자원병으로 구성되어 美 2사단에 배속 전투
- 사상자 : 전사 262명, 부상 1,008명, 포로 12명, 실종 7명 등
 - ※ 부산 유엔 묘지에 44기 안장
- 주요 전투 : 지평리 전투(1951.2.12~15, 양평), 단장의 능선 전투(1951.9.13~10.13, 양구) 등
대소 16회 전투

PART 6

사회·문화·교육

1. 종교
2. 사회복지
3. 문화·예술
4. 언론 방송
5. 교육
6. 국민 생활



1 종교

- 인구의 43% 정도가 가톨릭 신자이나,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가톨릭 교리에 따라 일요 미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공화국 전통에 따라 강력한 '세속주의' 이행
- 1905년 정교분리법이 공포되었으며, 교황과 정부 간 화친조약(Concordat, 1801년 체결)은 프랑스 영토에서 효력 상실
 - 단, 독일 점령 지역으로서 1차 대전 후 프랑스 영토로 회복된 알자스·로렌 지방에 한하여 아직도 화친조약이 유효하여 정부가 성직자의 보수, 교회 운영비 등을 부담
- 과거 프랑스 식민지 지역 이민자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이슬람교도가 증가해 이슬람교도는 전체 인구의 6%, 유대교도는 약 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
 - 단, 1978년 법은 종교·인종 등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인구조사시 종교 관련 통계가 없어 정부의 공식 통계 부재

2 사회복지

가. 현황

- 프랑스는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비 지출
 - 2016년 기준 GDP 대비 1인당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31.5%로 OECD 국가 중 핀란드와 공동 1위(스웨덴 28.3%, 노르웨이 25.1%, 독일 25.3%, 영국 21.5%, 한국 10.4%, OECD 평균 21%)
- 사회보장 범위는 광범위, 보장 체계는 모자이크식 구성
 - 출생, 보육, 교육, 건강, 실업, 연금, 노인복지까지 전 생애를 포괄하며, 특히 가족수당 등 보장 수준이 매우 포괄적
 - 사회보장 체계는 수평적으로는 일반 직장인, 공공업무 종사자, 자영업자, 농업종사자 등 부문별로 구분되어 있고, 수직적으로는 기초제도, 보충제도, 추가제도 등 단계별로 구분

- 국가의 책임 지속 확대
 - 고용주와 근로자가 재원을 함께 부담하고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비스마르크식’ 보장 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베버리지식’ 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보험의 보상 수준이 미흡하거나 보험 가입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혜택 부여
 - 19세기 말 사회보장제도 초기에는 국가의 역할이 보조자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에는 최종 책임이 국가로 귀속되는 경향

나. 문제점

- 재정적자 심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프랑스는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최근 각고의 적자 해소 노력으로 회복기로 진입 (GDP 대비 2009년 7.2%, 2010년 7.1%, 2011년 5.2%에서 2017년 2.6%)
 - 사회보장 분야의 재정적자는 최근 점진적으로 감소 중으로 2018년에는 2001년 이래 최소로 줄 것으로 예상(2017년 5.2%, 2018년 2.2% 예상)
 - 특히 연금 부문은 재정적자가 가시적으로 개선 추세(2014년 115억 유로 적자 → 2016년 44억 유로)이며 2022년에는 GDP의 0.1%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
- 복지병 부작용
 - 과도한 사회보장은 고실업(2017년 9.2%)과 저성장(2017년 2.0%)의 일부 원인으로 지적
 - 프랑스는 조세부담률(2018년 45.4%)은 높은 반면, 실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이 많아 취업자와 실업자 간 가처분소득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문제 노정

다. 사회보장제도 개혁 필요성

- 프랑스는 1990년 재정법(La loi de finances)을 개편하면서 1991년부터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을 기존의 사회보험료에서 조세 중심 체계인 일반사회기여금으로 전환하였고 2015년 현재 전체 세율의 23%를 사회보장제도에 투입
- 올란드 정부에 이어 현 마크롱 정부는 연금·가족수당·실업수당을 비롯한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직업별 차별화된 제도를 단일화하며 사회보장 지출을 감소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지향
 - 마크롱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은 일반사회보장분담금(CSG: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의 개편과 연관됨.
 - ※ 세율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하며 기여금은 노후소득보장, 의료보장, 가족정책(또는 저출산 대책)에 집중적으로 투입

라. 최근 사회보장제도 개혁 동향

- 연금 개혁
 -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연금제도를 포인트 및 근무년수를 산출 기준으로 하여 단일화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연금 개혁을 2019년 여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상정
 - 2018년 6월 28일 신철도개혁법 공포로 현재까지 철도 종사자에 대한 특별사회보장제도 및 연금제도를 대폭 수정(2020.11부터 적용)하는 등 분야별 차별화된 산출 방식의 연금제도를 단일포인트제도로 수렴해 가는 노력 중
 - ※ 올랑드 前 정부는 연금적자 해소를 위한 개혁을 통해 2016년 연금제도 지출 적자를 완전 해소했지만 2018년에는 총 2억 유로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며, 2021년 기준 30억 유로로 재확대될 위험 잔재
- 가족수당 개혁
 - 마크롱 정부는 2018년 3월 여당 하원의원의 보고서 발표를 통해 現 정부가 계획 중인 가족정책의 기초를 제시하였으나 부유층 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폐지하고 최소빈곤층에 집중하는 내용은 현재까지 이어온 보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3 문화·예술

가. 개요

- 프랑스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정책 및 관광산업이 크게 발달
 - 문화콘텐츠 분야 시장 규모 445억 유로(전체 경제 규모의 2.2%), 고용인원 57만 8천 명 (2015년 기준, 2018 문화부 연감)
 - 연간 8,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 제1위 방문국(프랑스 외교부 발표, 2017년 기준)
- 앙드레 말로, 자크 랑 등 유명한 문화부장관들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문화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중시해 왔고, 국민들은 높은 문화 수준과 수용성 보유
 - 루브르·오르세·퐁피두 등 세계적인 미술관 소재, 연중 프랑스 전역에서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 개최로,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풍부
 - 또한 지중해·대서양에 접한 지정학적 위치 및 과거 해외 식민지 지배 등으로 오래전부터 외국 문물이 활발히 수입되어 외국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편

- 프랑스의 문화정책상 중요 가치는 ‘문화다양성(Diversité Culturelle)’으로, 이는 영화 등 대중문화 시장에서의 영미권 독점에 대항하려는 측면이 있으며, 이민자들이 국민의 1/6에 해당하는 프랑스 사회를 감안, 사회통합 정책과도 직결
 - 프랑스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주도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 내 ‘문화적 예외’ 규정을 주장해 오고 있는바, 국내적으로도 시청각최고심의회(CSA :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에서 TV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 기준을 정하고 모니터링 실시

나. 문화예술정책

- 프랑스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 정책 실시
- 주된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예술 창작 활동 지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문화 발전 ▲문화산업 개발 및 신기술을 통한 문화유산 대중화 ▲프랑스 문화예술 세계화 등
- 프랑스 문화를 해외에 홍보하고 또 외국의 주요 문화들을 프랑스에 소개하는 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
 - 앙스티튜 프랑세(Institut Français) : 외교부와 문화부 산하 기관으로 프랑스 정부 차원의 국제 문화 교류 정책 시행 담당. 우리나라 포함 전 세계 80개 지부 보유
 - 알리안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 : 1883년에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외교부와 협력 하여 해외 프랑스어 교육 담당. 우리나라 포함 137개국에 800개 이상의 지부 보유
- 프랑스 문화부 프랑수아즈 니센(Françoise Nyssen) 장관은 2018년 문화부 예산안(36억 유로)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성 및 세부 계획 발표
 - 문화부 예산 포함 문화 관련 예산 : 2018년 100억 유로, 2017년 100억 유로, 2016년 79억 유로, 2015년 70억 유로, 2014년 72.6억 유로, 2013년 73.6억 유로, 2012년 74억 유로, 2011년 73.4억 유로
 - ※ 2018 문화정책 로드맵
 - 정부 차원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접근성 향상 지원
 -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가 있는 삶 실현
 - 문화를 통한 유럽 재건
 - 예술 창작과 프랑스식 문화 다양성 모델 보존 지원
 - 미디어의 독립 및 다양성, 역동성 보장 및 지원

다. 분야별 주요 현황

1) 영화

- 정부는 영화 제작 및 영화관 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며, 예술영화, 상업성이 희박한 고전작품 등에 대해 세제 혜택 부여
- 문화부 산하 국립영화영상센터(CNC :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소장 : 프레데릭 브르딩Frédérique Bredin)
 - 할리우드 영화의 프랑스 영화 산업 잠식을 막기 위해 도입된 '문화 다양성을 위한 문화적 예외' 개념을 기반으로 1946년 설립된 문화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영화 관련 법률 및 국가지원제도 전담
 - 영화 및 각종 영상물 제작 지원, 영화 및 시청각 자료 배급, 디지털화 등의 영화 및 영상산업 지원(예산 : 약 7억 2,400만 유로, 2018년 기준)
 - 유럽 영화의 TV 방영 쿼터, 제작 쿼터, 낙후된 지방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소재 제작사 지원 등이 대표적
 - ※ TV 방송의 경우, 최소 60%의 유럽 제작 영상(영화 포함), 최소 40%의 프랑스 제작 영상을 특정 시간대(프라임타임 포함)에 편성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음. 더불어 넷플릭스(Netflix) 등 해외 기반 VOD 서비스 기업의 경우 최소 30%의 유럽 제작 영상물을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2017년 5월 유럽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 예정
- 프랑스에서는 전국에서 연중 다양한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영화제로는 매년 2만 5천여 명의 영화계 인사가 참가하는 칸 영화제가 있음.
 - ※ 제71회 칸영화제(2018)에는 4만여 명의 영화계 관련 인사가 참여했으며, 20만 명의 관객을 동원. 이창동 감독의 <버닝> 포함 총 21개 작품이 경쟁 부문에 진출. 윤종빈 감독의 <공작>이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에 공식 초청, 구상범 감독의 단편 <우체통>은 비경쟁 단편 부문에, 김철휘 감독의 단편 <모범시민>은 비평주간에서 소개됨.
 - 그 밖에 안시(Annecy) 애니메이션 영화제, 꼬냑(Cognac) 탐정영화제, 클레르몽 페랑(Clermont-Ferrand) 단편영화제, 크레테이유(Creteil) 여성영화제, 낭트(Nantes) 3대륙 아시아영화제, 브줄(Vesoul) 국제아시아영화제 등이 있음.
 - ※ 영화 분야 주요 통계 (2018 문화부 연감, 2016년 기준)
 - 극장 및 상영관 수 : 2,033개 극장, 5,741 상영관 존재(프랑스, 유럽 내 상영관 수 최대로 보유 / 독일(4,637), 영국(3,947) 등)
 - 제작 편수 총 284편 (전년대비 16편 감소)
 - 극장 개봉 영화수 : 7,760편 (신작 716편, 전년대비 62편 증가)
 - 영화 관람객 수 : 2억 1,300만 명 (전년대비 1.8% 감소)
 - 영화 제작 투자금액 : 13억 8,900유로 (전년대비 10% 증가)

2) 시각 및 조형예술

- 프랑스에는 1,220개의 미술관 및 박물관(11% 수도권 소재), 2,200여 개의 현대미술 화랑이 있으며, 시각 및 조형예술계 종사자는 18만 2,000여 명으로 조사(2017년 기준)
 - 국·공립박물관에 2억 1,000만 점 이상의 예술품 소장
 -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박물관,蓬피두 현대미술관, 깨브랑리 박물관, 기메 박물관, 오랑주리 미술관, 피카소 미술관 등이 유명
 - 프랑스 주요 박물관 방문객 수 (2016년 기준)
 - 루브르 박물관 : 740만 명
 - 오르세 미술관 : 300만 명
 - 蓬피두 미술관 : 330만 명
 - 파리과학산업박물관 : 220만 명
 - ※ 총 5,970만 명의 관객이 970개의 박물관 방문 (2018 문화부 연감, 2016년 기준, 전년대비 2% 감소)
- 조형예술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건물 신축시 건축비의 1%를 건물 내외부 미술품 장식에 사용하도록 규정 (1% Artistique 정책)
-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미술시장으로 FIAC 국제현대미술 아트페어와 ART PARIS ART FAIR 현대미술 박람회, PARIS PHOTO 사진 박람회 등이 있음.
 - ※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FIAC 국제현대미술 아트페어에는 전 세계 30개국 193개 갤러리 참가, 7.3만여 명 관람. ART PARIS ART FAIR에 139개 갤러리 참가, 약 1.5만 명 관람, PARIS PHOTO에는 149개의 갤러리 참가, 6.2만 관람객 동원(2017년 기준)

3) 음악

- 파리국립오페라단(Opéra national de Paris), 파리 필하모니 관현악단(Philharmonie de Paris), 국립오케스트라(Orchestre national de France), 라디오 프랑스 교향악단(Orchestre Philharmonie de Radio France)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
- 정부는 국립 오페라단, 교향악단, 발레단 등 각종 공연예술기관에 정부보조금 지급
- 2개의 국립음악무용원(파리, 리옹), 44개의 도립예술원, 109개의 시립예술원*이 있음 (2018년 기준)
 - 총 학생수는 15만 9,000여 명, 전문교육자는 9,274여 명
 - * 예술원은 음악·무용·연극 등 무대예술 전문교육기관을 지칭
- 매년 6월 21일을 ‘음악축제의 날(Fête de la Musique)’로 정하고, 프랑스 전역에서 다양한 음악 행사 개최

※ 롱-티보(Long-Thibaud) 음악콩쿠르

- 국제적 권위의 클래식 음악 콩쿠르로, 매년 1회 격년으로 각각 바이올린, 피아노, 성악(2011년부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
- 1999년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5위를, 2001년 피아니스트 임동혁, 2008년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가 각각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1년 심기완이 성악 부문 대상, 2012년 대회에서는 피아니스트 안종도가 1위 없는 2위(박주영 4위, 원재연 5위), 2014년 민경지(바이올린)가 4위, 2015년 박주현(피아노)이 1위 없는 4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둠(2018년 7월자 롱-티보 콩쿠르 공식 웹사이트)

※ 음악 및 무용 분야 통계 (2018 문화부 연감)

- 파리국립오페라 상연 횟수 355회, 관람객 86만 4천 명 (2016-2017시즌)
- 국립 필하모니 파리 콘서트 공연 횟수 384회, 관객 52만 명 (2016)
- 프랑스 내 13개의 국립/시립 오페라 공연 수 1,530개, 관객 128만 명 (2016)
- 국립무용센터 19개의 상연 횟수 1,154회, 관객 69만 명 (2015-2016 시즌)
- 대중음악 콘서트 63,300개, 관람 인원 2,670만 명 (2016)

- 프랑스는 정책적으로 클래식, 오페라, 대중음악, 록, 재즈, 전통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지원하며, 3만 2,727명이 직업 음악인으로 활동 중 (2018 문화부연감, 2015년 기준)

4) 도서출판

- 프랑스는 연간 10만여 권의 책이 출간되고 7,700개소의 공영도서관이 존재하는 등 국민들의 도서 소비 및 독서가 많은 편(2018 문화부연감, 2016년 기준)
 - 15세 이상 프랑스인 84%(남성 89%, 여성 93%)이 연간 한 권 이상, 49%의 프랑스인이 매일 책을 읽는 것으로 조사됨(국립도서센터, 2017년 기준)
 - 40%의 프랑스인이 일 년에 한 번 이상 거주지 인근 도서관을 찾는 것으로 조사됨(2018, 문화부)
- 사르트르(Sartre), 지드(Gide), 카뮈(Camus), 모디아노(Modiano), 르 클레지오(J. M. G. Le Clézio) 등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15명을 배출한 나라로, 국내 문학상으로는 190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공쿠르(Prix Goncourt)’상이 가장 유명
- 출판조합에서 1981년부터 매년 파리에서 ‘국제도서전시회’ 개최
 - 2018년 38회째를 맞은 파리 국제도서전시회는 러시아를 주빈국으로 하여 50개국 3천 명의 작가가 참가했으며, 3만 명이 방문(2017년 2만 2천 명)
 - ※ 도서 분야 주요 통계(2018 문화부 연감, 2016년 기준)
 - 총 출간 서적 : 103,500권(신간 47,200권)
 - 총 판매부수 : 4억 3,500만 권 (5억 3,560만 권, 2015)
 - 총매출액 : 28억 3천8백만 유로 (26억 3,500만 유로, 2015)
 - 총매출액에 따른 서적 종류별 구분 : 문학 22%, 참고서 15%, 사회과학 및 인문학 14%, 아동도서 13%, 실용서적(여가, 여행 등) 13%, 만화책 9% 등

5) 연극·공연예술

- 프랑스에는 샤이오(Chaillot), 코메디 프랑세즈(Comédie Française), 오데옹(Odéon), 콜린(Collin),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등 5개의 국립극장과 39개의 국립/지역 연극센터, 그리고 74개의 센나시오날(국립극단)이 있음.
 - 위 4개의 국립극장(무용 전용극장인 샤이오 제외)은 한 해 동안 약 1,100회(코메디 프랑세즈 355, 콜린 297, 오데옹 292, 스트라스부르 174) 이상의 상연, 약 65만 명의 관객(코메디 프랑세즈 28만, 콜린 11만, 오데옹 19만명, 스트라스부르 6만) 동원 (2018 문화부 연감, 2015-2016 시즌 기준)
- 정부재정 보조를 받는 극장들의 활동이 활발한 반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설 극장은 실험극장, 카페 떼아뜨르 등의 형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는 직접 지원은 하지 않으나 프로젝트 공모, 세제 혜택 등의 형식으로 간접 지원
- 사립 극단의 경우 전국적으로 800여 개가 있으며, 정부가 총 2,600만 유로 지원
 - ※ 아비뇽(Avignon) 국제연극 페스티벌(공연예술부문)
 - 1947년 장 빌라르(Jean Vilar)에 의해 창설
 - 매년 7월에 남프랑스 아비뇽(Avignon)시에서 3주간 개최되며, 공식초청 프로그램인 In과 비공식초청 프로그램 Off로 분류됨.
 - 2018년 제 72회 아비뇽 페스티벌은 7월 6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47편을 공식초청 프로그램으로 소개, 비공식초청 공연은 총 1,538편 상연

4 언론 방송

가. 공영 방송

- 공영 TV : 프랑스 텔레비지옹(France Télévisions)
 - 2009년 3월 5일 법에 따라 프랑스 공영TV 방송과 라디오가 통합, 2010년 프랑스 텔레비지옹 그룹이 새로 창설, 프랑스 내 TV 방송(France2, France3, France4, France5, France Ô)과 해외영토방송(Outre-mer 1ère) 총 6개 채널로 구성 (2018.6월 기준)
 - 사장은 시청각최고심의회(CSA)의 동의와 하원 문화상임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현 사장 : Delphine Ernotte-Cunci, 2015~)
 - 프랑스인 2명 중 1명이 프랑스 텔레비지옹 방송을 시청(2016)

- **공영 라디오 : 라디오 프랑스(Radio France)**
 - 1975년 1월 창설, 프랑스 공영라디오 방송으로 France Inter(전체), France Info(뉴스), France Culture(문화), France Musique(음악), France Bleu(클래식 및 재즈, 전국 43개 지역국 보유), Fip(음악), Le Mouv(청소년)와 같이 7개 채널로 구성(현 사장 : Sibyle Veil, 2018~)
- **해외 시청각 담당 방송 기관 : 프랑스 미디어 몽드(France Medias Monde)**
 - 2008년 4월 24일 해외 시청각 담당 방송 기관을 통합한 프랑스 몽드(France Monde) 창설, 2013년 6월 27일 프랑스 미디어 몽드로 명칭 변경
 -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 뉴스 전문 TV 채널인 France 24 TV, 아랍어권 라디오 방송사 Monte Carlo Doualiya를 통합한 지주회사
- **TV5 Monde : 1984년 1월 창설, 세계 문화를 다루는 첫 프랑스어권 채널로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24시간 방송**
 - 프랑스어권 4개국의 공영방송국에서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음(대표이사 : Yves Bigot, 2012~)
 - 프랑스 : 프랑스 텔레비지옹(49%), 프랑스 미디어 몽드(12.64%), 아르테 프랑스(3.29%), 프랑스 시청각미디어연구소 INA(1.74%),
 - 스위스 : 스위스 라디오-텔레비지옹 RTS (11.11%)
 - 벨기에 : 벨기에 프랑스어 라디오-텔레비지옹 RTBF(11.11 %)
 - 캐나다 : Radio-Canada (6.67%), Télé-Québec (4.44%)
- **아르떼(Arté) : 1992년 5월 30일 창설, 프-독 합작 공영 교양 채널로 프랑스 채널은 ARTE France (ARTE Radio 포함)**
 - France Télévisions(45%), 프랑스 정부(25%), Radio France (15%), INA(프랑스 시청각 기관) (15%) 등이 지분 소유
- **프랑스 방송 디지털화 공익사업 그룹 : 프랑스텔레뉴메리크 (France Télé Numérique)**
 - 프랑스 전체 방송의 디지털화 사업에 따라 프랑스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화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화 사업 지원
 - 국가(50%), France Télévisions(15%), Arte(5%), TF1(10%), M6(10%), Canal+(10%)의 지원으로 운영
- **TNT(지상파 디지털 방송) : France Télévisions, ARTE, La Chaîne Parlementaire (의회 채널) 등 총 19개 채널로 시작, 2012년 12월 6개 채널이 추가됨. 2015년 6월 2일부터 프랑스 전국에 보급 완료. 2016년 4월 5일, LCI HD 채널이 추가되면서 총 26개 채널로 재편성. 2018년 현재 31개의 전국방송 채널, 41개의 지역방송 채널 보유.**
- **프랑스 위성방송 : Groupe Canal Plus의 CanalSat 과 TF1그룹과 M6그룹의 TPS를 합쳐 만든 Nouveau Canalsat, La TV d'Orange(France Telecom/ Orange), AB sat(AB그룹) 등**

나. 민영 방송

- 프랑스 대표 민영방송사는 TF1(Bouygues), BFM TV, Canal+(Groupe Canal Plus), M6(Groupe M6), GUILLI 등으로 구성
- 주요 민영 라디오는 Europe 1, RTL, RMC Info, CHERI FM, RFM, NRG 등

시청각최고심의회(CSA :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 개요 : 1989년에 설립된 독립 시청각 감독 기관
- 구성 : 6년 임기로 7명의 위원(1명 : 대통령이 임명, 3명 : 국회의장이 임명, 3명 : 상원의장이 임명)
(현 사장 : Olivier Schrameck)
- 기능 : ▲ 주파수 배분 ▲ 프랑스 내 방송되는 라디오·TV 방송사들의 법규 준수 관리·감독 ▲ TV·라디오 방영 내용 감독(사전심의 권한은 없음) ▲ 공영방송의 공정성 관리·감독 ▲ 주요 선거 후보별 선거 방송 기획 ▲ 정치 다원주의와 정보 제공 투명성 준수 관리·감독 등

다. 언론지

- 종류 : 총 982종
 - 대중지 796종(일간지 174종, 잡지 595종), 전문지 96종, 무가지 93종, 기타 24종
 - 주요 일간지로는 <르피가로(Le Figaro)>, <르몽드(Le Monde)>, <리베라시옹(Libération)>, <르파리지앵(Le Parisien)> 등이 대표적이고, 지역 일간지로는 <웨스트 프랑스(Ouest France)> 등이 있음.

2017년 주요 신문 및 잡지 현황

(발행부수 단위 : 부)

	창간일	발행부수*	분류, 보도 성향, 독자층
일간지			
Le Parisien (Aujourd'hui en France)	1944.4.22	329,842	일반 뉴스, 일반대중
Le Figaro	1827.6.16	301,528	일반 뉴스, 보수, 중산층 이상 (젊은 세대의 구독률은 비교적 낮은 편)
Le Monde	1944.12.19	301,528	일반 뉴스, 중도진보, 중산층 이상 여론 주도층 (젊은 세대 구독률 높음)
L'équipe(스포츠)	1946	239,482	스포츠 전문지
Libération	1973	79,907	일반 뉴스, 진보, 학생층

Les Echos	1908.5.2	131,005	경제 뉴스, 자유주의 시장경제 위주, 지식인층, 비지니스계
La Croix	1883.6.16	100,012	일반 뉴스, 기독교보수층
주간지			
Paris Match	1949.3.25	582,310	일반 뉴스(주요 인사 스퀴프), 일반대중
L'Express	1953.5.15	359,685	일반 뉴스, 중도 성향, 지식인층
Le Nouvel Observateur	1964	346,625	일반 뉴스, 중도진보, 지식인층
Le Figaro Magazine	1978	385,676	일반 뉴스, 보수, 지식인층
Le Point	1972	330,602	일반 뉴스, 중도보수, 지식인층
Courrier International	1990	179,706	해외 유명 신문잡지 뉴스 프랑스어 번역 게재, 지식인층
Le Monde Diplomatique(월간)	1954	163,097	외교전문, 중도진보 성향

※ 언론지 관련 통계 출처 : 프레스와 미디어통계협회 ACPM (L'ALLIANCE POUR LES CHIFFRES DE LA PRESSE ET DES MÉDIAS, 전신 : OJD), 2018

5 교육

가. 교육 제도

-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정신에 기초하고 법과 헌법에 의거, 의무교육(6~16세), 무상교육, 무종교 교육의 3대 주요 원칙 아래 운영
- 국가 주도 공교육 체제 아래 전국적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되,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지원하는 사교육을 부분적으로 도입(전국 평균 약 17%)
- 1980년대 이후 중·고등학교 과정의 지방분권으로 전체 교육과정의 통일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각 교육기관의 자주성·책임성을 강화
 - 1986년 1월부터 교육 예산 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투자비의 대부분이 교육부 소관에서 벗어나 내무부 소관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나. 교육과정

- 유치원(Ecole Maternelle)
 - 3세 이상 6세 미만의 아동이 100% 취학, 계층간 불평등 해소 및 복지 차원에서 2세 아동의 취학도 장려
 - 원칙적으로 무상교육이며, 급식비도 학부모의 수입에 따라 차등 지원
 - 대부분의 유치원은 공립이며 초등학교에 병설(공립 15,079교 / 사립 137교)
 - 기초학습자세 및 사회생활 기본규칙 습득이 목표
- 초등학교(Ecole Primaire)
 - 5년 연한의 의무교육과정으로서 6~10세의 아동이 취학
 - 공립의 경우 무상이며, 유치원처럼 급식비는 학부모의 수입에 비례하여 차등 부담
 - 2016년 9월부터 중학교와 연계된 새 교육과정으로 조직
 - ※ 2주기 기초학습과정(초기 3년), 3주기 다지기 과정(후기 2년과 중 1년), 4주기 심화과정(중 2,3,4년)
 - ※ 7대 기본 공동능력 습득이 목표 : 국어 표현력, 외국어 구사력, 수학 과학 기술 기초 지식, 컴퓨터 활용 능력, 인문적 소양, 사회 시민성, 자주성과 주도력
 - ※ 교과편성은 프랑스어, 수학, 체육, 외국어, 예술 및 예술사, 세상의 발견 등이며, 특히 프랑스어 교육 강조
 - 진급 및 유급은 과정별 교사협의회, 학부모협의회, 해당 학부모, 학교 의사, 교육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되어 결정
 - 수업은 주 4.5일제로 연간 36주, 주당 24시간을 하며 아동들의 건전한 심신 발육을 위하여 일일 최대 학습 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제한(수요일에는 오전수업만 하며, 토요일에는 수업이 없음)
- 중학교(Collège)
 - 4년제 의무교육으로서 11~14세의 학생이 취학
 - 2016년 9월부터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일관성 있고 점진적인 주기별 개정 교육과정 적용
 - ※ 3주기 다지기 과정(초등 후기 2년과 중 1년), 4주기 심화 과정(중 2,3,4년)
 - ※ 5대 영역 학습 : 사고와 소통을 위한 언어, 학습 방법 및 도구, 시민성 함양, 자연적 제도와 기술적 제도, 세상과 인류의 활동
 - ※ 교과 편성은 프랑스어, 수학, 외국어, 고대언어문화, 역사지리시민, 생명지구과학, 물리화학, 기술, 음악미술, 체육, 예술사, 컴퓨터 활용 등
 - ※ 컴퓨터 활용 능력, 포털교육 사이트 구축, 직업세계의 발견 선택교과, 국제외국어 섹션 등 중점 운영
 - 중학교 과정의 수료는 국가고사인 브레베(Brevet : 중학교 학력 검증 국가고사)를 통과해야 인정(20점 만점에 10점 이상 합격)
 - ※ 시험은 중학교 졸업생의 학력 수준(국가의 교육력)을 평가하는 고사일 뿐,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학군에 따른 본인의 희망, 내신성적과 함께 참고 요인이 됨.

- 고등학교(Lycée)
 - 대학 진학 또는 기술 및 직업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며, 교육과정은 3년으로, 일반계, 기술계 및 직업계의 3계열로 나뉘어 학습하며, 도제교육도 활성화
 - ※ 기술 직업계 마이스터고(선별 직업고)를 운영하며 200여 전문영역과 단계별 자격증 제도를 둠.
 - 바칼로레아는 일반계 3전공(문학, 경제·사회, 과학), 기술계 8전공(산업 및 지속성장, 디자인 및 응용예술, 경영과 회계, 사회보전, 실험실학, 음악무용, 호텔요식, 식품생명공학)으로 세분화되어 치러지며, 직업계 바칼로레아는 취득하려는 자격증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
 -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은 두 단계로 구성
 - ※ 전공탐색과정인 1학년에서는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과정으로 공통 필수과목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과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공과정인 2학년과 졸업반에서는 계열별 바칼로레아 시험에 따라 전공교육과정 운영
 - 프랑스 내 463개의 초·중·고등학교 내에 개설돼 있는 ‘국제 부분(Section internationale)’은 정규 교과 중 하나로 한 주에 6시간씩 프랑스와 외국어를 섞어서 진행하는 특별 수업이다. 현재 영어·스페인어·한국어 등 17개 언어의 국제색션이 개설돼 있음.

- 대학교(Université) 및 그 밖의 고등교육기관

- 프랑스는 무선발 비경쟁 코스인 일반대학과 선발 절차를 거치는 프레파(Préparatoire)와 그랑제꼴(Grandes Écoles)이 공존
 - ※ 고등교육기관(Grand Etablissement d'enseignement supérieur) : 오랜 역사 및 특정 분야 교육의 특수성을 갖고, 일반대학들과는 다른 학과 과정을 갖고 있어 프랑스 법률상 인정되며 해당 분야별로 관련 정부 부처가 관리하는 교육기관
 - ※ 고등교육기관과 그랑제꼴이 겹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교육기관으로는 크게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단기 기술대, 학문을 연구하는 일반 대학, 전문 실무지식을 집중 교육하는 그랑제꼴로 구분
- 일반대학은 대학별로 별도의 입학시험은 없고 선택한 계열의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통상 'Bac')에 합격하는 것이 필수 조건
- 반면 그랑제꼴 준비반인 프레파는 고교 내신성적으로 입학사정을 하고 학업연한은 2년(상위 20% 학생들이 입학)이며, 각 계열 그랑제꼴은 선발시험을 거쳐 입학하고 학업 연한은 3~4년
- 전국 대학 인터넷 연결망 강화, 직업 진출, 대학 자율권 강화, 대학 생활 환경 개선 등이 현안
- 경험학습 인정제 : 경험 혹은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로 인정하고, 인정 정도에 따라 학년 결정 입학 또는 조기 진급·졸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 ※ 분야별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 : Polytechnic(공학), SciencesPo(정치), Normale Sup(인문), Essec, HEC(경제·경영)등

- 전문대학

- 공업 단기대(IUT)
 - ※ 수학 기간은 2년, 학과는 70여 개, 졸업 후 DUT 자격증을 받으며 곧바로 2·3차 산업에 종사

- 일반 단기대(BTS, STS)
 - ※ 세분화된 특수 영역의 기능을 2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후, 150여 종의 자격증 부여
- 특수 전문직업학교(ECOLE)
- 대부분 사립으로 2~3년에 걸쳐 장인·산업·예술·건축·기술 등 영역의 전문 기능 교육 후, 국가 또는 학교 자격증을 부여
- 일반대학
 - 현재 75개의 일반대학이 있으며 과거의 단과대 중심 전통에서 벗어나 200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종합대학 체제로 개선, 일반대학은 여러 분야 학문을 기초에서 전문화된 영역까지 연구하는 교육기관
 - ※ 일반적으로 3년 과정의 학사, 2년 과정의 석사, 3년 과정의 박사라는 3단계 학위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정별로 국가가 증서로 그 자격을 인정
- 그랑제꼴(Grandes Écoles)
 - 프랑스 법률상 개념은 아니며 별도 선발시험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하는 명문학교를 통칭하는 비공식 개념
 - 최고급 엘리트 양성을 위한 분야별 전문 교육기관으로, 정부 고급관료 양성 학교인 파리정치대학(IEP, Sciences Po), 국립행정학교(ENA), 이공계 엔지니어 양성 학교인 국립종합기술학교(Ecole Polytechnique), 국립고등광업학교(Ecole des Mines), 국립고등토목학교(Ecole Nationale des Ponts et Chaussées) 및 교수요원 양성 학교인 고등사범학교(Ecole Normale Supérieure, ENS), 상경계인 파리경영대학(HEC), ESCP, ESSEC 등이 해당
 - ※ 그랑제꼴에 입학하는 방법은 다양함.
 - ※ 바칼로레아 취득 후 2~3년간의 예비교육과정(통상 'Prépa': Préparatoire) 거친 후 상위 2~3%가 입학
 - ※ 일반대학이나 다른 학교에 다니다 그랑제꼴 1학년에 입학하거나 2학년에 편입하는 경우도 있음.
 - 학문을 연구하는 일반 대학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랑제꼴을 나왔다 하더라도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일반대학의 박사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
- 국립예술직업학교(CNAM)
 - 1794년 Grégoire 신부가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주고자 설립
 - 엔지니어 학위를 수여하며, 이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5~10년 동안 학위를 취득하는 야간수업이 많은, 평생교육 체제를 갖고 있는 고등교육기관(Grand établissement d'enseignement supérieur)
 - 학생의 80% 이상이 직장인으로, 평균연령이 35세
 -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뿐 아니라, 회사에서 후원하는 강의를 듣는 경우도 있는 등 수업의 종류가 다양하며 단기 수강생을 포함 학생수는 총 6만 2,500명
 -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클로드 코앙 타누지(Claude Cohen-Tannoudji), 세르주 아로슈(Serge Haroche) 등이 교육자로 참여

- 프랑스 전역 및 해외영토에 158개의 센터 소재
- ICH라는 부동산 분야 유명한 연구소가 소재
- 해외에도 센터가 있으며, 중국에는 2017년 설립
- 외국인 학생은 총 9,000명으로 정원의 10%이며, 주로 마그레브·아프리카·아시아권 학생들
- 미국 하버드 대학교, MIT 대학교, 스미소니언 재단, 예일 대학교와 협력 관계
 - ※ 교육 체제가 여타 고등교육기관들과 다른 만큼, 통상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은 경쟁률 하에 입학생을 선발하는 여타(대표적으로 그랑제꼴로 일컬어지는) 고등교육기관들과는 차등하게 인지되고 있음.

6 국민 생활

가. 소득 분포

- 2015년 기준 프랑스 국민소득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38.3%, 하위 20%가 8.8% 점유
 - 지니 계수는 2012년 0.327에서 2016년 0.290으로 최근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
 - 가계소득 중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이전소득(Social transfer)의 비율이 높은 편
- 2016년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은 21,713유로로 EU 회원국 중 9번째로 많으며, 기준 빈곤율(이전소득 후)은 13.6%로 EU 회원국 28개국 중 6번째로 낮은 수준

나. 여가 활용 및 스포츠

- 휴가는 연간 5~9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 전체의 58.3%, 직장인의 88%가 휴일을 자택 이외의 장소에서 활용
- 국민들의 휴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특히 주 35시간 노동제 실시 이후 여가 인구가 급증
- 국민들의 여가 활동은 영화·공연·미술관 등 문화생활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스포츠 활동은 12.6%

종류	영화 공연 미술관	신문잡지 책	원예 및 애완동물	게임 장난감	스포츠 활동	카지노 로또 등	TV 비디오 사진	컴퓨터	CD 디스크	기타
%	14.9	14.6	13.7	13.4	12.6	9.9	8.8	4.5	2.3	5.3

- 스포츠 클럽 사용 등 스포츠 활동 인구는 1,850만 명이며, 스포츠 관련 가계 지출은 127억 유로
 - 스포츠 클럽 회원 기준 가장 많은 회원을 갖고 있는 운동 종목은 축구, 테니스, 유도, 승마, 농구, 골프 등
 - 스포츠 시설로 옥외 경기장 9만 6천여 개가 있으며, 수영장은 6,300여 개, 실내 체육관은 5만여 개가 존재

다. 인터넷 보급률(2017) : 86%

PART 7

치안

1. 치안 상황
2. 프랑스 치안 담당 조직 개요
3. 국립 경찰
4. 국립 군경찰
5. 자치경찰
6. 주요 치안 지표



1 치안 상황

-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법집행 결과 전반적으로 치안이 안정되어 있으나 파리·마르세이유 등 주요 도시에서의 생계형 범죄와 마약·불법무기 밀매와 관련한 범죄조직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빈발
- 2016년부터 시작된 노동법 개정 및 마크롱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반발로 파업 및 대규모 시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과격 시위대로 인해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경우 발생
- 한편 2015년 11월 파리 연쇄테러, 2016년 7월 니스 테러 등 대규모 테러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으나 2017년 11월 대테러강화법을 기반으로 경찰과 정보기관이 대규모 테러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테러에 대한 불안이 다소 해소됨.

2 프랑스 치안 담당 조직 개요

- 프랑스의 치안은 내무부 소속으로 내무부장관의 지휘 아래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경찰(국립 경찰·국립 군경찰)이 담당
-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국가경찰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치경찰을 제한적으로 운용

1) 국립 경찰(Police Nationale)

- 인구 2만 이상 도시 지역의 치안 담당
- 전 국토의 5%, 총 인구의 50% 담당

2) 국립 군경찰(Gendarmerie Nationale)

- 도시 주변 또는 농·어촌 지역의 치안 담당
- 전 국토의 95%, 총 인구의 50% 담당

3) 자치경찰(Police Municipale)

- 각 기초자치단체(Commune)의 장(長, Maire)이 자체 예산으로 설치, 운영
- 자치경찰 설치 여부는 기초지자체 선택 사안이며, 자치경찰 미설치 지자체는 관할지 국가경찰과 협약 체결로 자치경찰 업무 이관
- 프랑스 지자체 중 수도 파리는 유일하게 자치경찰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2017년 2월 28일자 「파리의 지위 및 메트로폴 조직 관련법」에 의거, 일부 자치경찰권(도로 통행, 주거 위생, 소음 공해, 장의, 수상안전, 신분증 발급 등)이 프레페(파리경찰청장)로부터 파리 시장에게 이양됨
- 국가경찰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구역 내 주정차 단속, 순찰 등 공공질서 유지 담당

3 국립 경찰(Police Nationale)

가. 연혁

- 1032년 앙리 1세, 경찰권과 사법권(재판권)을 행사하는 ‘프레보(prévôt)’직을 창설하여 프랑스 경찰의 기원 마련
- 1667년 루이 14세, 경찰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최초로 현대적 의미의 경찰 개념 탄생
- 1800년 나폴레옹이 혁명 완수를 위해 ‘파리경찰청(Préfecture de police)’을 창설, 수사·정보·행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막강한 권한 부여
- 1815~1830년 왕정복고 시대, 나폴레옹의 경찰권 강화에 대한 반발로 ‘자치경찰제’ 실시(파리경찰청은 자치경찰화하지 않고 국왕 직속 체제로 존치)
- 1941년 4월 자치경찰을 폐지하여 인구 1만 명 이상 도시에 국립 경찰을 배치하였고, 국립 경찰은 내무부 산하에 현재의 ‘경찰총국(DGPN : Direction Générale de la Police Nationale)’ 창설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 확립

- 1966년 7월, 파리경찰청까지 국립 경찰로 통합하여 '완벽한 국가경찰 체제' 확립
- 2009년 8월, 「군경찰에 관한 법률」 및 「방위법」 개정에 따라 군경찰 조직(DGGN : Direction Générale de la Gendarmerie Nationale)과 예산을 국방부 장관에서 내무부장관 산하로 이전함으로써 국립 경찰 및 국립 군경찰의 조직·지휘를 내무부장관으로 일원화

나. 임무와 목표

1) 3대 주요 임무

- ① 공공의 안전과 평화 유지 : 국민의 신체와 재산 보호, 공공질서·공공안녕 유지 및 범죄 예방
- ② 사법경찰권 행사 : 형사법 위반 행위의 확인, 증거 수집, 범인 색출과 검거 및 송치
- ③ 치안정보 수집 : 공공질서 및 시설, 국가의 이익과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위협의 탐색과 예방

2) 임무 완수를 위한 5대 기본 목표

- ① 신체·재산 및 시설의 안전 보장
- ② 이민 흐름의 통제 및 불법노동의 척결
- ③ 조직범죄·대형범죄 및 마약의 척결
- ④ 테러 및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 보호
- ⑤ 공공질서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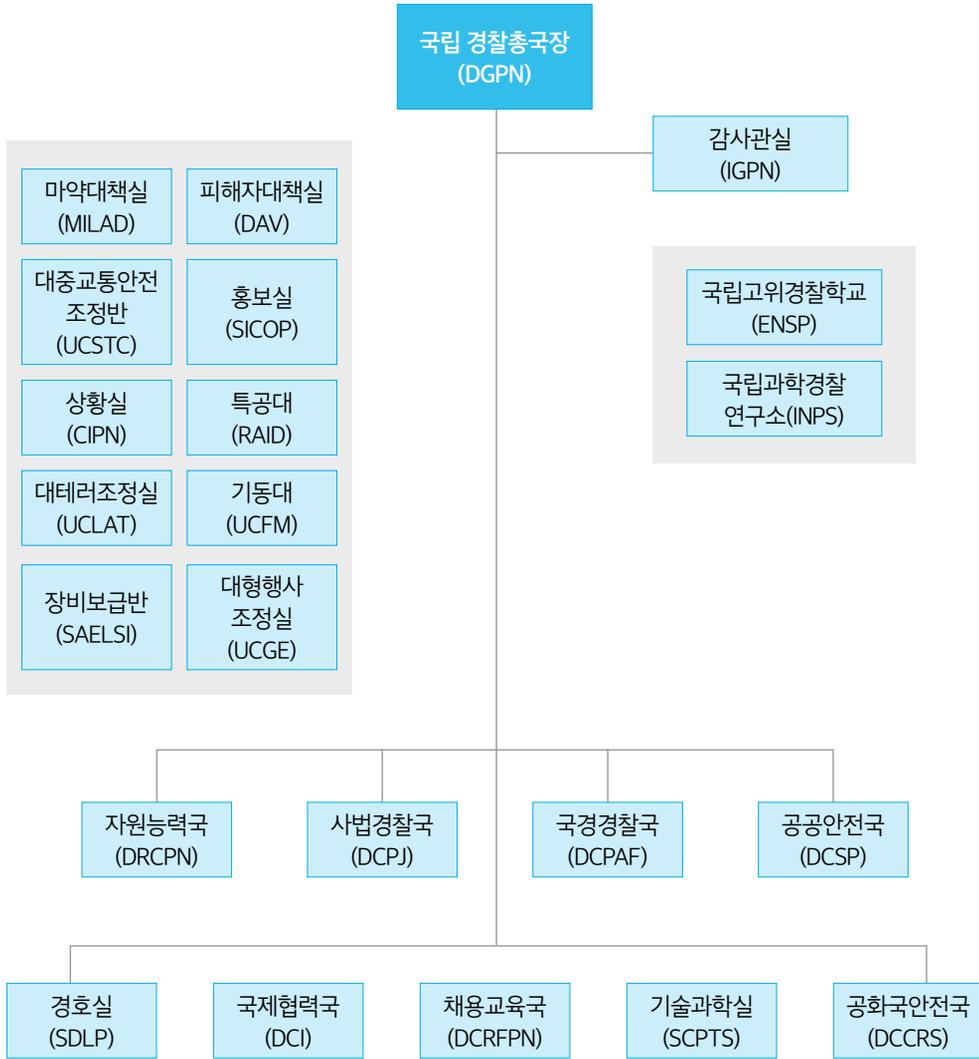
다. 조직

1) 중앙 조직 : 내무부 소속의 '경찰총국(DGPN)'으로 구성

① 경찰총국의 조직 현황

- 8개 실·국
- 10개 실·국
 - 자원능력국(DRCPN) : 경찰인력 관리, 인사, 예산, 복지, 안전, 처우 등
 - 감사관실(IGPN) : 경찰 업무 감사, 비위경찰 감찰·수사, 경찰업무 개선 연구 등
 - 사법경찰국(DCPJ) : 중요 범죄 수사·증거수집·범인 검거, 카지노·경마장 관리 등
 - 국경경찰국(DCPAF) : 출입국 관리, 불법체류·이민 단속 등
 - 공공안전국(DCSP) : 순찰, 경찰긴급전화(17번) 운용, 일반 범죄 및 교통 단속
 - 공화국안전국(DCCRS) : 집회시위 진압, 고속도로 순찰, 산악·해양 구조 등
 - 채용교육국(DCRFPN) : 채용, 교육 등
 - 기술과학실(SCPTS) : 과학기술 전략 수립, 국립과학경찰연구소 감독, 전문기술인력 관리 등
 - 경호국(SDLP) : 대통령(전직 포함)과 가족 및 국내·외 중요 인사 경호
- 10개 직속기관 : 마약대책실, 피해자대책실, 대중교통안전조정반, 홍보실, 상황실, 특공대, 대테러조정실, 기동대, 장비보급반, 대형행사조정실
- 2개 소속기관 : 국립고위경찰학교, 국립과학경찰연구소

② 경찰총국 조직도



2) 지방 조직

- 우리나라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지방경찰청은 없으며, 중앙 조직인 국립 경찰총국(DGPN)의 각 기능별 지방 분소를 각 도(Département) 또는 광역도(Région)에 설치, 운영
 - ① 공공안전국 : 각 도의 도지사 산하에 지역공공안전국(DDSP)을 설치(총 102개)하고, 지역 공공안전국장(DDSP장)이 도지사를 보좌하여 경찰서(전국 총 424개)를 지휘, 치안 유지
 - ② 사법경찰국 : 광역도 및 9개 광역 지역에 지방사법경찰국(DRPJ, DIPJ) 설치, 조직범죄 및 특수범죄 수사 담당
 - ③ 자원능력국 : 파리 등 8개 지역에 지방분국(SGAP) 설치
 - ④ 감사관실 : 7개 지역에 지방분국 설치
 - ⑤ 국경경찰국 : 2개 공항, 7개 광역 지역, 45개 도에 지방분국 설치
 - ⑥ 공화국안전국 : 7개 지역에 지방분국, 60개 경찰기동부대, 1개 경호부대, 9개 고속도로순찰대, 6개 싸이카순찰대, 1개 산악구조대 설치
 - ⑦ 경호국 :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 지방분국 설치

라. 계급 구조

직군	계급	계급장
고위 경찰 (Hauts-fonctionnaires)	치안정감 (Directeur des services actifs)	
	치안감 (Inspecteur général)	
	경무관 (Contrôleur général)	
구상과 감독 (Conception et direction)	총경 (Commissaire divisionnaire)	
	경정 (Commissaire)	

직군	계급	계급장
명령, 지휘 (Commandement)	상급 경감 (Commandant)	
	경감 (Capitaine)	
	경위 (Lieutenant)	
	시보 경위 (Lieutenant stagiaire)	
지도와 적용 (Encadrement et application)	상급 경사 (Major)	
	경사 (Brigadier-chef)	
	경장 (Brigadier)	
	하급 경장 (Sous-Brigadier)	
	순경 (Gardien de la paix)	

마. 파리경찰청(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1) 파리경찰청의 특수한 지위와 권한

- 1800년에 나폴레옹이 1789년 시민혁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창설한 파리경찰청은 파리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이자 인구밀집 지역이고 역사적으로 폭동이 잦아 중앙권력(황제)이 직접 지휘를 하는 특별 경찰기관이었음.
- 그 뒤로 파리경찰청장은 국립 경찰이면서도 경찰총국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내무부장관의 직접 지휘 아래, 수도 파리를 비롯해 주변 3개 데파르트망의 치안과 행정은 물론 파리와 인근 7개 데파르트망(일-드-프랑스)의 국방도 책임지는 프레페(Préfet de la zon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음.

2) 관할 및 인구

- 치안 및 행정 관할 : 파리(75지역) 및 주변 3개 데파르트망
※ 주변 3개 데파르트망 : 오-드-센(92지역), 센-생-드니(93지역), 발-드-마른(94지역)
- 면적 : 766.4km² (파리 105.40km²)
- 인구 : 약 640만 명 (파리 약 220만 명)

3) 임무

- 질서 유지 및 범죄예방 활동, 범인 검거 등 사법경찰 업무
- 관할 구역 내 철도 안전 및 방위 업무
- 화재 예방·진압 및 긴급구조 업무

4) 조직

- 중앙 조직
 - 경찰 관련 부서 : 파리 및 수도권생활안전국(DSPAP), 기술 및 물자보급국(DOSTL), 사법경찰국(DRPJ), 공공질서 및 도로국(DOPC), 정보국(DR), 행정사무국(SGA)
 - 행정 부서 : 일반경찰국(DPG), 대중보호 및 교통국(DTPP)
 - 소방 관련 부서 : 파리소방대(BSPP)
 - 기타 부서 : 과학수사중앙연구소, 파리치안방어지역사무국 등
- 지방 조직
 - 지역생활안전국(DTSP) : 파리(75지역) 및 3개 도(92, 93, 94지역)에 설치, 파리경찰청의 '파리 및 수도권생활안전국(DSPAP)'의 지휘를 받아 관할 구역 내 경찰서를 감독하며 일반 치안 담당
 - 경찰서(Commissariat) : 총 84개(파리 20개, 92지역 25개, 93지역 22개, 94지역 17개) 설치, 운영

5) 인원 및 예산

- 인원 : 43,800명
 - 경찰관 : 27,500명
 - 소방관 : 8,400명
 - 행정·기술·과학직 : 7,900명
- 예산 : 총 39억 2,500만 유로 (약 5조 1,025억 원, 1유로=1,300원)

4 국립 군경찰(Gendarmerie Nationale)

가. 연혁

- 12세기 프랑스 전역에서 치안 업무를 수행했던 '기마경찰대(Maréchaussée)'가 기원
- 1373년 샤를 5세가 약탈 피해가 심한 농촌 지역에 대한 치안을 주둔 부대 헌병들이 맡게 한 후 1536년 칙령에 따라 사법·경찰 기능을 수행하면서 '향토경찰(Police des campagnes)'이라는 별칭을 얻음.
- 1720년 기마경찰대원들에게 '기마경찰 헌병 장교(Prévôt des maréchaux)'라는 직위가 부여되고, 15~20km마다 4~5명의 헌병 장교를 배치해 지역 내 치안을 담당케 함으로써 현재의 '군경찰' 조직의 기초 마련
- 1791년, 근위대와 기마경찰대를 합하여 '국립 군경찰(Gendarmerie nationale)' 창설
- 1798년, 군경찰의 임무·역할·행정 및 사법경찰 업무 수행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
- 1903년, 군경찰의 조직과 업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81년, 국방부 장관 산하에 '국립 군경찰총국(DGGN : Direction générale de la gendarmerie nationale)' 창설
- 2002년, 국내 치안 강화를 위해 군경찰의 지휘·운영을 내무부장관으로 이관(소속은 국방부장관으로 존치)
- 2009년, 군경찰의 조직·예산까지 내무부장관으로 이관(신분은 군인)

나. 임무(국립 경찰과 동일)

- 사법경찰 임무 : 범죄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범죄자를 색출·검거하여 사법 조사
- 행정경찰 임무 :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교통 소통과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며, 해상과 산악 구조 활동 전개
- 국방 임무 : 주둔 부대 내외 헌병 활동 및 대테러 활동 등 군인으로서 국방 임무 수행

다. 조직

1) 중앙 조직

- 내무부 소속의 ‘국립 군경찰총국(DGGN)’으로 구성
- 5개 실·국
 - 직무운영국(DOE) : 집회시위 진압 등 공공질서 유지, 민생치안 및 교통질서 유지, 범인 검거·범죄수사 등
 - 지원·재정국(DSF) : 예산·건물·수송·교육 훈련 등
 - 군경찰인사국(DPMGN) : 모집, 인사, 후생복지 등
 - 장비복지구매실(SAELSI) : 복장·장비 등 구매, 관리 등
 - 정보시스템기술실(STSI) : 정보통신, 전산자료 관리 등

2) 지방 조직

- 안보방위 지역(Zon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및 레종(Région) 단위
 - 레종 군경찰대(Région de gendarmerie) 설치, 관할 지역 군경찰대 지휘·운영
 - 레종의 중심 데파르트망에는 ‘군경찰 기동대대(Groupement Gendarmerie Mobile)’ 설치
-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단위
 - 지역 군경찰 대대(Groupement de gendarmerie départementale) 및 군경찰 기동 중대(Escadron de Gendarmerie Mobile) 설치
- 구(Arrondissement) 단위
 - 지역 군경찰 중대(Compagnie de gendarmerie départementale) 설치
- 데파르트망 선거구(Canton) 단위
 - 독립소대(Brigade territoire autonome), 소대연합(Communauté de brigades) 등 설치

3) 특별 조직

- 공화국 경비대(Garde républicaine) : 엘리제궁, 총리실, 국회 등 주요 국가 시설 경비 임무
- 군경찰 특공대(GIGN) : 테러 진압, 인질·납치 등 중요 범죄 진압 담당

5 자치경찰(Police Municipale)

가. 연혁

- 11세기, 자치권을 영주로부터 획득한 기초자치단체(Commune)의 장(시장, Maire)이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경찰권을 행사한 것에서 기원
- 1884년, 지방 관련 법률 제정으로 시장에게 자치경찰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니스·스트라스부르·뮌헨 등 대도시에 자치경찰 창설
- 1941년, 경찰 조직 개혁에 따라 인구 1만 명 이상 도시에는 국립 경찰을 창설하고 그 밖의 도시에는 자치경찰 존치
- 1999년, ‘자치경찰법’ 제정으로 자치경찰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자치경찰 창설 도시 급증
- 2003년, ‘자치경찰윤리규정’ 제정으로 자치경찰의 복무와 관련된 지침 마련
- 2012년 3월, ‘국내치안법’ 제정으로 자치경찰의 임무·채용·훈련 등 근거 규정 명확화

나. 권한 및 임무

1) 권한

- 시장은 도시사의 감독 하에 관할 구역 내에서 자치경찰을 조직, 운영
※ 시장(Maire)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OPJ)’ 자격 보유
-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된 임무 수행

2) 임무

- 행정경찰 임무 : 지방자치법(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2212-2조
 - 공공질서, 공공안녕, 공공안전, 공중위생의 확보
 - 통행의 안전과 편의 확보 : 도로상의 위험물·혼잡·냄새 제거, 청소, 복구 등
 - 공공평온의 확보 : 공공장소에서의 싸움·언쟁·소란 등의 억제
 - 공공질서의 유지 : 시장, 행사장, 공연장, 경기장, 식당, 교회 등에서의 질서 유지

- 위생 검사 : 식료품점의 상품 무게의 정확성 및 진열된 음식물의 위생 검사
- 재해재난의 예방 및 구호 조치 : 화재·홍수 등 자연재해, 전염병 등의 사전 예방 조치 및 사후 구호 조치
- 정신장애자 보호 조치 : 공중도덕, 타인의 안전 및 재산상 피해 우려시 조치 강구
- 유해 동물 조치 : 방치할 경우 해롭거나 사나운 동물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조치
- 사법경찰 임무 : 형사소송법 제21조, 지방자치법 L2212-5조
 - 자치경찰은 '사법경찰리보(APJA)'의 자격 보유
 - 시장이 발한 법령 위반 행위의 단속
 -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주·정차, 음주운전 등)의 단속
 - 특별법 위반 행위(광고·간판, 소음공해, 위험한 개 등)의 단속
- 조직 : 전국 3만 6,00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약 3,850개 자치단체에서 조직, 운영
- 인원 : 약 2만 1,600명
 - ※ 자치단체의 약 90%는 5명 내외의 소규모 자치경찰 인력 운용
 - ※ 마르세이유 426명, 니스 386명, 리옹 330명, 툴루즈 287명, 칸느 196명, 르발루아(파리 근교) 74명

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관계

- 관할 국가경찰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지원·협조 체제 구축
 - 주로 국가경찰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국가경찰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는 사례 증가(CCTV 녹화 자료 등 각종 자료 및 정보입수 관련)
- 경찰긴급전화(17번) 신고 처리 절차
 - 경찰긴급전화는 국가경찰(국립 경찰 또는 군경찰)만이 신고 접수 처리
 - 각 자치경찰은 관내 상황실로 일반전화 신고시에만 출동 처리하되, 절도·폭행 등 사법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에 연락, 이첩
- 교통사고 발생시
 - 신고 접수 후 출동하지만 인명피해 사고시 소방구급대에 우선 연락하고 관할 국가경찰에 통보
 - 교통사고 조사는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주변 교통 통제 등 지원 업무 수행

6 주요 치안 지표

가. 경찰관 수(2018)

- 총 24만 9,336명 (국립 경찰 14만 5,863명, 국립 군경찰 10만 3,503명)
※ 대한민국 11만 4,658명 (일반 행정직, 의경 제외)
-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 269명 (2018년 총 인구수 6,718만 명)
※ 대한민국 451명

나. 예산(2018)

- 총 192억 2,214만 유로 (약 24조 9,887억 원, 1유로≈1,300원)
- 국립 경찰 105억 6,441만 유로, 국립 군경찰 86억 5,773만 유로
※ 대한민국 10조 5,362억 원
- 국민 1인당 치안 예산 : 286유로(약 37.2만 원)
※ 대한민국 20만 원

다.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2016)

(단위 : 건)

국가	구분	총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프랑스	발생	1,830,948	892	99,992	35,900	1,479,348	214,816
	검거	291,511	845	16,083	20,807	103,600	150,176
	검거율(%)	15.9	94.7	16.0	57.9	7.0	69.9
대한민국	발생	536,694	914	1,149	22,200	203,037	309,394
	검거	418,179	909	1,168	21,457	118,597	276,048
	검거율(%)	77.9	99.4	101.7	98.9	58.4	87.6

* 살인미수 포함, ** 강간미수-강제추행 포함, 2016년 이전에 집계된 건수

- 검거율(%)은 2016년 이전에 집계된 건이 2016년에 검거된 비율 포함

출처 : 경찰청(www.police.go.kr), 프랑스 내무부 (www.interieur.gouv.fr) (자료 갱신일 : 2018.3.15)

라. 교통사고 발생 현황

연도	국가	인명피해 교통사고 (건)	사망자 (명)	부상자 (명)	차량 등록 수 (천 대)	비고
2015	프랑스	58,654	3,616	73,384	38,563	사망자는 교통사고 후 30일 이내 사망 통계
	대한민국	232,035	4,621	350,400	20,989	
2016	프랑스	57,522	3,477	72,645	38,888	
	대한민국	220,917	4,292	331,720	21,804	
2017	프랑스	58,613	3,448	73,384	N/A	
	대한민국	216,335	4,185	332,829	22,528	

출처 : 교통사고분석시스템(www.taas.koroad.or.kr), 프랑스 통계청(www.insee.fr)

PART 8

한국과의 관계

1. 연혁
2. 정무 관계
3. 경제 관계
4. 협정 체결 현황
5. 교민 현황
6. 기타 재불 주요 기관
7. 명예영사 현황
8. 군사 교류



1 연혁

가. 교류의 시작

- 18세기 중국에 파견된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대한 지식이 프랑스에 알려지기 시작
- 19세기 초 프랑스가 가톨릭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활발한 선교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민간 차원의 교류 시작
 - 학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육로를 통해 조선에 처음 들어온 서양인은 1836년 1월 입국한 프랑스의 모방(Pierre Philibert MAUBANT) 신부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었으나, 이보다 90년이나 앞선 1747년 2월 프랑스 선교사 델라포르테(Delaporte)의 여행 기록이 발견되어 사실 여부 확인 중
- 모방 신부에 이어 샤스땡(Chastan), 엠베르(Embert) 등 파리 외방전교회(Mission étrangère) 소속 신부가 각각 1835년, 1836년, 1837년에 조선에 입국하였고, 1839년 기해사옥 때 순교

나. 병인양요

- 1866년(고종 3년)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 정책으로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이 처형당하자, 그중 살아남은 리델(Ridel) 신부는 1866년 7월 7일 중국으로 피신,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Roze) 제독에게 이를 보고
- 프랑스 해군이 자국인의 인명손실에 대한 항의와 보복의 명분으로 강화도를 침공함에 따라 서양 군대와와의 최초의 무력충돌인 병인양요 발발
 - 프랑스 해군은 수차례의 무력충돌 후, 퇴각하면서 서고(외규장각)와 은괴 등을 약탈

다. 한·불 우호통상조약에서 을사조약까지

- 1886년 6월 4일 조선의 전권대신 김만식과 프랑스의 전권대신 코고르당(G. Cogordan)이 한·불 간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식 외교 관계 수립
- 조약 체결 이후 1890년 대한제국 정부 내에 주요 외국인 관직에 15명의 프랑스인(1890)을 채용하고, 같은 해 4월 24일 파리에 대한제국 공사관(민영익공사가 최초의 한국 외교관)이 설치되었으나 1905년 을사조약으로 양국 간 외교 관계 중단

- 이 시기에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취했으나, 종교 분야와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등 경제적 이윤 획득에는 적극적

라. 임시정부 외교 활동

- 1905년 한·불 간 외교 관계 중단에도 불구하고, 상해 임시정부가 프랑스 조계에서 활동하면서 프랑스 비호를 받는 등 한·불 우호 관계가 지속
-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직후, 임시정부는 신한청년당에서 파견한 김규식을 외무총장 겸 대한민국 주파리대표위원으로 임명하고 파리에 파리강화회의의 한국민 대표관을 설치하여 한국의 처지와 독립운동을 홍보

마.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국교 재개

-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이후, 프랑스 제4공화국 정부가 1949년 2월 15일에 한국을 승인함에 따라 국교 재개
 - 프랑스 정부는 1949년 4월 주한프랑스공사관을 서울의 옛 공관에 개설하고 초대 공사관으로 앙리 코스틸레스(Henri Costilès)를 임명
 - 우리 정부도 같은 해 5월 31일 초대 주프랑스 공사관으로 공진항을 임명, 파리에 주프랑스 대한민국공사관을 설치
-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프랑스는 참전 16개국의 일원으로 파병
 - 지원 부대 1대대, 구축함 1척, 연인원 3,421명 동원, 이중 269명(장교 11명, 하사관 43명, 부상자 1,350명, 실종 7명)이 전사하고 1,357명 부상
- 1958년 10월, 양국의 외교 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키기로 합의, 1959년 양국 초대 대사를 임명

바. 최근 양국 관계

- 한·불 양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 유지
- 프랑스는 우리나라 안보·경제 외교의 주요 협력 파트너(프랑스는 EU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국이며, 제7위 對한 투자국)
-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프 계기 양국 정상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면서, 국제정치 주요 의제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무역량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선언

- 2010년 11월 사르코지 대통령의 G20 서울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계기,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긴밀한 동반자 관계 재확인
 - 동 계기, 그간 장기 미해결 현안으로 양국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외규장각 도서 문제 해결책에 합의
- 2011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방문시 양국 간 실질협력 발전, 교역·투자 확대 등에 합의
-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 방문시 양국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공고화를 위한 실질협력 확대 방안 논의
- 2015년 11월 올랑드 대통령의 국민 방한시 양국 정상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채택
- 2016년 6월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불 상호 교류의 해' 개최

2 정무 관계

가. 주요 외교 일지

- 1886년 6월 4일 한·불 우호통상조약 체결
- 1887년 9월 16일 주프랑스 전권대신에 조신희 임명
- 1887년 11월 9일 Collin De Plancy 주한공사 임명
- 1890년 2월 1일 박제순 주프랑스 전권대신 임명
- 1890년 7월 2일 Frandin 주한공사 임명
- 1895년 12월 23일 Collin de Plancy 공사 겸 총영사 임명
- 1897년 1월 11일 구주 6개국 주재 공사에 민영익 임명
- 1898년 5월 24일 윤용식 주프랑스 겸임공사 임명(러시아·오스트리아 겸임)
- 1889년 10월 9일 민영돈 겸임공사 임명

- 1899년 3월 20일 이범진 겸임공사 임명 (1900년 5월 23일 신임장 제정)
- 1901년 3월 20일 김만수 공사 임명 (1901년 7월 10일 신임장 제정)
- 1902년 1월 17일 민영찬 공사 임명 (1902년 4월 19일 신임장 제정)
- 1906년 8월 외교관계 중단, 주한프랑스공사관을 영사관으로 변경
- 1949년 2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승인, 외교 관계 수립 합의
- 1949년 4월 13일 Costilès 공사 신임장 제정
- 1949년 7월 6일 공진항 주프랑스공사 신임장 제정 (공사관 설치)
- 1951년 4월 27일 전규홍 주프랑스공사 임명
- 1951년 5월 16일 김용식 주프랑스공사 임명
- 1958년 10월 10일 양국 간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합의
- 1959년 4월 14일 Roger Chambard 초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 1959년 6월 16일 정일권 초대대사 신임장 제정
- 1959년 9월 25일 백선엽 대사 신임장 제정(2대)
- 1961년 9월 18일 이수영 대사 신임장 제정(3대)
- 1969년 6월 9일 Frédéric Max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2대)
- 1971년 6월 3일 Pierre Landy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3대)
- 1972년 9월 8일 정일영 대사 신임장 제정(4대)
- 1974년 3월 22일 윤석현 대사 신임장 제정(5대)
- 1975년 12월 17일 Teissier du Cros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4대)
- 1979년 6월 14일 민병기 대사 신임장 제정(6대)
- 1980년 3월 28일 Bernard Follin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5대)
- 1982년 2월 28일 윤석현 대사 신임장 제정(7대)
- 1982년 9월 23일 André Baeyens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6대)
- 1985년 7월 3일 윤억섭 대사 신임장 제정(8대)
- 1985년 8월 21일 Jean-Bernard Ouvrieu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7대)
- 1987년 6월 24일 한우석 대사 신임장 제정(9대)
- 1987년 7월 9일 Hubert Forquenot de la Fortelle 주한대사 신임

- 1990년 9월 21일 노영찬 대사 신임장 제정(10대)
- 1991년 4월 23일 Bernard Prague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9대)
- 1993년 7월 21일 장선섭 대사 신임장 제정(11대)
- 1993년 12월 16일 Dominique Perreau 대사 신임장 제정(10대)
- 1996년 3월 21일 이시영 대사 신임장 제정(12대)
- 1997년 7월 10일 Jean-Paul Réau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11대)
- 1998년 7월 6일 권인혁 대사 신임장 제정(13대)
- 2001년 4월 23일 장재룡 대사 신임장 제정(14대)
- 2001년 7월 12일 François Descoueyte 대사 신임장 제정(12대)
- 2003년 11월 4일 주철기 대사 신임장 제정(15대)
- 2005년 10월 7일 Philippe Thiebaud 대사 신임장 제정(13대)
- 2007년 2월 6일 조일환 대사 신임장 제정(16대)
- 2009년 7월 29일 Elisabeth Laurin 대사 신임장 제정(14대)
- 2010년 1월 15일 박홍신 대사 신임장 제정(17대)
- 2012년 10월 26일 이혜민 대사 신임장 제정(18대)
- 2013년 2월 6일 Jérôme Pasquier 대사 신임장 제정(15대)
- 2015년 7월 6일 모철민 대사 신임장 제정(19대)
- 2015년 9월 14일 Fabien Penone 대사 신임장 제정(16대)
- 2018년 8월 31일 최종문 대사 신임장 제정(20대)

나. 프랑스 정부의 對한반도 정책

- 프랑스는 에스토니아와 더불어 EU 회원국 중 유일한 對북한 미수교국으로, 프랑스의 대북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 대화에 진전이 있어야 하며,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

- 2005년 10월 김진표 교육부총리 (제33차 유네스코 총회 참석)
- 2006년 1월 21~25일 이재용 환경부장관
- 2006년 2월 4~6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 2006년 6월 6~9일 한명숙 국무총리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행사 참가)
- 2006년 6월 29~7월 3일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 2006년 11월 2~3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 2006년 11월 20~21일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 2006년 12월 18~19일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참석)
- 2007년 1월 김성호 법무부장관
- 2007년 1월 24~29일 한·불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 2007년 4월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 2007년 5월 오세훈 서울시장
- 2007년 6월 17~20일 한덕수 국무총리 (BIE 141차 총회 참석)
- 2007년 9월 10~14일 이용훈 대법원장
- 2007년 9월 16~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 2007년 9월 18~20일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 2007년 10월 김신일 교육부총리
- 2007년 11월 23~27일 한덕수 국무총리 (BIE 142차 총회 참석)
- 2007년 12월 11~14일 김장수 국방부장관
- 2007년 12월 11~18일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팔레스타인 원조공여국회의)
- 2008년 5월 25~29일 전광우 금융위원장
- 2008년 6월 30일~7월 2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2008년 7월 18~19일 박준영 전남도지사
- 2008년 7월 23~26일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 2008년 10월 3~6일 김경한 법무부장관
- 2008년 10월 8~10일 박진 통외통위 위원장
- 2008년 11월 10~13일 김형오 국회의장

- 2008년 11월 11~13일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
- 2009년 6월 한승수 국무총리(OECD 총회 참석)
- 2010년 5월 16~18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 2010년 6월 24~26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 2010년 9월 22~23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2010년 10월 3~5일 김양 보훈처장
- 2011년 2월 16~1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2011년 5월 이명박 대통령 공식 방문
- 2011년 5월 김황식 국무총리 (OECD 각료이사회)
- 2011년 9월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리비아 국제회의)
- 2011년 11월 이명박 대통령 (G20 정상회의)
- 2012년 3월 김황식 국무총리 (마르세이유 물포럼)
- 2013년 5월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 2013년 6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공식 방문
- 2014년 1월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 2014년 6월 정세균 의원친선협회장
- 2015년 3월 황교안 법무부장관
- 2015년 5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2015년 7월 윤병세 외교부장관
- 2015년 9월 16~20일 황교안 국무총리 공식 방문
- 2015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COP21 기후변화회의)
- 2015년 12월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COP21)
- 2015년 12월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COP21)
- 2016년 6월 박근혜 대통령 국민방문
- 2016년 6월 한민구 국방부장관
- 2016년 8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2017년 10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 2017년 11월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
- 2018년 3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2018년 3월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2) 방한

- 1998년 2월 5~7일 Cambacères 총리 특사
- 1998년 2월 24~26일 Mauroy 前 총리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 1998년 3월 8~10일 Sautter 예산담당 국무장관
- 1998년 4월 Durieux 국방장관 특사
- 1998년 9월 Pierre Joxe 회계감사원장
- 1999년 1월 18~19일 Alain Richard 국방장관
- 1999년 6월 8~12일 Jacques Dondoux 대외무역담당장관
- 2000년 10월 19~21일 Jacques Chirac 대통령 (ASEM 정상회의)
- 2001년 10월 15~16일 Alain Richard 국방부장관
- 2002년 11월 11~12일 Renaud Muselier 외무담당 국무장관 (제2차 민주주의공동체회의 참석)
- 2002년 11월 Franéis Loos 대외통상장관
- 2003년 1월 10~11일 Dominique de Villepin 외교장관
- 2003년 2월 23~27일 André Santini 하원 한·불 의원친선협회장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 2003년 5월 19~24일 Hamlaoui Mekachera 향군성 장관
- 2004년 1월 19~20일 Claudie Haigneré 연구·신기술부장관
- 2004년 3월 29~30일 Nicole Fontaine 산업장관
- 2005년 4월 Loos 통상장관
- 2006년 10월 Renaud Donnedieu de Vabres 문화부장관
- 2007년 3월 16~18일 Michèle Alliot-Marie 국방장관

- 2008년 2월 22~23일 Philippe Séguin 감사원장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 2008년 6월 15~18일 Anne-Marie Idrac 통상장관 (프랑스경제사절단)
- 2008년 12월 9~11일 Bockel 보훈담당 국무장관
- 2008년 12월 8~11일 Beaudouin 하원 불·한 의원친선협회 회장
- 2009년 10월 6~11일 Jack Lang 대통령 특사
- 2009년 10월 9~11일 Anne-Marie Idrac 통상장관
- 2010년 3월 19~20일 Bernard Kouchner 외교장관
- 2010년 5월 François Beyrou MoDem 총재
- 2010년 11월 Hubert Védrine 前 외교부장관
- 2010년 11월 Nicolas Sarkozy 대통령 (G20 정상회의)
- 2011년 10월 François Fillon 총리
- 2012년 3월 François Fillon 총리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 2013년 2월 Genevieve Fioraso 고등교육연구부장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 2013년 3월 Fleur Pellerin 중소기업·디지털·혁신담당 장관
- 2013년 7월 Jean-Marc Ayrault 총리
- 2013년 10월 Garot 농식품부장관
- 2014년 4월 Bel 상원의장
- 2014년 9월 Debré 헌법위원회 위원장
- 2014년 11월 Macron 경제산업디지털장관
- 2015년 10월 leur Pellerin 문화통신부장관
- 2015년 11월 François Hollande 대통령 국민방한
- 2016년 3월 Jean-Marc Ayrault 외교·국제개발부장관
- 2016년 5월 Jean-Vincent Palcé 국가개혁국무장관
- 2016년 11월 Jean-Vincent Palcé 국가개혁국무장관
- 2017년 3월 Jean-Vincent Palcé 국가개혁국무장관

- 2017년 9월 Benjamin Griveaux 경제재정국무장관
- 2018년 2월 Jean-Yves Le Drian 외교부장관 (평창올림픽 개막식)
- 2018년 2월 Laura Flessel 스포츠장관 (평창올림픽 개막식)
- 2018년 3월 Laura Flessel 스포츠장관 (평창패럴림픽 개막식)
- 2018년 3월 Sophie Cluzel 장애인담당국무장관 (평창올림픽 폐막식)

라. 친선단체 현황

1) 불·한 의원친선협회

가) 프랑스 하원 내 불·한 의원친선협회

- 창립일 : 1971년 5월 18일
- 회원수 : 27명
- 회 장 : 요하킴 손 포르제(Joachim Son-Forget, 전진하는 공화국당)

나) 프랑스 상원 내 불·한 의원친선협회

- 창립일 : 1976년 12월 27일
- 회원수 : 16명
- 회 장 : 카트린느 뒤마(Catherine Dumas, 공화당)

2) 한·불 의원친선협회

- 회 장 : 양승조(더불어민주당)
- 부회장 : 성일중(자유한국당), 결원(바른미래당)
- 이 사 : 남인순·문화상(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승희(자유한국당), 최도자(바른미래당)

3) 한국전 참전용사회

- 창립일 : 1954년 11월 6일
- 회원수 : 약 350명
- 회 장 : 파트릭 보두앙(Patrick Beaudouin)

마. 한·불 전략대화 개최 현황

- 1차(2016.3.24) 서울(Ayrault 외교·국제개발부장관 방한)
- 2차(2017.10.23) 파리(강경화 외교부장관 방불)

바. 정책협의회 개최 현황

- 1차(1985.11.8) 파리
- 2차(1987.3.10~11) 서울
- 3차(1991.9.4) 서울(Scheer 외무차관 방한)
- 4차(1992.5.26) 파리(노창희 차관 방불)
- 5차(1993.3.15) 서울(Boidevaix 차관 방한)
- 6차(1995.12.) 파리(이시영 외무차관 방불)
- 7차(1997.4.16) 서울(Dufourcq 외무차관 방한)
- 8차(1999.6.7) 파리(선준영 외교차관 방불)
- 9차(2000.6.) 서울(Hennekine 외무차관 방한)
- 10차(2004.6.2) 파리(최영진 외교차관 방불)
- 11차(2008.5.30) 파리(권종락 외교차관 방불)

사. 한·불 포럼 개최 현황

- 1차(1995.11.23~24) 서울
- 2차(1997.11.23~24) 파리
- 3차(1998.6.25~26) 서울
- 4차(2000.3.16~17) 파리
- 5차(2002.3.25~26) 서울
- 6차(2005.6.27~28) 파리
- 7차(2008.1.8~9) 서울
- 8차(2009.5.10~13) 파리

- 9차(2010.9.6~8) 서울
- 10차(2013.9.12~13) 파리
- 11차(2014.10.16~17) 서울
- 12차(2015.6.25~26) 파리

3 경제 관계

가. 교역 현황

- 2017년 對프랑스 수출은 29억 7,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0.5% 증가하였으며, 對프랑스 수입은 57억 4,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7% 감소
 - 최근 3년간 對프랑스 수출액은 26.4억 달러(2014) → 25.8억 달러(2015) → 24.7억 달러(2016)으로 지속 하락 추세였으나, 2017년에는 전년대비 20% 증가하여 유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한·불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 출	2,598	3,487	2,639	2,581	2,468	2,994
수 입	4,924	6,012	6,823	6,157	5,843	5,745
수 지	- 2,326	- 2,525	- 4,184	- 3,576	- 3,375	- 2,751
교역액	7,522	9,499	9,462	8,738	8,311	8,739

출처 : 한국무역협회(2018.8월)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5대 수출 품목은 승용차(7.5억 달러), 배터리(2.9억 달러), 석유제품(1.7억 달러), 자동차부품(1.2억 달러), 합성수지(1억 달러)
 - 특히, 승용차(90% 증가)와 배터리(57% 증가) 수출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출 회복에 기여
 - ※ 승용차의 경우, 2017년도에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등 신규 모델(한국 내 생산 차량)이 프랑스에 출시된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
- 수입 측면에서는 화장품(4억 달러), 가방(3억 달러), 주얼리(1.3억 달러) 등 패션 소비재 수입이 연평균 10% 내외의 증가세 지속
 - 원동기(2.1억 달러, 74% 증가), 의약품(3.7억 달러, 30% 증가) 등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수입 증가

다. 수출입 통계 외 주요 품목 수출 실적

- 삼성전자의 경우 2017년 프랑스 시장 매출액이 약 34억 달러로 전년대비 5%의 견조한 성장을 지속
 - 스마트폰(매출 규모 약 10억 달러)은 프랑스 내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M/S 1위를 달성
 - ※ 삼성전자의 매출액 중 대부분이 베트남 등 역외 생산기지에서 수출된 제품으로 수출입 통계에는 대부분 미반영
- 승용차 시장에서는 기아차가 3만 7,500대 판매(약 9.4억 달러), 현대차가 약 3만 대(약 7.5억 달러)로 총 17억 달러의 매출액 달성
 - ※ 승용차 부문 수출 통계는 약 7.5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나, 현대·기아 양사의 매출액(약 17억 달러) 중 약 10억 달러가 체코 및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추정

라. 주력 수출 시장 전망

- TV·세탁기 등 가전시장의 경우, 주력 시장인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시장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화장품의 경우 2017년 4,600만 달러(40% 증가)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여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지속(2016년에는 전년대비 130%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 및 K-beauty 붐에 따라 지속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프랑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수출 기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마. 투자 현황

1) 프랑스의 對한국 투자

(단위 : 건, 천 달러)

구분/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신고 건수	36	29	34	34	44	41
신고 금액	220,931	529,928	207,675	102,952	193,540	279,780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통계

2) 한국의 對프랑스 투자

(단위 : 건, 천 달러)

구분/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신고 건수	43	86	64	59	63	122
신고 금액	50,806	91,206	72,128	29,419	296,118	194,740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 통계

4 협정 체결 현황

조약명	서명일	발효일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상표에 관한 각서 교환	1961-02-01	1961-02-01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관세에 관한 각서 교환	1963-03-12	1963-04-01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특허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1963-04-26	1963-04-26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	1967-02-11	1967-04-12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65-12-28	1968-05-08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한·불 기술초급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1971-12-23	1972-12-29

조약명	서명일	발효일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1974-06-07	1974-07-16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각서 교환	1974-10-19	1974-10-19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편무협정)	1975-01-22	1975-01-22
국제원자력기구-대한민국 정부 및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1975-09-22	1975-09-22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프랑스의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소급 적용을 위한 협정	1976-04-06	1976-04-06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쌍무협정)	1977-12-28	1979-02-01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협정	1980-09-19	1980-12-19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부표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1981-01-15	1981-01-15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1979-06-19	1981-02-01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81-04-04	1981-04-04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1981-04-04	1981-04-04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1981-04-04	1981-12-18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 연구원 사업에 관한 의정서	1987-11-27	1987-11-27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부표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1989-03-30	1989-03-30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면제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1989-09-22	1989-10-01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의 종료	1991-03-20	1991-03-20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91-04-09	1992-03-01
대한민국 상공자원부와 프랑스공화국 산업체신대외무역부 간의 산업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약정	1993-09-13	1993-09-13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1995-03-02	1997-03-08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 및 군비 협력 분야에서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2000-03-06	2000-07-20

조약명	서명일	발효일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로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2006-10-27	2007-04-01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로공화국 정부 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2004-12-06	2007-06-01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로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2006-06-06	2008-06-01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로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 각서	2008-10-09	2008-10-09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로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	2008-10-20	2009-01-01

5 교민 현황

가. 한인 이주 역사

- 1886년 6월. 한·불 간 우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1887년 발효된 이후, 일단의 유학생이 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기록에 남아 있는 최초의 유학생은 홍종우(김육균 암살자, 1890.12월~1893.7월 체류)
- 해방 이후 신부 등을 중심으로 유학이 본격화되면서 재불 한인 학생회가 구성(1963) 되었다가 재불 한인회로 확대 개편(1968)
- 1975년 대한항공의 서울~파리 노선이 개통되면서 우리 기업의 현지 지사 설립이 본격화되고 유학생 등의 이주가 급속히 증가

나. 재불 한인 현황

- 총수 : 약 16,000명
- 장기체류증을 소지한 교민들은 대부분 요식업·여행업, 소규모 무역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유학생의 경우 정규 대학 이외에 예능계 학교나 어학연수 기관에서 학업
- 프랑스 내 한국계 입양인 관련, 1995년 입양인 단체인 한국의뿌리협회가 결성되었으며, 회원수는 300여 명

- 영주권자 및 외국 국적 동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요 사유는 국제결혼 및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출산 증가, 동포 2세의 현지 국적 취득 등
- 2015년 기존 재불 한인회가 '프랑스 한인회'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제34대 프랑스 한인회를 비롯한 9개 지방 한인회 운영 중

다. 재불 한인 단체

단체명	창립년도	회원수
프랑스 한인회 (9개 지방 한인회)	1968	-
파리한글학교	1974	250여 명(학생)
재불여성한인회	2007	70여 명
한·불 상공회의소	2005	50여 개사
재불한인무역인협회	1995	30여 개사
재불과학기술자협회	1976	270여 명
소나무작가협회	1991	54명
재불청년작가협회	1983	30명
파리 한식당 협의체	2012	100여 명
한국의뿌리협회	1995	400여 명
재불기독교회협의회	1989	14개
외인부대동우회	2005	100여 명
재불한인청솔회	2009	20명
재향군인회 프랑가지회	2011	50여 명

6 기타 재벌 주요 기관

- 국영기업 : 한국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철도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감독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민간상사 : 대한항공, 삼성전자, LG 전자, LG 실트론, LF(LG패션), 삼성 프랑스,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태평양화학,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현대중합상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해운, 현대상선, 현대자동차, 외환은행, 한국전력

7 명예영사 현황

- 주리용 명예영사
 - 명예영사 : 브뤼노 알르네 드 리베몽(M. Bruno Allenet de Ribemont)
 - 임명일자 : 2005년 5월 26일
- 주파페트 명예영사(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명예영사 : 티메리 보드리 아르(Mme Timeri Baudry Hart)
 - 임명일자 : 2014년 1월 28일
- 주낭트 명예영사
 - 명예영사 : 다니엘 라질리에르-마레샬(Mme Danielle Largillière-Maréchal)
 - 임명일자 : 2009년 1월 22일
- 주마르세이유 명예영사
 - 명예영사 : 알렉산드르 미니에르(M. Alexandre Minière)
 - 임명일자 : 2016년 8월 11일
- 주루앙 명예영사
 - 명예영사 : 도미니크 드잭스(M. Dominique DESAIX)
 - 임명일자 : 2016년 8월 11일

8 군사 교류

가. 양국 간 정례 군사협력회의(매년 개최)

- 한·불 군사교류회의 : 2013년 12월(파리), 2014년 12월(서울), 2015년 10월(파리), 2016년 10월(서울), 2018년 1월(파리)
- 한·불 정보교류회의 : 2012년 11월(파리), 2015년 5월(서울), 2017년 6월(파리), 2018년 4월(서울)
- 한·불 전략대화 : 2017년 3월(파리)

나. 군 고위 인사 교류

- 2011년 6월 공군참모총장 방불
- 2012년 7월 국방차관 방불
- 2013년 7월 프랑스 보훈담당장관 방한
- 2014년 4월 합동군사대학 총장 방불
- 2014년 6월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 방불
- 2014년 11월 육군 인사사령관 방불
- 2014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방불
- 2014년 12월 프랑스 합참 국제협력국장 방한
- 2015년 2월 해군 교육사령관 방불
- 2015년 3월 국방운영개혁추진관 방불
- 2015년 5월 합참차장 방불
- 2015년 5월 프랑스 태평양사령관 방한
- 2015년 6월 육군 헌병실장 방불
- 2015년 6월 방사청장 방불
- 2015년 10월 프랑스 공군 국제협력실장 방한

- 2016년 6월 국방장관 방불
- 2016년 6월 육사교장 방불
- 2016년 9월 프랑스 DGRIS 본부장 특별고문 방한
- 2016년 9월 기무사령부 참모장 방불
- 2016년 10월 프랑스 항작사령관 방한
- 2017년 5월 국방부 조사본부장 방불
- 2017년 6월 정보본부 해외부장 방불
- 2017년 6월 공군 참모차장 방불
- 2017년 9월 프랑스 DGRIS 본부장 특별고문 방한
- 2017년 12월 프랑스 IHIDEN 원장 방한
- 2018년 5월 국방대 총장 방불
- 2018년 6월 육군참모총장 방불
- 2018년 6월 방사청장 방불
- 2018년 7월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방불

다. 군 유학생 파견

- 한국 → 프랑스 파견 : 전쟁대(영관 장교 1명), 육군 고군반(위관 장교 1명), 육사 생도 3명, 해사 생도 1명 위탁교육
- 프랑스 → 한국 파견 : 공사 생도 2명 및 육사 생도 2~3명 단기 연수, 육군대학 1명 위탁교육(비정기)

라. 기타 군사교류 활동

- 양국 국방대학원생 교류 : 2014년 5월(파리), 2015년 5월(서울), 2017년 10월(파리)
- 양국 순항함대 교류 : 2013년 9월(셀부르), 2015년 5월(부산), 2015년 10월(셀부르), 2016년 6월(부산), 2017년 6월(부산), 2018년 2월(인천)

마. 방산 협력

- 연례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개최 : 2015년 9월(서울), 2016년 6월(파리), 2017년 10월(서울), 2018년 9월(서울)
- 방산전시회 참석
 - 지상무기전시회 : 2012년 6월(파리), 2014년 6월(파리), 2016년 6월(파리), 2018년 6월(파리)
 - 해상무기전시회 : 2012년 10월(파리), 2014년 10월(파리), 2016년 10월(파리)
 - 항공무기전시회 : 2015년 10월(파리), 2015년 10월(서울), 2017년 6월(파리), 2017년 10월(서울)
- 양국 협력사업
 - 소형무장 공격헬기(LAH) 사업 : 2015년 5월 계약 체결
 - A330 MRTT 공중급유기 사업 : 2015년 6월 계약 체결

PART 9

북한과의 관계

1. 개요
2. 공간 현황
3. 교류 현황
4. 프랑스의 대북 지원



1 개요

- 프랑스는 EU 국가 중 에스토니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북한과 미수교국
- 과거 프랑스 사회당 및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간의 이념적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정당 차원에서의 교류 및 문화·교육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나마 교류가 추진
 - 1984년 12월 프랑스는 북한대표부의 명칭을 일반대표부로 격상
- 단, 프랑스 정부는 1986년 4월 더 이상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1992년부터 사회당은 북한 노동당을 전당대회에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
- 1988년 7월 7일 대통령 선언에 따른 대북한 대화 추진 노력 등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면서, 프랑스의 대북 관계 개선은 북한의 기본적인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대화의 의미있는 진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EU 및 한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단, 인사교류, 문화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등은 지속
- 2009년 10~11월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크 랑 하원의원(전 문화부장관)을 대북정책 특사로 임명, 동 특사는 우리 정부를 비롯한 6자회담 회원국들과 대북 정책에 대한 협의 진행
- 2011년 10월 프랑스 정부는 대북 인도지원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해 '駐북한 협력 사무소' 개설
- 프랑스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 견지
- 특히, 최근 북한의 각종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UN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 중이며 EU 차원의 대북제재안 도출 노력도 적극 경주

2 공관 현황

가. 프랑스의 대북 업무 창구

- 1968년 5월 주평양 민간무역사무소를 설치하였으나 1978년 8월 철수
- 2005년 대북 업무가 주중대사관에서 주한대사관으로 이관
- 2011년 10월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주북한 협력사무소’ 개설

나. 프랑스 주재 북한대표부

- 일반 대표부
 - 1968년 9월 25일 민간무역대표부 설치
 - 1976년 6월 24일 민간무역대표부를 통상대표부로 격상
 - 1984년 12월 11일 통상대표부를 일반대표부로 격상
 - 주재 인원 : 김용일(2014.6월~) 대표 등 4~5명 주재
- 유네스코 대표부
 - 1976년 11월 설치, 1991년 2월 이후 상기 일반대표부로 통합
 - 유네스코 대사는 김용일 일반대표부 대표가 겸직

3 교류 현황

가. 교역·투자

- 교역 (북한 기준, 2017, GTA)
 - 수출 : 28만 달러
 - 수입 : 199만 달러

- 투자
 - 1987년 양국 호텔 합작사업이 북한의 재정난으로 중단된 이후 프랑스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 실례 진무

나. 문화교류

- 프랑스 외무부 부테(Boutet) 문화총국장, 1984년 10월 평양 방문시 프·북한 문화교류 합의의사록 서명
- 북한 국제여행사 대표단, 방북 관광객 유치 교섭차 방불 (2001.3월)
- 2000년 이래 프랑스어, 행정, 건축 분야 북한인 방불 연수가 지속 추진되다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교류가 크게 위축
- 2011년 10월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문화협력을 위한 주북 프랑스 협력사무소 개설 (초대 소장 : Olivier Vaysset)
- 2012년 3월 라디오 프랑스(Radio France) 초청으로 파리에서 은하수 관현악단-라디오 프랑스 협연

4 프랑스의 대북 지원

- 프랑스는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정부 간 협력사업은 할 수 없으며, 다만 인적자원 교육사업, NGO를 통한 인도적 지원 등은 허용
 - 어학·건축 등 분야에서 북한 연수생 초청 교육 사업이 있으며, 2006년 2월 이래 김일성대학에 프랑스어 교사 1명을 장기 파견 중
- 프랑스 NGO의 대북 인도 지원
 - UN 인도지원업무조정국(OCHA)을 통한 지원과 EU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재정 기여
 - Première Urgence Internationale, Triangle Génération Humanitaire 등 2개 주재국 NGO를 통한 의료교육시설 개선, 의약품 지원, 식수 개선, 유아 대상 식량 지원

PART 10

참고자료

1. 주요 인사 인적사항
2. 한·불 간 방문교류 현황



1 주요 인사 인적사항

가. 대통령

성명	에마뉘엘 마크롱 (Emmanuel Macron)	
출생	1977년 12월 21일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 10대학 철학과, 파리정치대학(IEP) 졸업 • 국립행정학교(ENA) (2004년 졸업)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5월 14일 제5공화국 8대 대통령 취임 • 2016년 4월 '전진(En Marche!)' 정당 창립 • 2014년~2016년 경제산업디지털장관 • 2012년~2014년 대통령실 사무차장(경제보좌관) • 2007년~2008년 경제자문기구 '성장자유화위원회' 위원 • 2004년~2008년 재무감독국(IGF) 금융조사관 	
가족사항	부인(자녀 無) ※ 배우자는 전 남편 사이에 1남2녀	
한국과의 관계	2014년 11월 방한 /한·불 경제장관대화 개최	

나. 총리

성 명	에두아르 필립 (Edouard Philippe)	
출 생	1970년 11월 28일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정치대학(IEP) 졸업 • 국립행정학교(ENA) (1997년 졸업)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5월~ 국무총리 • 2012년~2017년 하원의원(지역구: Seine-Maritime) • 2010년~2017년 Le Havre 시장 및 도시공동체 대표 • 2008년~2012년 Seine-Maritime 지역의회 의원 • 2007년~2010년 Areva 공공사업국장 • 2001년~2010년 Le Havre 부시장 • 2004년~2008년 Haute-Normandie 지역의회 의원 • 2005년~2007년 Devevoise et Plimpton 변호사 • 2002년~2004년 UMP(前 공화당) 사무총장 • 1997년~2002년 Conseil d'Etat(국가평의회) 심의관, 소원(訴願) 심사관 	
가족사항	부인, 2남1녀	

다. 유럽·외교부 장관

성 명	장-이브 르 드리앙 (Jean-Yves Le Drian)	
출 생	1947년 6월 30일	
학 력	렌(Rennes) 대학 졸업(역사 전공)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5월 17일 유럽·외교부 장관 취임 • 2012년~2017년 국방장관 • 2015년~2017년 브르타뉴 지역의장 • 2004년~2012년 브르타뉴 지역의장 • 1997년~2007년 2선 하원의원(지역구 : Morbihan) • 1991년~1992년 해양담당 국무장관 • 1981년~1998년 로리앙(Lorient) 시장 • 1978년~1991년 3선 하원의원(지역구 : Morbihan) • 1974년 사회당(PS) 입당 • 1971년 브르타뉴민주연합(UDB) 가입 • 1967년 프랑스 전국학생연합(UNEF) 가입 	
가족사항	마리아 바딜로(Maria Vadillo : 브르타뉴 지역의회 부의장 역임)와 2013년 재혼, 1남	

라. 상원의장

성 명	제라르 라르셰 (Gérard Larcher)	
출 생	1949년 9월 14일	
학 력	리옹(Lyon) 수의학교 박사	
당 적	공화당(Les Républicains)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공화당 정치위원장 • 2014년 10월~ 상원의장(2017년 10월 2일 상원 의장 재선) • 2011년~ 공화당(舊 UMP) 정치고문 • 2008년~2011년 상원의장 • 2007년~현재 상원의원(지역구 : Yvelines) • 2005년~2007년 고용·노동·청년취업담당 장관 • 2004년~2005년 노동담당 장관 • 2001년~2004년 상원 경제위원장 • 1997년~2001년 상원부의장 • 1986년~2004년 상원 의원(지역구 : Yvelines) • 1985년~1989년 일드프랑스(Ile-de-France) 광역의회 의원 • 1983년~2014년 랑부예(Rambouillet) 시장 	
가족사항	• 부인과 자녀 3명	

라. 하원의장

성명	리샤르 페랑 (Richard Ferrand)	
출생	1962년 7월 1일	
학력	파리5대학 독일어·법학 전공	
당적	전진하는 공화국(La République en Marche)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현재 하원의장 • 2017년~2018년 하원 전진하는 공화국(LREM) 교섭단체 원내대표 • 2017년 국토균형부장관 • 2016년~2017년 '전진(En Marche!)' 사무총장 • 2012년~현재 하원의원 (2017 재선, 선거구 : Finistère) • 2010년~2017년 브르타뉴 레종(광역) 의회 의원 • 2004년~2011년 피니스테르(Finistère) 데파르트망(중역) 의회 부의장 • 1993년~2012년 브르타뉴 상호보험조합 대표 • 1991년~1993년 Kofi 사회·통합담당 국무장관실 특별보좌관 • 1989년 JBA 공인회계사 • 1981년~1990년 기자 	
가족사항	• 부인과 자녀 3명	

2 한·불 간 방문교류 현황

(한국 기준, 단위 : 명)

연도	출국	입국	총계
1995	18,686	22,295	40,981
1996	18,151	24,651	42,802
1997	17,115	26,673	43,788
1998	18,077	25,712	43,789
1999	16,709	29,424	46,133
2000	19,886	33,991	53,877
2001	19,265	35,598	54,863
2002	18,315	41,207	59,522
2003	18,576	35,561	54,137
2004	21,131	41,229	62,360
2005	24,800	44,440	69,240
2006	27,107	47,111	74,218
2007	33,144	52,842	85,986
2008	30,960	59,789	90,749
2009	30,646	61,426	92,072
2010	29,973	66,192	96,165
2011	31,153	69,459	100,612
2012	29,642	71,140	100,782
2013	30,457	75,947	106,404
2014	31,941	80,518	112,459
2015	30,608	83,832	114,440
2016	29,636	91,562	121,198
2017	-	92,347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2006년 7월부터 국민의 출국신고서 제출이 생략되어 2006년부터 우리 국민의 프랑스 방문 통계는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통계 중 '국민 해외 관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 및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국가별 관광 통계 중 '국민해외여행-출국자수' 활용)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013-14

